

1993년 2월 1일 발행·제4권 제2호·1990년 11월 14일 등록·라-4859호 발행처/국민경제교육연구소 135-270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51-12 전화 (02) 561-1400 1991년 8월 30일 제3종 우편물 (나급)·월간

정책담당자가 만드는 경제전문지

나라경제

1993 . 2



특집/93년도 경제운용방향

이달의 초점/금융의 효율화와 선진화를 위한
금융제도의 개편

경제정책해설/대일무역역조 개선을 위한
관세정책

논단/현 경기국면에 대한 평가와 대응과제



편집/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발행/국민경제교육연구소

重農學派의 創始者

프랑소와 케네

重農學派의 창시자인 프랑소와 케네(François Quesnay : 1694~1774)는 1694년 프랑스의 베르사이유 근교에서 소지주의 아들로 태어났다. 케네는 정규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의학공부를 독학으로 하여 외과의사가 되었으며, 혈액과 체온에 관한 책을 쓰기도 하였다. 1748년에는 루이 15세와 그 부인인 퐁파두르의 侍醫가 되었고, 1755년에는 경작지를 구입하여 관리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經濟著述을 시작하게 되었다.

케네는 1756년에 경제에 관한 최초의 논문인 ‘농업경작인’을 백과사전에 발표하였다. 이어서 1758년에 ‘경제표(Tableau Economique)’를 발표하면서 케네는 경제학자(Economiste) 또는 경제철학자(Philosophe Economiste)라고 불리게 되었다. 뒤퐁 드 느무르(Dupont de Nemours)는 1767년에 케네를 중농학과(Physiocrat)라고 최초로 이름붙였지만 이 용어가 통용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중반 이후부터이다.

Physiocrat [physio(자연)+crat(지배) : 자연지배]를 중농학과라고 부르는 것은 본래 취지와는 다른 것이지만 중농학과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기에 여기서는 그냥 사용하기로 한다.〈필자註〉

최초로 理論的 경제모델을 構築

케네가 자신의 경제이론을 구상하던 시기는 '7년 전쟁'(1756~1763)을 치르던 기간으로 프랑스는 심각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 경제학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국민소득의 증진이었다. 케네 역시 국민소득 증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지만, 케네가 실제로 기여한 부분은 봐질베르(Boisguilbert), 깡티용(Cantillon)과 같은 傳統經濟學의 연장 속에서 경제현상에 대한 이론적 경제모델의 구축이었다.

봐질베르나 깡티용은 지출·노동·소득·소비 등을 순환적 흐름으로 파악하였으며 경제를 상호연관된 시장들의 체계로 이해하고 있었다. 케네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경제를 인간의 신체와 같은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조직체로 보았으며, 이를 도식화시킨 것이 경제표이다. 케네가 경제현상을 도식화시킨 배경에는 당시의 自然觀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말브랑슈(Malebranche)로 대표되던 당시의 인식론적 입장에서는 자연이란 신이 원하는 질서이고, 이 질서는 수학적 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고 보았다. 케네 역시 말브랑슈의 인식론을 토대로 경제질서를 수식화시키려고 한 것이 경제표이다.

케네의 경제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은 국민소득 증대를 위한 資本蓄積의 역할이다. 케네는 일정기금을 말과 소와 같은 농업생산수단에 투자하는 '생산의 우회'가 지주의 소득을 증대시킨다는 것을 알았다. 반면에 공업이나 상업에서는 농업에서와 같은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없다는 성급한 결론을 내린 결과 농업만이 생산적인

고 기타 다른 경제활동은 비생산적이라고 하였다. 아무튼 케네는 농업을 기초로 하는 국가경제에서 國富를 증진시키려면 농업자본을 축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경제의 각부문간 상호의존적인 경제순환과정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통하여 이를 입증하였다.

케네의 경제이론은 후세에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대표적으로 스미스는 케네로부터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개념을 받아들여 이를 제조업에까지 확장해서 사용하였고, 마르크스는 케네의 純生産物概念으로부터 잉여가치분석을 할 수 있었다. 왈라스는 케네의 상호연관된 시장관계로부터 일반균형이론을 도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현대에 와서 레온티에프는 경제표로부터 投入-產出分析을 실용화시킬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케네의 經濟分析은 근대경제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나, 케네의 저작에서 나타나는 성급한 결론과 부분적이지만 모호한 논리전개 등으로 인하여 케네의 저술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읽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광**

박명호·국민경제교육연구소 부연구위원

권두칼럼

경제체질 강화가 관건이다

/ 정영의 · 전 재무부장관, 현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6

특집 93년도 경제운용방향

새해 경제운용의 여건과 과제 /이근경 · 경제기획원	12
통화의 안정적 관리와 금융제도의 개선 /정건용 · 재무부	17
정보산업발전 전략계획 /강군생 · 경제기획원	21
세계 무역환경의 신조류와 93년도 무역정책방향 /김균섭 · 상공부	25
임금 및 노사관계의 안정 /김용달 · 노동부	30
농어촌구조조정의 촉진 /안종운 · 농림수산부	34
주택의 안정적 공급과 부동산투기 억제 /최중수 · 건설부	38
국제경제질서 변화에의 능동적 대응 /하동만 · 경제기획원	43
환경정책의 재정립 /정혁진 · 환경처	47
과학기술의 혁신 /김덕제 · 과학기술처	53

경제정책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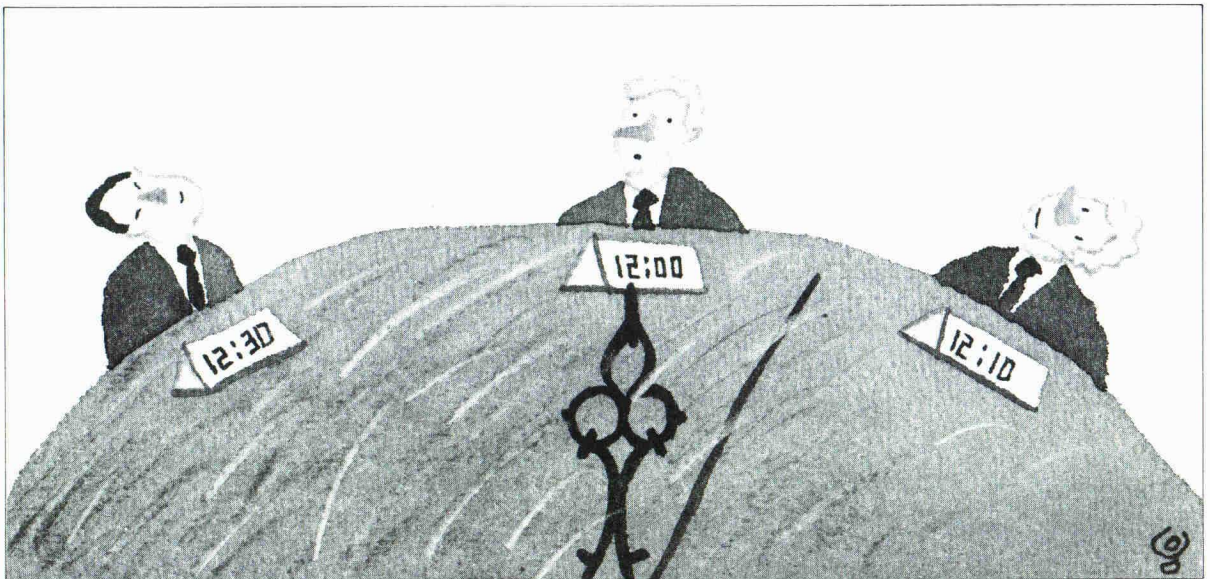
對日 무역역조 개선을 위한 관세정책 /김병기 · 재무부	88
석유의 안정적·경제적 공급을 위한 송유관사업의 추진 /정만원 · 동력자원부	93
제약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신약개발 지원 /김연환 · 보건사회부	97
앞으로 10년간 자동차보유대수 전망 /박영삼 · 교통부	101
엔지니어링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 /노홍길 · 과학기술처	105
93년에 달라지는 노동행정 /이우룡 · 노동부	110

경제정책의 산실을 찾아서 -환경처 대기보전국

‘맑고 깨끗한 대기’를 지키는 환경보전의 참병 /편집실	83
--------------------------------	----

이달의 초점 / 금융의 효율화와 선진화를 위한 금융제도의 개편	
금융자율화가 선결과제 / 장경천 · 중앙대 교수	58
금융의 산업지원 역할 강화해야 / 이용기 · 한국산업은행	62
한국적 특성에 맞는 개편방안 마련해야 / 엄봉성 · 재무부	66
외국인이 본 한국경제	
민족의 역량 시험받고 있는 한국경제 / 노조에 신이치 ·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 국제교류실장	70
제언	
관광, 이제 우리의 관심을 모아야 할 때 / 김세호 · 교통부	73
경제수상	
‘유엔우주통신 워크숍’을 마치고 / 박성득 · 체신부	78
제2세대 환경문제 / 김인환 · 환경처	79
원자력, 정말 위험한가 / 김신중 · 동력자원부	80
교통문제를 푸는 실마리 / 허영선 · 교통부	82
경제동향	
나라안 안정기조 속에 성장활력의 회복이 필요한 때 / 한승희 · 경제기획원	120
나라밖 주요 선진국 통화간 환율 동향과 전망 / 안중조 · 산업연구원	123

해외통신	
독일인의 시간의식 / 허 신 · 경제기획원 / 베를린경제연구소 초청연구원	116
출입기자코너	
‘百年大計’를 생각해야 한다 / 이도선 · 연합통신 기자 / 건설부	113
분류광고의 의미는? / 이강봉 · 서울경제신문 기자 / 보건사회부	114
‘신한국’ 건설은 과학기술의 토대 위에서 / 주태형 · 세계일보 기자 / 과학기술처	115
나라경제 논란	
현 경기국면에 대한 평가와 대응과제 / 좌승희 · 한국개발연구원	127
공정한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한 特殊賣場대책 / 김익만 · 상공부	131
생활경제상담실	
부가가치세 / 조흥희 · 국세청	136
건강한 삶을 위하여	
소화불량 / 홍명호 · 고려대 구로병원 가정의학과장	155
노영하 바둑칼럼	
김옥균과 秀榮	154
경제부처동정 정책일지 · 인사이동 / 편집실	138
경제부처 발간자료 안내 / 편집실	147
나라경제를 읽고	156



경제체질 강화가 關鍵이다

鄭永儀

前 재무부장관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2월이면 역사적인 文民政府가 탄생한다. 새로운 정권을 탄생시킨 선거의 전반적 과정과 내용, 그리고 끝마무리에서 우리 국민들은 매우 성숙된 자세를 보여 주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정치적 성숙과 안정을 바탕으로 하여 경제의 한 차원 높은 도약과 성숙을 도모할 때이다.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었다고들 한다. ‘하면 된다’던 왕성한 의욕이 ‘이런 판에 무엇을 할 수 있나’라는 좌절감으로 변한 오늘의 현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나라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한 튼튼한 경제체질을 이루고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한다. 그 요건이란, 건전한 倫理觀에 입각한 사회기강이 확립된 가운데 첫째로 국민들의 잘 살아보려는 의욕(經濟하려는 의지)이 充溢할 것, 둘째로 企業家精神이 건전하여 창조적 혁신(innovation)을 생명으로 삼을 것, 셋째로 기술과 지식이 끊임없이 축적될 것, 넷째로 근검·절약·저축하는 氣風이 팽배할 것 등이 그것이다.

우리의 경제현실을 점검할 때 과연 위에서 본 여러 가지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가? 이 글을 읽는 독자들

간에 다소의 차이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대체로 부정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경제를 두고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꼭 명심하여야 할 것은 “60년대 이래 우리 경제가 量的으로 엄청나게 성장하였으나 튼튼한 經濟體質을 아직도 제대로 이룩하지는 못했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基礎體力와 체질이 강한 사람만이 장거리를 달릴 수 있고 때로는 감기에 걸리더라도 빨리 회복된다. 마찬가지로 경제도 꾸준히 발전하고 외부 여건의 변화에 쉽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경제체질을 갖고 이를 유지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오늘날 우리 경제의 체질적 脆弱性과 한계는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의 노력 부족에서 야기된 것이기에 우리가 노력만 하면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우리의 無限한 底力を 집결시켜 국가발전의 기적을 다시 한번 창출해야 한다.

경제체질의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특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몇가지 기본적인 것만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政府는 물가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



“

오늘날 우리 경제의 체질적 脆弱性과 한계는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의 노력 부족에서 야기된 것이기에 우리가 노력만 하면 그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있다. 우리의 無限한 底力을 집결시켜 국가발전의 기적을 다시 한번 창출해야 한다.

”

로 삼아야 한다. 건전한 기업가정신의 高揚이나 技術革新, 근검·절약·저축하는 노력은 물가안정의 바탕 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물가안정의 着根이야말로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기본과제이다. 거품경제의 요소가 배어 있는 경제에서 구성원은 생산성의 향상이나 효율성의 추구보다는 貨幣的 幻像(money illusion)에 몰입하게 마련이다.

둘째, 教育改革이 추진되어야 한다. 교육개혁은 人力開發이라는 측면과 사회적 기강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훈련되지 않은 人力은 자원이 아니고 부담이며 오늘날과 같이 기술이 급변하는 여건에서는 끊임없는 교육과 훈련이 필수적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사회병폐와 사회기강의 해이는 가치관의 전도와 도덕성의 상실에서 기인되는 것이다.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뿐만 아니고 가정교육·사회교육을 포함한 전반적 의미의 교육개혁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의 經濟運用方式이 바뀌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量的 목표의 설정과 그 달성을 위한 지원위주의 운용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의 創意力이 최대한으로 발휘되도록 경제를 운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꼭 해야 할 일만을 가려서 하고 금융 및 기업의 自律의 폭을 확대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능 변화에 맞도

록 정부조직도 조정하여 정부의 비효율과 낭비를 덜어내야 한다.

經濟體質의 개선과 강화에는 시간이 걸리게 마련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은 답답하게 느낄 것이 분명하다. 또한 고통도 따르고 일부 계층의 반발도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경제체질의 강화는 절대절명의 과제이고 지금이야말로 체질개선의 最適時期이다.

正統性을 부여받은 새 정부는 국민의 성원과 기대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제2의 도약을 성취하기 위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제의 체질강화를 도모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때 『나라경제』를 읽고 만드는 ‘우리’는 우리 경제체질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뚜렷한 목표의식 아래 헌신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은 底力이 있는 민족이다. 우리가 처한 대내외적 여건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는 경제체질을 강화함으로써 난국을 극복해야 하며,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문제의 해결에는 奇蹟도 없지만 不可能도 없다. 나라경제

12 · 나라경제

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지역경제 블록화 현상이 확산되어 우리의 대외교역환경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EC는 금년 1월부터 역내 시장통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북미 3국간의 자유무역협정(NAFTA)도 금년중 각국의 비준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중남미·동남아국가 등에까지 지역주의 현상이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對內興件, 불안요인 잠복

對內的으로는 새 政府가 출범함에 따라 업계의 경기진작에 대한 기대와 물가안정 및 복지향상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상충되는 거대가 혼재되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實物經濟面에서 보면, 개방·국제화에 따른 국내외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 기술개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기업의 설비투자 전망이 불투명하다.

물가와 국제수지면에서도 불안요인이 잠복해 있다. 물가면에서는 농산물가격이 해거리 현상에 따라 상대적으로 불안요인이 있고, 국제수지면에서도 수출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반면, 수입은 국내수요의 회복과 관세를 인하 효과 등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큰 폭의 개선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내외 여건을 종합해 보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고 대내적으로도 각계의 다양한 욕구와 구조적 요인 등으로 경쟁력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각 경제주체의 합심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93년 經濟運用, 경쟁력 강화에 역점 뒤

지난해까지 인플레이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였다면 이제는 그동안 다져온 안정화를 경쟁력강화와 경제활력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올해의

올해의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은 巨視經濟 安定의 틀을 유지하면서 경쟁력 강화와 경쟁력의 원천을 배양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특히 제도와 관행·의식의 개혁을 통하여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기업의 투자욕을 되살리기 위한 微視的인 정책노력을 강화하는 데 두어 나갈 것이다.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은 巨視經濟 安定의 틀을 유지하면서 競爭力 강화와 경쟁력의 원천을 배양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특히 제도와 관행·의식의 개혁을 통하여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기업의 투자욕을 되살리기 위한 微視的인 정책노력을 강화하는 데 두어 나갈 것이다.

경제안정기반의 확고한 정착

무엇보다 物價-金利-貨金의 하향안정을 바탕으로 경쟁력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경제안정기반을 확고히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경제안정을 위해서는 비용측면에서 아직 임금상승률이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總需要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며, 따라서 總通貨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금년 총통화 증가율은 작년보다 낮은 13~17%로 운용하되, 中央銀行 책임하에 자금수급의 계절적인 불균형을 시정하고 금리의 하향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신축성있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개방에 대처하고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율화를 본격 추진해 나갈 것이다. 금융자율화의 핵심요소인 金利自由化를 위해 모든 일반 여신금리와 2년 이상 장기 수신금리를 자유화하는 '2단계 금리자유화'를 가급적 조기에 단행할 것이다.

아울러 자유화된 금리의 하향안정에 주력하여 通貨債 발행금리와 韓銀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금리를 자유화하고, 자유화된 금리의 동향에 맞추어 韓銀의 재할금리를 신축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다. 또한 호전되는 증시여건에 따라 유상증자 등 직접금융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외자금의 이용기회도 넓혀 나감으로써 기업의 금융자금에 대한 수요증가요인을 흡수해 나갈 것이다.

한편, 금년에는 국제수지가 개선되고 금융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해외자본 유입이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80년대 후반 국제수지 흑자기에 통화관리에 실패했던 경험을 거울삼아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지난해 總額賃金制의 실시로 780개 대상업체의 임금인상률은 5% 이하로 안정되었으나 全産業의 임금상승률은 16%대로 비교적 높은 상태를 지속하여 경쟁력 향상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의 임금인상은 개별 기업 단위로는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되 전산업의 평균 명목임금상승률이 GNP 기준 생산성 증가범위(실질GNP 증가율+물가상승률-취업자 증가율=9%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유도하여 안정기조 정착과 경쟁력 향상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금년에도 부동산가격이 하향안정될 수 있도록 각종 투기억제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을 현실화하고 주택전산망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여 가수요를 억제하면서, 아울러 投機豫告指標에 의거 투기발생을 사전에 철저히 방지해 나갈 것이다.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활력회복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金利·賃金 등 요소가격의 안정과 국민 각 계층의 일하는 분위기를 바탕으로 기업의 기술개발 및 경영혁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근로자 모두의 꾸준한 자기혁신 노력이 요청되며, 정부로서는 경쟁력의 원천인 설비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투자의를 되살리기 위해 제도적 환경조성 등 미시적인 정책노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어 나갈 것이다.

첫째,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총설비자금 공급규모를 최대한 확대하고 세제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국산기계 구입자금·기술개발자금 등 주요 정책자금을 확대 공급하는 한편 外貨貸出은 연간한도제를 폐지하고 융자대상도 제조업의 모든 시설재와 전원개발용 시설재 등으로까지 확대할 것이다. 세제면에서도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적용대상을 모든 제조업의 국산 기계장치 투자로 확대하여 투자유인이 확대되도록 할 것이다.

둘째, 날로 높아지고 있는 선진국의 기술보호 장벽과 국제경쟁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체 기술개발 능력을 확충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다. 정부가 수립하여 추진중인 11개 핵심 선도기술 개발사업·생산기술 개발사업 등 일련의 기술개발계획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한편, 민간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종합 기술금융(株)의 자금지원 규모를 지난해 1,800 억원에서 금년에는 4,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다.

또한 자체기술개발 노력과 함께 선진기술의 국내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환경을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다. 현재 외국인 투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토지취득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또한 외국기업의 海外借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운용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덜어 주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최근 국내외시장에서 경쟁력 약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먼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정부의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출연을 대폭 확대하여 신용보증규모를 지난해 5천억원 수준에서 금년에는 2조원 이상으로 확대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담보력 부족에 따른 자금예로를 완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중소제조업체에 대하여 향후 2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의 20~40%를 특별감면

금년에 경제안정의 정착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을 착실히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 경제는 투자를 중심으로 內需가 회복되고 수출도 착실히 증가하여 潛在成長率 수준에 접근하는 6~7% 수준의 성장이 예상된다.

토록 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부품개발시 대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토록 유도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기술협력을 확대하고 부품개발후 안정적인 수요가 확대되도록 할 것이다.

국민생활 안정과 편익증진

국민생활면에서는 먼저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기본 생활품목에 대한 需給 및 가격동향을 집중관리해 나가고, 국민생활에 불편요인이 되고 있는 주택난·교통난 완화와 환경개선 등에 역점을 두어 나갈 것이다.

住宅은 소형위주로 연간 50~60만호를 건설하되, 公共住宅을 20~25만호 건설하여 庶民의 주거안정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다.

대중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도시 교통시설을 지하철 중심체계로 구축해 나가되, 특히 6대 도시의 지하철 건설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동시에 주차시설 등 대도시 교통시설 확충과 연계수송체계의 발전 등을 통해 수송체계의 효율화를 기해 나갈 것이다.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환경개선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경제행정 및 제도의 개혁

급변하는 對内外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행정조직·제

도·관행을 개혁해 나가되, 특히 금융·토지·직업교육 등 각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먼저 급속한 금융여건의 변화에 적응하고 세계적인 금융혁신 추세에 따라갈 수 있도록 금융제도를 과감히 개편하여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어 나갈 것이다. 복잡다기한 규제위주의 법체제로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고 있는 현행 토지 관련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年內에 마련할 것이다. 기술·기능인력의 양성과 인력난 완화를 위하여 기술교육이 산업계의 실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산업간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정부·기업간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도록 직업교육 및 훈련제도를 개편해 나갈 것이다.

국제경제질서 변화에의 능동적 대응

상품교역뿐 아니라 서비스·자본이동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개방화가 진전되고 있는 세계경제환경과 국제경제질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여 나갈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타결전망에 따라 농업 및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장기발전계획을 보완하고, '리우會議' 이후 강화되고 있는 지구환경 관련 국제동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

무역절차 및 각종 보조금제도를 정비하는 등 국내제도와 관행을 국제규범에 일치시켜 나감으로써 개방화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경제선진화의 계기로 활용해 나갈 것이다.

지역주의 확산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미국·EC 등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우호적인 통상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올해 6~7% 성장 예상

금년에 경제안정의 정착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을 착실히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 경제는 투자를 중심으로 內需가 회복되고 수출도 착실히 증가하여 潛在成長率 수준에 접근하는 6~7% 수준의 성장이 예상된다. 물가는 다소 어려운 요인이 있지만, 總需要管理를 통해 지난해와 비슷한 4~5% 수준의 안정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수지면에서는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을 상회함으로써 무역수지(국제수지 기준)는 균형수준에 접근하고 貿易外收支까지 포함한 경상수지적자는 30억달러 내외의 관리가 능한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을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각 경제주체가 합심노력하여 이를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반드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조전환기에 수반되는 시련을 극복하고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국민적 합의가 확산되어야 한다. 앞으로 국민적 합심노력을 바탕으로 安定基調 정착과 경쟁력 강화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 경제의 활력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나아가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토대도 굳건히 다져질 것으로 본다. 

통화의 안정적 관리와 금융제도의 개선

지난해에는 경제의 안정기조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총수요관리에 중점을 두고 안정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물가와 국제수지가 큰 폭으로 개선되었고, 과거 수년간 사회 전반에 만연되었던 부동산투기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불식되는 등 경제가 안정기조를 회복하고 있다.



전건용

재무부 금융정책과장

또한 범세계적인 금융혁신과 개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분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융의 자율화·개방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경제여건 변화와 정책방향

92년 통화신용정책의 실적

먼저 통화관리 측면에서는 통화를 당초목표인 18.5%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과잉 유동성에 의한 물가불안이 없도록 하는 한편 자금흐름을 개선하여 생산적인 부문에 자금이 집중 지원되도록 하고,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충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왔다.

또한 경제가 안정기조로 접어들면서 자금에 대한 초과수요가 해소되어 가는 가운데 금리의 하향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여 지난해 연초에 19% 수준을 보이던 시장금리가 최근에는 13~14%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금리의 하향안정은 기업의 金融負擔을 줄이고 경쟁력 강화 및 증권시장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한편 2단계 금리자유화 시행의 토대가 될 것이다.

금년은 대내외 경제여건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우선 대외적으로는 냉전시대의 종식과 함께 세계경제의 지역통합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마무리되는 등 세계경제 질서가 태동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새 政府 출범과 함께 국민 각계 각층에서도 변화와 새로운 질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의 하강국면이 장기간 지속되어 성장 잠재력이 저하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그동안 다져온 경제안정기반을 바탕으로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통화를 적정관리하고 자금흐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金利도 더욱더 하향 안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의 선진화·효율화를 통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통화의 적정관리와 자금흐름 개선

금년에는 경제의 안정기조를 다져 나가면서도 경제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통화를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통화증가율은 지난 해보다 다소 하향조정된 수준으로 운용하되 목표범위(band)를 넓게 설정하여 通貨量뿐 아니라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동향 등을 보아가며 통화를 신축적으로 운용해 나갈 것이다.

특히 상반기중에는 통화를 추가로 공급하지 않아도 통화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게 되므로 상·하반기중 통화공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상반기에는 통화목표 증가율을 다소 높게 운용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금년에는 2단계 금리자유화·자본자유화 추진 등 금융의 자율화·개방화의 진전으로 통화공급의 변동폭이 확대되고 예측가능성도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시장조작을 활성화하는 등 정통적인 간접규제 통화관리방식을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통화관리의 환율성을 제고하고 금융기관과 기업의 자금운용상 예측가능성도 높여 나갈 것이다.

아울러 금년에는 외환 및 자본자유화, 금융개방의 확대 등으로 해외자본유입이 늘어나 해외부문 통화증발과 환율의 절상압력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하여 외환수급도 적절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적인 부문에 자금이 중점 공급될 수 있도록 자금흐름의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금융의 選別機能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설비투자과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자금사정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금년에는 그동안 다져온 경제안정기반을 바탕으로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통화를 적정관리하고 자금흐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금리도 더욱더 하향 안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의 선진화·효율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여 나갈 것이다.

금리의 하향안정 및 금리자유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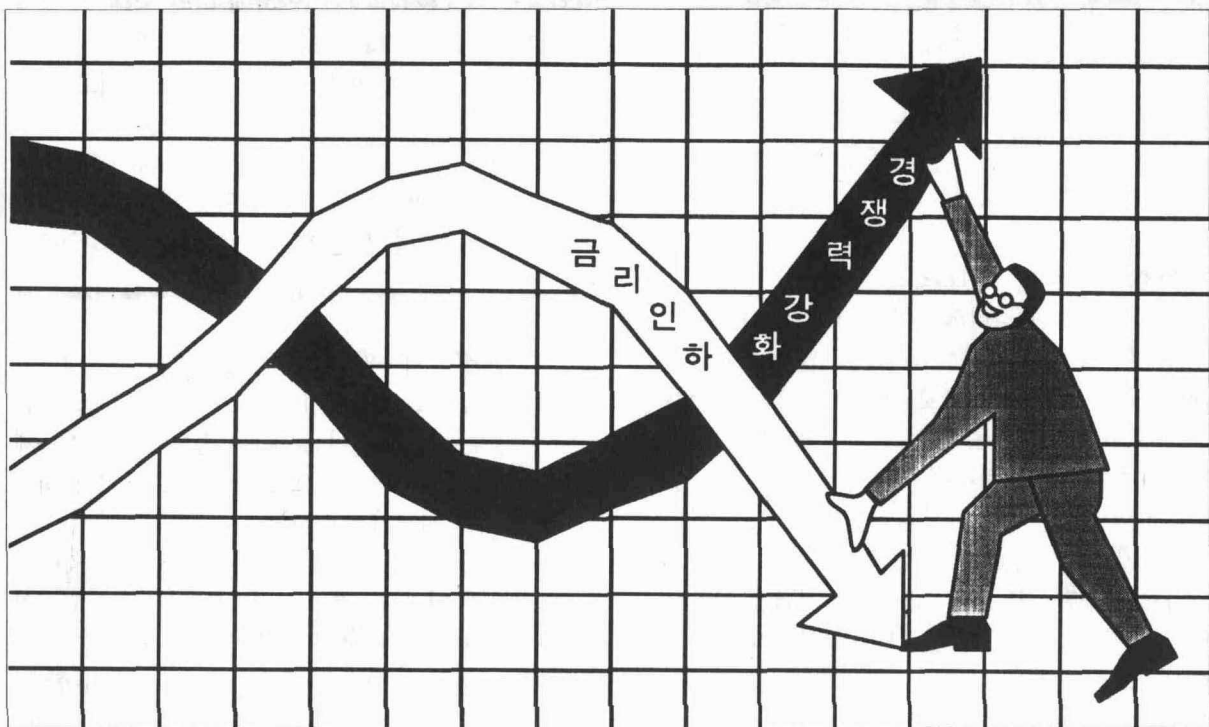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경감시키고 투자심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금리하향안정 노력을 지속하여 중장기적으로 금리가 國際金利 수준으로 낮아지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하여 금리수준을 감안하여 통화를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켜기·과당금리경쟁 등 금리를 상승시키는 불건전한 金融行態를 개선해 나가면서 각종 채권발행 물량을 조정하고 유통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함으로써 채권금리의 하향안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단기금융시장의 자금중개기능을 강화하여 단기금융시장 금리의 하향안정을 촉진해 나가는 한편, 금융기관이 경영합리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유도하여 인건비·물건비 등 경비를 절감함으로써 預貸마진 폭을 축소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금리의 하향안정화를 위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資金需要를 줄여 나가는 등 자금에 대한 수급균형을 도모하고, 금융자금이 제조업 등 생산적인 부문에 집중되도록 자금흐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금융의 개방화·국제화 추세에 따라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리의 시장기능을 높여 자원배분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금리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중에 실시할 2단계 금리자유화는 실물경제 동향이나 시장금리의 움직임, 경제주체들의 대응태세 등을 보아



가며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실시할 예정이다.

2단계 금리자유화를 추진하면서 통화의 간접 규제방식을 정착시키고 채권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3·4단계에 예정된 通貨債·國公債 등의 발행금리도 2단계 금리자유화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제2단계 금리자유화는 넓은 범위의 여수신금리를 자유화하게 되어 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리자유화 이후에 일시적인 금리상승 등으로 기업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통화를 신축적으로 공급하는 등 보완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다.

금융의 효율화·선진화를 위한 금융제도의 개선

새로운 금융제도 개편의 필요성

최근의 금융환경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세계적인 금융의 證券化·통합화 추세와 함께 정보·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금융혁신이 일어나고 금융의 자율화가 급진전되어 가고 있으며 금융기관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금융환경의 변화로 개방·경제적 합리성과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하는 금융산업의 재편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경영방식과 경쟁형태에도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한편 국내적으로는 정치·사회·경제 모든 분야에 걸친 민주화·개방화의 진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국민의 의식구조 변화도 우리 금융제도와 관행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금융여건의 변화와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요구는 우리 금융의 자유화·개방화의 진전과 함께 치열한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국내 금융산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내외적인 금융환경의 여건변화에 따라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제도 및 산

업개편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금융에 대한 변화 욕구를 적절히 수용하고, 금융의 효율화·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는 그동안 단편적이고 부분적으로 시행해 왔던 금융제도 개편작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金融制度 개편의 추진계획과 주요과제

금융제도는 한 나라의 신용질서에 있어서 중추를 이루고 있고 금융제도 개편에 많은 이해관계인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개편안을 마련하는데는 금융전문가의 중지를 모으고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정책과 제도에 관한 심의·자문기구인 금융산업발전심의회와 금융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작업팀에 구체적인 개편방안 마련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금년 6월말까지 제출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金融産業發展審議會의 개편방안을 토대로 관련기관의 협의와 각계의 광범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정부의 공식적인 금융산업 및 제도개편방안을 마련하여 금융의 효율화·선진화를 추구해 나갈 것이다.

이번 금융산업 개편작업은 우리 금융제도와 운영에 관련된 모든 분야를 총망라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작업인데, 개편작업의 중점 과제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자율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금융에 관한 각종 규제와 간섭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둘째, 금융자율화 문제와 함께 금융산업의 구조를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우리 금융산업이 외국의 유수한 금융기관간의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업무영역의 합리적 조정, 금융기관의 대형화·전문화의 추진, 경쟁력을 갖춘 전문인력 개발, 금융서비스의 質的 향상 도모 등이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금융의 자유화·개방화가 본격적으로

국내외적인 금융환경의 여건변화에 따라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제도 및 산업개편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금융에 대한 변화 욕구를 적절히 수용하고, 금융의 효율화·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는 그동안 단편적이고 부분적으로 시행해 왔던 금융제도 개편작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진전되면 기존의 통화신용정책 수단이나 금융감독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변화되는 金融構造에 맞추어 통화신용정책과 금융감독체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가 하는 과제가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변화되는 환경에 맞추어 금융과 산업 간 역할과 관계를 새로이 정립하여 금융과 산업이 상호 보완·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별첨**

경제정책자료 이용안내

경제정책자료 이용에 관해 궁금하신 점이나 자료의 열람·복사 및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다음의 경제자료안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전화

- 과천정부2청사 경제자료안내실
☎(02)502-2312
-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자료안내실
☎(02)316-3447
- 대전직할시 한밭도서관 경제자료안내실
☎(042)580-4414
- 충북도청 경제자료안내실
☎(0431)57-6559
- 전북경제사회연구원 경제자료안내실
☎(0652)253-2771

정보산업발전 전략계획

정보산업은 정보의 수집·가공·축적·전송 및 이용에 관련된 산업으로서 이것의 발전 없이는 산업의 정보화와 사회의 정보화 진전은 어려울 것이다.

정보화의 진전은 국민생활에 있어 삶의 質을 향상시킨다. 공공행정·국방·사회복지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서비스수준의 향상과 효율증진을 가져오며, 산업분야에서는 생산·유통·관리 등 모든 부문의 자동화·정보화를 촉진하여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크게 제고시킬 것이다.

이와 같이 정보산업은 산업이나 사회정보화 추진을 위한 필수요소로서, 산업자체의 성장잠재력이 크고 모든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과 같이 산업발전을 선도해 갈 국가기간산업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대내외 여건 및 외국의 정보산업 발전전략

미국·일본·EC 등 주요 선진국과 대만·싱가포르 등은 80년대 초반부터 정보산업의 발전 및 정보화의 추진이 향후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최우선 과제임을 인식하여 범국가적 차원의 정보산업발전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특



강군생

경제기획원 산업3과장

히, 선진 각국은 정보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민간기업들도 세계적 유력기업간의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寡占的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확보된 기술의 이전을 기피하면서 기술장벽과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70년대까지 세계 정보산업의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였으나 최근에는 정보기기분야의 경쟁력 약화로 세계시장의 점유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부문과 국방기술부문의 절대적 우위를 바탕으로 정보산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전개하고 있고, 클린턴 대통령 당선자도 정보산업 육성을 주요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일본은 通産省 주도로 정보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세계 정보기기 산업분야의 주도국가로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액정소자(LDP), 소형 고성능전지 등 핵심부품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수준에 이르고 있다. 소프트웨어산업은 미국에 비해 낙후되어 있으나 통산성 산하 IPA(Information Technology Promotion Agency)를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의 효율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시스템통합사업의 육성, 지식산업연구단의 조성, 「정보처리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

정 등을 통해 정보화 촉진 및 정보산업의 고도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유럽은 80년대 들어 美·日에 뒤진 정보산업의 경쟁력 만회를 위해 개별국가가 아닌 EC통합체 차원에서 종합육성시책을 추진하여 통신분야·첨단소프트웨어분야 등에서 세계적 우위를 확보하였고, 정보산업 기술개발에 집중투자를 하고 있다.

대만도 「정보산업진흥 10개년 계획 : 91~2000년」을 수립, 실천력있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정보산업 주도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개도국 중에서는 가장 일찍 정보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육성하고 있으며, 그 추진체로 CMC(Committee on National Computerization)와 NCB(National Computer Board)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국가정보화종합계획으로 「IT 2000 91~2000년」 계획을 수립·추진중에 있으며, 수송·금융 등 서비스분야에서 세계의 중심지 기능을 지향하는 의욕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보산업, 선진국과 기술격차 커

우리나라의 정보산업은 80년대 이후 쏠전자교환기 TDX를 개발한 통신분야와 개인용 컴퓨터와 주전산기(TICOM I, II)를 개발한 컴퓨터분야를 중심으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정보기기산업은 80년대 초반 퍼스널컴퓨터 위주로 급성장하였으나 최근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퍼스널컴퓨터 가격의 하락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어 생산이 둔화되는 등 구조조정을 맞고 있으며, 특히 범용컴퓨터는 해외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소프트웨어산업은 양적으로는 성장하고 있으나 급여계산 등 일부 응용소프트웨어만을 자체 개발하고 있는 초보적 단계로서 시스템소프트웨어,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등 고급단계의 기술은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정보산업이 선진국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능력에 알맞는 범정부차원의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당면과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정보산업발전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선진국에 비해 10~20년의 기술격차를 보이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은 전화 등 기간통신부문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고, 기술개발도 많이 이루어졌으나 무선통신과 데이터통신 등 고도통신분야는 매우 낙후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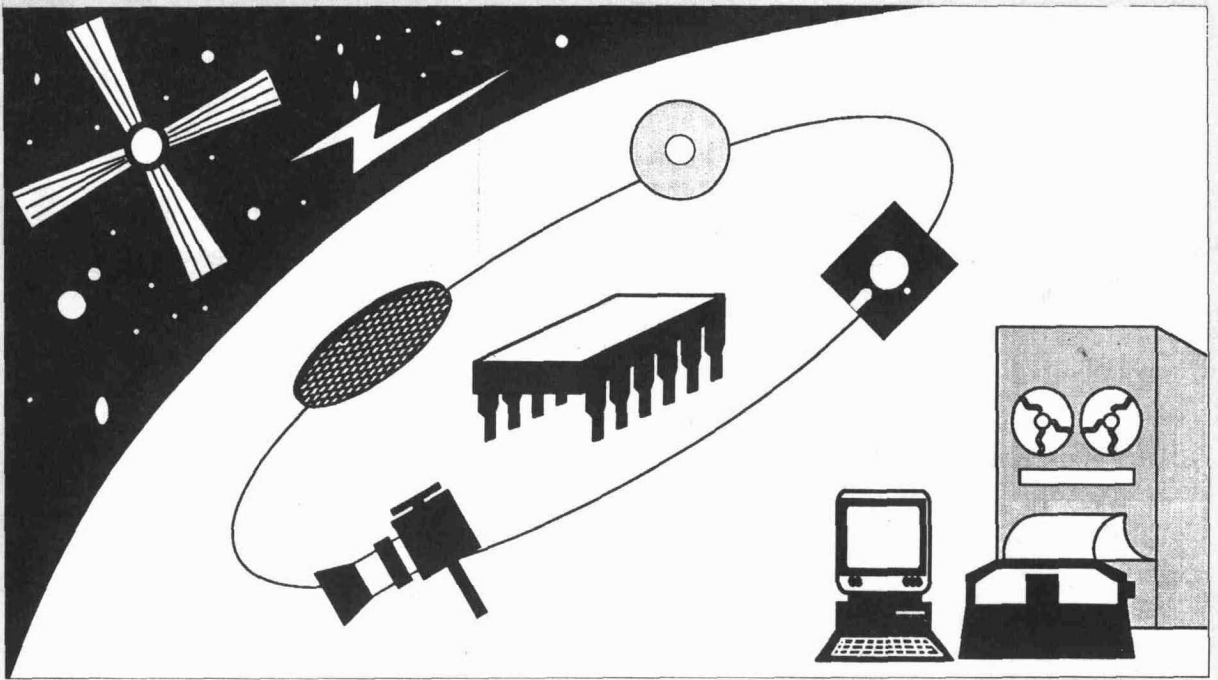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정보산업이 선진국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능력에 알맞는 범정부차원의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당면과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정보산업발전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정보산업발전의 핵심과제

정보기기산업, 핵심개발과제 선정하여 개발

현재 우리 기업들의 기술축적도에 비추어 향후 2~3년내에 개발하여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로 관련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품목을 핵심개발과제로 선정하고, 이와 더불어 중장기 유망품목도 개발과제로 선정하였다.

2~3년내에 개발할 핵심과제로는 ①핸디 터미널·전자수첩 등 휴대용정보기기 ②기억장치 부문·프린터부문 및 모니터부문 등 컴퓨터 주변기기 ③개방형 중형컴퓨터 및 반도체부문을 선정하였고, 중장기 개발과제로는 산업용 정보기기·가정용 정보기기 및 멀티미디어 퍼스널컴퓨터 등을 선정하였다.



전략정보통신망 등 구축에 역점 뒤

공중정보통신망의 확충은 韓國通信이 담당하고 부가가치통신망(VAN; Value Added Network)은 민간사업자간의 경쟁체제를 통하여 확충되도록 유도하면서 우리 기술수준이 미흡한 다음의 과제를 전략적 핵심과제로 선정하였다.

첫째 과제는, 대학·연구기관 및 지식산업단지의 정보산업핵심인력이 사용하는 컴퓨터간의 원활한 정보소통과 연구활성화를 위하여 고도 전략정보통신망(information highway)을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과제는, 90년대말까지 선진국 수준의 이동통신망과 무선데이터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과제는, 통신과 방송에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위성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넷째 과제는, 최첨단통신망인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BISDN)을 2010년경에 전국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산업, 기반기술 개발 중점 추진

소프트웨어는 정보산업분야 자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산업분야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기술로 자리잡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정보산업 중 가장 낙후된 분야이다. 따라서 기반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고 우선 한글서체·한글코드·한글처리기

본 데이터 베이스 등 한글정보처리기술의 확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개발과 응용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및 보급을 핵심전략과제로 선정하였다.

정보산업의 기반구축과 정보화 촉진

전문인력의 양성

우리나라의 정보산업을 이끌어 나갈 공무원, 회사의 기획인력 및 마케팅인력, 연구개발인력 등 약 1천명 규모수준의 先導集團을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정보산업분야의 기술혁신을 주도할 고급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우수대학을 중심으로 연구센터 활성화와 교육·연구인력초빙제 및 특약학과제도를 강화하고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을 위해 현장실습학점제, 산·학·연 협동 학위과정 등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중견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대학교·실업계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자격증제도를 개선하여 실업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한다.

지식산업단지의 조성

지식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조직과 일반기업간의 고리역할을 하는 신기술창업기업이 활

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서울·부산·대덕·광주 등 각 권역별로 지식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며, 지식산업단지에는 정보산업분야의 創業企業들이 공동활용할 수 있는 제반시설과 서비스기능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사회정보화 촉진을 위한 단말기 1천만대 보급
 사회정보화의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자료를 데이터 베이스化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는 일반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이용 활성화를 위해 2001년까지 퍼스널컴퓨터 등을 1천만대 수준으로 확대하여 1가구 1컴퓨터시대를 실현할 것이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의 정보화
 중소기업의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생산자동화 및 경영관리 전산화를 추진하고, 철강·자동차·전자 및 전기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6개 업종의 업종별·수급기업간 정보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업·物流貿易業 등 생산관련 서비스산업의 정보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표준화 사업의 추진
 정보산업분야의 표준화 체계를 확립하고 국내 정보산업의 표준화 수준을 국제수준으로 제고시키기 위해 세계 표준화기구들의 작업에 적극 참여하고, 선진국과 상호 認證되는 분야가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정보산업발전을 위한 여건의 조성

소프트웨어산업, 데이터베이스산업 및 부가가치통신망사업에 대한 여신심사절차, 과세표준화 및 전기료 책정, 통관절차 등을 제조업과 같은 수준으로 개선하고, 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유인시책을 강화하는 한편 정보산업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산·학·연의 협력과 경쟁체제를 구축하여 연구개발의 효율성

‘정보산업발전 전략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보산업기반 기술의 개발, 관련산업의 표준화 및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화 촉진 기본법」을 제정하여 정보산업과 정보화가 균형 발전을 이루도록 해나갈 것이다.

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정보산업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2001년까지 선진국 수준에 이르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의 정보화 및 시민의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여 국민의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하는 한편, 정보화사회에 알맞는 행정제도 및 법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정보화 저해요인을 제거해 나갈 것이다.

정보산업발전 전략계획의 효율적 추진

정보산업은 기술개발과 대내외 여건변화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번 전략계획에는 기본방향만 설정하고 구체적 시행계획은 매년 連動計劃으로 수립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민간기업이 개별적으로 담당하기 어려운 인력개발과 기반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는 한편, 전략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간업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부처 업무기능의 종합조정을 담당하는 ‘情報産業企劃團’을 신설 운영할 계획이다. 이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정보산업기반 기술의 개발, 관련산업의 표준화 및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화 촉진 기본법」을 제정하여 정보산업과 정보화가 균형 발전을 이루도록 해나갈 것이다. **남원**

세계무역환경의 新潮流와 93년도 무역정책방향

86~88년 기간중 연평균 26.4%라는 높은 신장률을 기록하였던 수출이 89년, 90년에는 각각 2.8%, 4.2% 증가라는 극심한 정체에 빠진 반면 수입은 두자리수의 급증세를 보여 88년에 90억달러에 달한 貿易黑字(통관기준)가 89년에는 9억달러로 급격히 축소되고 90, 91년에는 다시 각각 48억달러 적자, 97억달러 적자로 반전되는 심각한 무역수지 악화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출부진현상은 작년도 크게 호전되지 않고 이어져, 91년의 10.5% 증가세에서 다시 작년에 6.8% 증가(768억달러)에 그침으로써 우리 수출이 이제는 구조적인 低成長의 늪에 빠져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자아내고 있다(<그림> 참조).

최근 우리 무역의 實狀

88년말 3低로 일컬어지던 좋은 여건이 끝나고 이와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고성장·고소득·고소비의 여파와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생산성 증가를 훨씬 웃도는 임금상승, 근로시간의 단축과 제품의 불량률 증가 등의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이와 함께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부족으로 물류비용마저 증가하여 종래 우리 수출상품이 국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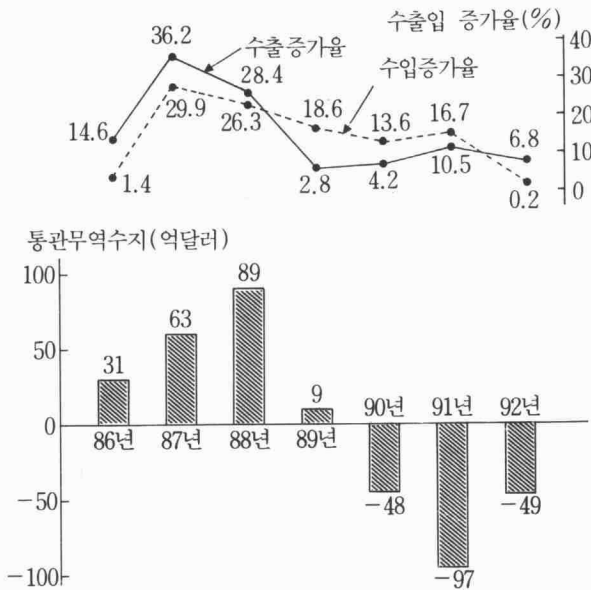
김군섭
상공부 수출진흥과장

장에서 항유해 온 가격경쟁력은 점차 빛을 잃어가게 되었다.

기술개발력의 보강이나 인력난에 대비한 자동화·정보화 등 장래를 위한 노력도 결여되어 가격이나 품질면에서 국제시장에 내놓을 만한 상품의 숫자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 점점 감소되어 가는 渦中에 경쟁국의 기업들은 생산과 판매의 최적화와 국제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후발개도국들은 선진국의 자본·기술과 자국의 값싼 노동력을 결합하여 손쉽게 우리의 수출시장을 잠식해 버린 것이다(<표> 참조).

그런 가운데서도 과거 5년간 연평균 21%의 높은 증가율을 계속해 온 수입이 92년 들어서는 전년대비 0.2% 증가(817억달러)에 그쳐 무역수지 적자가 49억달러로 크게 축소되었다. 이와 같이 수입이 현저히 둔화된 것은 국제원자재 가격의 안정에 따른 수입단가 하락과 국내경기 진정 및 설비투자 위축으로 인한 수입수요 둔화가 주된 요인으로서, 한편에서는 성장률 하락과 투자위축이라는 부작용도 없지 않았지만, 89년 이후 악화일로를 걸어온 무역수지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한 것이었다.

〈그림〉 수출입증가율 및 무역수지(통관기준) 추이



자료 : 무역협회, 「무역통계」 각 연도

금년도 대내외 수출환경

수출은 결국 국제시장에서 우리의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이므로 세계시장의 수요나 경쟁상황 등의 여건에 밀접하게 영향을 받게 되며, 더구나 세계시장에서 품질이나 가격의 주도권을 갖고

있지 못한 우리의 수출기업들로서는 세계시장의 여건변화는 그대로 외생적인 변수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으므로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

세계경제성장률 기대만큼 높지 않을 듯

우선, 세계경제성장률이 당초 기대했던 만큼 높아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선진국 경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수출증가로 연결되기까지는 상당기간이 걸리고, 또한 과거와는 달리 對先進國 수출의 직접적인 증대보다는 후발개도국을 통한 우회수출 증대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선진국의 우리 제품에 대한 수입 수요가 작년보다 크게 호전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환율여건, 우리 수출환경에 유리하지 않을 전망

둘째로,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기업은 달러표시 수출단가를 인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또 한편으로는 수출채산성도 개선되므로 환율은 가격경쟁력의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작년에 期末換率 기준으로 3.5% 절하된 對美 달러환율이 금년에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가 수출업계의 공동관심사이다. 대체로 1~2% 정도 소폭 절하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으로 보이나, 환

〈표〉 아시아 주요국의 미국 및 일본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

		미국시장 점유율						일본시장 점유율					
		86년	88년	89년	90년	91년	92년 上*	86년	88년	89년	90년	91년	92년 1~8월
중	국	1.4	2.0	2.5	3.1	3.9	4.2	4.5	5.3	5.3	5.1	6.0	6.8
태	국	0.5	0.7	0.9	1.1	1.3	1.3	1.1	1.5	1.7	1.8	2.2	2.5
인	도	1.0	0.8	0.8	0.7	0.7	0.8	5.9	5.1	5.2	5.4	5.4	5.1
말	레이	0.7	0.8	1.0	1.1	1.2	1.3	3.1	2.5	2.4	2.4	2.7	2.8
한	국	3.5	4.6	4.2	3.7	3.5	3.1	4.1	6.3	6.2	5.0	5.2	4.8
대	만	5.6	5.7	5.1	4.6	4.7	4.6	3.7	4.7	4.3	4.3	4.0	4.2
일	본	22.4	20.3	19.8	18.1	18.8	18.1	-	-	-	-	-	-

註 : * 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는 1~4월중

자료 : 미국 상무부, Survey of Current Business, 각호.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각호.

일본관세협회, 「外國貿易概況」 각호.

율은 무역수지뿐만 아니라 국제간 자본이동을 포함한 종합수지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금년도의 증시여건에 따라 주식투자용 해외자금이나 뱅크론을 통한 해외차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데다, 설비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외화 대출 자금을 확대 공급함으로써 환율이 오히려 절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등 환율여건이 결코 수출환경에 유리하게 작용하리라고는 볼 수 없는 실정이다.

셋째로, 수출상품의 생산코스트에 영향을 미치는 임금 및 물가와 금리는 작년보다 다소 안정된 선에서 유지될 것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되고 있으나, 작년도에 설비투자가 부진하고 경공업제품의 국내생산기반이 약화되어 수출공급능력이 소폭 증가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공급측면에서의 수출환경 또한 그다지 밝지는 못하다.

對外通商環境 불확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수출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는 요인은 무엇보다도 대외통상환경이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즉, 연초로 예정된 철강 및 반도체에 대한 美國의 반덤핑관세 최종판정 결과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클린턴행정부의 통상정책도 환경관련 기술규정 강화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심사기능 강화, 수퍼 301 조 부활 움직임 등 보호주의적 요소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와 더불어 작년 12월 美·EC간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 마찰이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현재 막바지단계에 접어든 우루과이라운드가 금년 상반기중에는 타결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공정무역과 시장개방에 대한 밖으로부터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드세어져 기존의 무역체제에 일대 전환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EC 단일시장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출범 등 경제블럭화가 가일층 진전되어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域外國으로서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데다가, 작년 리우회의 이후

수출산업의 금융여건을 개선하여 가격경쟁력면에서 불리한 여건을 완화하고 채산성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시중실세금리의 하향 안정화나 자본시장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여건 개선을 통해 수출기업의 금융조달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본격화되고 있는 국제환경규제의 강화 역시 우리의 수출물품에 대한 기술적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렇듯 대외 통상환경은 우리 수출이 극복해야 할 새로운潮流로서 밀려오고 있다.

금년도 수출 830억달러 내외에 그칠 듯

이와 같은 여러 변수들의 전망치를 활용하여 80~92년간의 분기별 時系列輸出模型을 만들어 금년도 수출전망을 해보면, 금년에는 작년보다 8% 정도 소폭 증가한 830억달러 내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설비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거나 생산활동 회복으로 자본재 및 원자재 수입이 7% 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작년에 대폭 개선된 무역수지가 다시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출촉진을 위한 정책방향

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중요성을想起할 때 대내외 무역여건의 악화라는 외생적 요인만으로 수출부진의 탓을 돌려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대내외여건은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쟁국들에게도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오히려 잃었던 수출시장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작년도에 무역수지가 크게 개선된 것을 보고 무역수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적어지고 우선순위가 밀려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여러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상품의 종합경쟁력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들 요인에 따라 단기적 또는 중장기적 정책과제가 도출될 수 있으며, 결국 정부의 수출촉진대책도 이러한 요인들이 유리하게 전개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기 요인들 중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들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무역정책차원에서 수출촉진을 위한 대책으로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을 들면 다음과 같다.

수출산업의 금융여건 개선

첫째로, 수출산업의 금융여건을 개선하여 가격경쟁력면에서 불리한 여건을 완화하고 採算性을 확보토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내시장에 있어서의 경쟁은 대체로 같은 금융여건에 있는 국내기업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금의 可用性이나 금리면에서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수출기업은 외국기업과 경쟁하기 때문에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금융자금을 이용한다면, 이는 가격경쟁력상의 열위로 작용하지 않을 수 없다. 91년 우리 제조업의 매출액 對比 금융비용 비율을 보면 5.7% 수준으로서 일본이나 대만 등 경쟁국 기업에 비해 2~3배 정도 높은 수준에 있는데, 이는 국내 제조업체의 재무구조가 취약한 데에도 그 원인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금리가 높은 자금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금융여건에도 그 중요한 원인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중실세금리의 하향 안정화나 자본시장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여건 개선을 통해 수출기업의 금융조달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루과이라운드 보조금협상의 타결로 수출지원제도의 운용에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본격 시행까지는 3년 여의 이행기간이 부여되는 점을 감안하여 무역금융이나 무역어음제도 등 기존의 수출지원제도 또한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둘째, 해외시장을 개척하려는 노력을 들 수 있다. 해외홍보활동을 포함한 마케팅 노력은 우리나라 및 우리 상품에 대한 對外聲價를 높여 결국 지속적인 수출증가를 가져오는 外部效果가 있으므로 기업차원의 마케팅활동과 병행하여 정부차원에서도 기업의 해외마케팅활동과 마케팅 전문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만 한다.

따라서 금년에는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무역정책의 중요한 비중을 두고, 기업의 해외유통망 확충을 지원하고 해외마케팅 전문인력을 양성·확보토록 유도하며, 수출상품의 품질관리 노력이 모든 수출기업에 확산되도록 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 共同商標制를 도입하는 등 자기상표 제품의 수출확대를 위한 추진체계를 보강하여 종래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출방식에 과다하게 의존함으로써 겪었던 제값받기의 어려움이나 수출가격 인상시 바이어 이탈로 인한 수출불안정 등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수출입절차의 간소화

셋째로는 수출입절차를 간소화하여 수출부대비용을 경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86년 대외무역법의 제정·시행 이후 매년 수출입 승인이나 통관절차 등 수출행위와 관련된 복잡한 절차를 과감히 개선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출업계의 불필요한 시간적·금전적 비용을 초래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따라서 건당 1만달러 이하의 소액수출에 대하여는 수출승인을 면제하는 등 수출입 승인절차를 개선하고, 무역업무 자동화 사업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수출부대비용이 경감되도록 하며, 특히 최근 몇년간 物流費用 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 오히려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액을 上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물류표준화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보관·하역·운송 등 물류관련 비용을 줄이는 노력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다.



對北方交易의 活性化

넷째로는 남북무역을 포함한 對북방교역의 활성화이다. 선진국에 대한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러시아 및 舊동구권 등 북방국가와의 교역확대는 우리에게 수출부진의 돌파구를 주고 있음은 최근 몇년간의 수출동향에서 이미 드러난 바 있다. 따라서 이들 상대적으로 새로운 수출시장을 우리 수출에 유리하도록 先占하기 위해 대북방 경제협력체제를 조기에 구축하고 수출기반을 정비하는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세계통상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

끝으로, 세계통상환경 변화에의 능동적 대응이다. 우선 무역마찰의 사후적 해결보다는 통상협력 강화를 통한 무역마찰의 사전예방에 주력하여 무역확대 기반이 조성되도록 할 것이다. 미국과는 반도체·철강 등 반덤핑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면서 포괄적인 산업기술협력 노력을 강화하고 日本과는 무역적자 개선 및 기술협력 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EC의 시장단일화와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출범에 대응하여 이들 조치가 域外國家에 대한 차별적 무역장벽화되지 않도록 통상외교활동을 강화하며, 이들 지역에 대한 투자확대 등 산업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대응하여 수출지원제도를 개편함으로써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면서도 통상마찰의 소지가 최소화 되도록 하며, 환경관련 국제규범에 대응한 수출기반 유지 노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수출증대' 추구

오늘날과 같은 국제화·개방화시대에서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이기고 살아남는 길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수출증대' 외에 더 좋은 王道를 찾기 어려우며, 시장규모나 부존자원이 다른 나라만큼 풍족하지 못한 우리로서는 무역수지 개선과 성장회복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서도 수출증대의 길밖에 달리 선택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대외적으로 수출여건이 어떻게 변화하든 그동안 다소 흐트러졌던 우리의 몸가짐을 다시 가다듬고, 기업과 근로자는 보다 좋은 상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노력을 배가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수출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제반 어려움을 한 발 앞서 해결하는 노력을 강화할 때, 다시금 무역수지 흑자시대를 맞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임금 및 노사관계의 안정

지난해를 뒤돌아보면 90년 이후 진정국면에 접어든 노사관계가 새로운 질서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아쉬움도 있었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노동문화가 바람직하게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노사관계는 연초에 발생한 현대자동차 분규여파가 馬·昌地域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처음으로 실시되는 총액기준 임금정책을 둘러싸고 勞·使·政 간의 뜨거운 논쟁이 전개되는 양상을 보여 다소 불안한 모습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분규발생 건수가 91년도 수준을 유지하여 89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노사관계 안정추세는 지속되었고, 분규양상도 온건·합법화 경향이 보다 뚜렷해졌다.

즉, 불법분규비율이 감소하고 특히 시위·농성 비율이 91년도의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일련의 결과는 근로손실일수를 91년보다 50% 이상 감소시키는 바람직한 현상을 보여줌으로써 산업사회의 부담을 크게 덜어 주었다.

또한 지난해에 처음 도입된 총액기준 임금정책도 성공리에 마무리되어 임금교섭의 새로운 기원을 이룩하였고, 기업규모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임금체계를 합리화하는 데 기여했으며, 우리 경제발전의 부담으로 작용했던 高率의 임



김용달
노동부 기획예산담당관

금 인상 고삐를 일단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는 노사안정기조 정착되는 가운데 임금인상 고삐 잡혀

이와 같이 勞動文化가 건전하게 형성되어 가고 있는 데에는 먼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국민 사이에 형성됨에 따라 노사가 지나친 대립을 자제하였고, 東歐 등 사회주의국가의 몰락으로 정치성을 띤 과격한 노동운동에 대한 지지기반이 약화됨에 따른 국내 노동운동노선도 근로자권익 보호 등 실리적인 방향으로 선회하였으며, 노사교섭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노사간의 쟁점을 爭議行爲로 연결시키지 않고 대화로써 해결하는 풍토가 조성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요인과 함께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도 크게 작용하였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사회적 합의형성회의'를 개최(92. 2. 12)하여 임금안정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勞·使·政의 의지를 결집하고 실천분위기를 확산하는 동시에 노사 양측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질서를 엄정하게 확립하고, 근로자복지주택의 지속 공급, '평화은행' 설립 등 근로복지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부동산과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범정부적으

로 대처하여 결실을 맺은 데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의 결실로 92년 하반기부터는 노동의 인간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우리 산업사회에서 産災를 추방하기 위해 노·사·정이 함께 나서는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92년도 노사관계의 한 특징으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올해도 노사관계 안정기조 지속될 듯

올해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해로서 향후 5년간의 청사진을 바탕으로 국가의 주요정책과 추진전략을 구체화해야 하는 중요한 해이다. 특히,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고, 新韓國 創造를 위하여 모든 국민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올해의 대내외적 여건은 우리의 보다 강한 應戰을 요구하고 있다. 먼저 대외적인 경제여건을 보면,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과 중국·ASEAN 등 후발국의 고속성장으로 교역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EC·NAFTA 등의 경제블럭 가시화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둘러싼 다자간의 경쟁이 보다 치열해지고, 미국의 신정부 경제정책이 예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시장개방요구가 강화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교차하고 있으며, 연내 타결이 예상되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결과는 또다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경제는 성장잠재력을 보다 충실하게 다져 나가기 위한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경기회복 효과는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 경제주체들의 인내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경제환경은 올해의 노사관계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즉, 당면한 국내경제의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하고 대외경쟁력 회복을 위해 노사의 협력을 바라는 여론이 확산될 것이며, 노동운동 방향도 실리위주로 전환하는 추세가 점차 확산될 것으로 기대

대내외적 경제환경은 올해의 노사관계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즉, 당면한 국내경제의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하고 대외경쟁력 회복을 위해 노사의 협력을 바라는 여론이 확산될 것이며, 노동운동 방향도 실리위주로 전환하는 추세가 점차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어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되어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노사관계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도 곳곳에 잠재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먼저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조망해 보면, 新政府 출범에 따라 공약사항 이행에 대한 기대감이 봄철 임금협상 및 단체협상 시기에 표출되어 신정부의 임금·노사관계 등 노동문제에 대한 시각과 해결의사를 타진하려고 함으로써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노동관계법 연구위원회의 입법 건의안이 정부에 제출되고 법개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이와 관련한 勞·使·學界 등의 다양한 요구가 분출되어 노사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올해 경제정책도 안정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후발개도국의 추격으로 노동집약산업의 休·廢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임금체불, 집단해고 등으로 인한 소규모 악성분규가 다발할 가능성도 있다.

노동단체의 행보 또한 금년도 노사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韓國勞總 등 제도권 노동단체는 2월중에 노총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있어 선거과정에서 치열한 당선경쟁을 벌일 경우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며, 범외노동단체는 현재의 위축된 조직세를 재정비하는 데 주력하면서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言勞聯)의 합법성을 인정한 92년 12월 22일자 大法院 판결을 계기로 노동계 재편을 위



한 시도를 전개할 경우 노동관계법 개정추진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노동시장 여건을 보면, 중소기업업을 중심으로 한 인력난이 크게 호전되지 않는 가운데 경제성장을 둔화로 인하여 고용흡수력이 낮아짐에 따라 대졸자 취업은 더욱 어려워지고, 산업구조 조정과 경쟁력이 약화된 노동집약산업의 휴·폐업 증가는 고용불안으로 이어져 노사관계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임금교섭 측면에서 보면, 국제경쟁력 약화, 휴·폐업 증가 등의 영향으로 과도한 임금인상요구는 자제될 것으로 기대되나 총액기준 임금정책에 대한 노동계의 반대 의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금가이드라인 제시가 자칫 임금통제정책으로 비쳐질 경우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다.

임금 및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과제

이러한 여건에서 노사관계 안정을 바탕으로 산업사회의 활력을 제고하고 임금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 新韓國 창조를 위한 밑거름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노사관계구조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돼야

우리의 노사관계는 노사대등에 의한 대결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구조는 빌미만 있으면 언제든지 勞使가 충돌할 소지를 유보하고 있는 불안한 과도기적 단계이다. 노사관계에 있어 선진대열에 있는 국가들은 현재 우리와 같은 관계구조를 넘어 노사가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기업발전을 위하여, 더 나아가서는 국

민경제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는 관계구조를 유지·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우리도 약화된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노사관계 구조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노사는 서로가 대결의 대상이 아닌 동반자라는 의식을 바탕으로 기업가는 기업경영에 전념하면서 근로복지 향상 및 근로환경 개선에 힘쓰고,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열과 성을 다하여 근로에 임하고 기업발전을 위해 기업가와 적극 협조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국민경제발전을 위하여 노사가 협조해 나가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노사교육을 내실화하고, 勞·使·政 간의 대화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多元的 민주사회에 걸맞게 노사관계제도를 개선하고 노사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공정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한편, 법질서를 엄정하게 확립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산재예방, 근로조건 개선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직업안정과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한 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총액기준 임금정책 지속적으로 추진

87년 이후의 높은 임금인상이 재연될 경우 국제경쟁력 회복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아직도 賃金을 보는 노사간의 시각차는 해소되지 않은 느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5년 동안 고율의 임금인상을 겪으면서 명목임금 상승만으로는 근로자의 실질생활수준 향상에 한계가 있다는 중요한 경험을 얻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부동산·생필품 가격 등 물가안정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不勞所得을 척결하고, 사치풍토를 추방하는 등 사회분위기를 쇄신하는 한편 근로복지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임금안정을 꾀해 나갈 것이다.

93년도 임금인상은 지속적인 물가안정을 토대로 개별기업단위로는 생산성향상 범위내에서 노

93년도 임금인상은 지속적인 물가안정을 토대로 개별기업단위로는 생산성향상 범위내에서 노사간 자율결정을 원칙으로 하되, 전산업의 평균 명목임금 상승률이 국민경제 전체의 생산성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사간 자율결정을 원칙으로 하되, 전산업의 평균 명목임금 상승률이 국민경제 전체의 생산성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91년의 시행경험을 토대로 총액기준 임금정책을 보완하여 계속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 임금이 안고 있는 기업규모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복잡한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등 임금관리의 효율화를 기해 나가는 한편, 정부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은 3% 범위내(호봉포함 5% 내외)에서 인상토록 하고, 시장지배적 독과점업체, 공공성이 큰 금융기관, 기타 고임금 업종 등은 높은 임금수준 및 투자기관 등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에 동참토록 유도하되 구체적인 적용대상, 임금수준 등은 노·사·정 협의과정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농어촌구조조정의 촉진

지난 86년 이래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을 둘러싸고 지속되어온 美國-EC간의 대립이 지난해 연말에 극적으로 해결됨으로써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조기에 타결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의 입장에 많은 차이가 있고, 이러한 견해차이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구체적인 협상결과가 도출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나 협상 타결의 분위기는 고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4월 우리의 이행계획을 GATT에 제출하면서 ①쌀은 관세화는 물론 최소 시장접근도 허용할 수 없으며, ②관세 상당치 및 국내보조 감축과 관련하여 개발도상국에 적용되는 우대조치를 우리나라에 적용해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우리의 입장이 협상과정에서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외교적인 협상력을 총동원해 대처해 나가는 동시에, 개방화에 대응한 국내대책을 적극 추진하는 일이라 하겠다.

'산업으로서의 농수산업' 육성을 위한 구조개선

사실 개방화 문제가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 농



안중운

농림수산부 농업구조정책과장

어촌은 대내적으로 여러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에 봉착해 있다.

농어촌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농어촌 일손부족·경지정리·농업용수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의 미흡, 낮은 농업기계화 수준, 영세한 농업경영규모, 농수산물 유통시설의 부족과 농어촌 소득원의 제약, 주택·도로·상하수도·교육·의료시설 등 농어촌 생활환경의 낙후 등의 제반상황은 우리 농어촌이 자생력을 가진 경제·사회단위로 발전

하는 데 기본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는 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산업으로서의 우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촌사회의 활력을 증대시킴으로써 '떠나는 농어촌에서 돌아오는 농어촌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며, 이는 産業間·都農間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에서는 이미 91년 7월 「農漁村構造改善對策」을 수립, 92년부터 2001년까지의 10년간을 '농어촌구조혁신의 연대'로 설정하고 농어촌발전을 위해 이 기간 동안 총 42조원의 재원을 농어촌구조개선에 집중투자해 나가는 동시에 과감한 제도개혁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농어촌구조개선대책에서 제시된 구조개선의 기본방향과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조 명하고 금년도 추진과제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핵심

개방화·국제화 시대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 감으로써 자생력을 갖춘 산업으로 육성하는 일 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농수산물의 생산비를 낮 추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의 농수산물 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에 농수산업의 체계적 육성

현재 매년 50만명 내외의 농가인구가 감소하 고 있으며, 농가인구 중 50세 이상 인구의 비율 이 91년 현재 40% 수준에 이르는 등 고령화·부 녀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젊고 유 능한 농어업 후계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됨은 물론이다. 정부에서는 농 어업 후계인력 육성을 위하여 농어민후계자 선 정인원을 91년 1,500명에서 지난해에는 1만명 으로 대폭 늘리고 지난해부터 3년 이상 경과된 우수후계자에 대해서는 1인당 5천만원까지 추가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이 성숙된 농업경영자 로 정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금년에도 농어민후계자를 1만명 선정하고 농 어민에 대한 자금지원과 기술·경영교육을 강화 함으로써 농어민의 경영능력을 제고해 나갈 계 획이다.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지자체 12월 정부에서는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앞으로 농업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

개방화·국제화 시대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감으로써 자생력을 갖춘 산업으로 육성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농수산물의 생산비를 낮추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의 농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농로확충, 배수개선 등 농업생산기반을 조기에 완비함은 물론 추곡수매 등과 같은 價格支持와 流通施設 설치 등에 있어서도 우대해 나갈 방침 이다.

봄 마무리 경지정리의 경우 사업시행 면적을 92년 2만4천ha 완료하였고, 금년에도 2만ha를 착수하였다. 특히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농업용수 개발에 있어서는 농어촌의 생활용 수와 공업용수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 로 개발할 예정이며, 92년도에 착수한 다목적용 수개발 115개 지구에 대해 금년에도 계속 사업 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계화 및 시설현대화의 집중지원

당면한 농어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생 산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는 기계화 및 시설현 대화가 필수적이다. 정부에서는 농어촌구조개선 總投融資 규모 42조원 중 약 10조원을 기계화 및 시설현대화에 지원할 계획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농업의 근간인 벼농사는 현재 88% 수 준인 기계화율을 96년까지 100% 완료한다는 계 획 아래 농기계공급을 92년 16만4천대에서 금 년에는 18만6천대로 늘리는 동시에 특히, 위탁영 농회사 설립지원을 지난해 121개소에서 금년에는 272개소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발작물이나 채소 등 시설원예의 경우 주 산단지를 중심으로 기계화 및 시설현대화를 집 중지원하고, 축산의 경우도 축사시설 자동화와 공해방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지난해에 이어 금



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영농규모 확대 및 기술혁신

농가소득확대와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농수산업 경영규모의 확대가 요구된다. 정부는 농업경영규모 확대를 위하여 현재 3ha로 되어 있는 농가당 농지소유 상한을 진흥지역내 自耕農民에 한하여 20ha까지 확대하고(이를 위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임), 농지매매사업 지원규모도 과거 연간 2,500억원 수준에서 3,380억원 수준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한편, 과학영농의 기초가 되는 농수산물기술 혁신을 위하여 91년 현재 농업 총생산액의 0.2%(392억원)에 불과하였던 연구개발비를 지난해에는 0.33%(503억원), 금년에는 0.35%(586억원)로 늘렸으며, 96년까지는 0.5%(약 1천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쟁유망 농산물의 주산단지에서 지역특화작목 시험소를 설립하고(92년까지 10개소),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개선

농수산물의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산지에서 集荷·선별·포장·가공·저장 등을 일관처리할 수 있는 산지종합유통시설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금년에는 미국종합처리장 55개소, 청과물 유통시설 13개소 등을 확충하고 저온저장고 및 집하장의 경우도 92년에 각각 30개소, 50개소에서 금년에는 40개소, 72개소로 대폭 확대 건설할 계획이다.

대도시 공영농수산물 도매시장은 12개 대도시에서 19개 도매시장을 건설한다는 장기 목표 아래 지난해까지 서울 가락동·청주·대구·대전·광주·울산 등 6개소를 완공한 데 이어 금년에도 인천·수원·부산·전주·창원·춘천·구리 등 7개소를 건설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거래 및 품질에 따른 가격차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매시장 상장 경매제도·육류 도매등급제·주요농산물에 대한 品質認證制 등을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금년에도 산지가공공장 건설자금으로 202억원, 전통식품 개발에 39억원 등을 각각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농어촌소득원 다양화와 생활환경 개선

농어촌에 농수산업 이외에도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까지 농공단지 350개소, 농어촌특산단지 309개소를 건설하고 전업희망 농어민에 대한 직업훈련도 약 1만6천명을 목표로 실시할 계획이다.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定住生活圏 개발사업은 총 1,625억원을 투입하여 188개 면에 대하여 추진하고 이밖에 농어가 주택개량사업에 365억원, 농어촌 가로등 설치에 150억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어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에 48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노령 농어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農漁民年金制度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농어민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구조조정의 촉진

이상에서 광범위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은 정부의 정책의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및 농어민·생산자단체 등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어우러질 때에 비로소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특히, 각 지방의 입지여건과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즉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사업수행보다는 지역의 특성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적 성격의 사업집행이 이루어질 때 보다 효율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에서는 금년내에 「시·군단위 농어촌발전계획」의 수립을 완료하고 앞으로는 이 계획에 따라 지역주민이 스스로 결정한 투자 우선순위를 존중하여 지역별로 특성있는 사업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93년의 구조조정사업은 농촌일손 부족 해소와 같은 시급한 사업인 농업기계화, 시설현대화사업, 농어민의 호응도가 높은 저온저장고 설치 등 산지유통시설 지원 등에 보다 많은 예산이 배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금년내에 「시·군단위 농어촌발전계획」의 수립을 완료하고, 앞으로는 이 계획에 따라 지역주민이 스스로 결정한 투자 우선순위를 존중하여 지역별로 특성있는 사업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적인 측면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안, 「가공산업육성법」 제정안과 함께 「축산법」, 「양곡관리법」, 「낙농진흥법」 등도 금년내에 처리가 완결되어 농어업인력 육성제도·기술개발·양곡관리제도·농지제도 등 많은 개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구조개선사업 시행후 불과 1년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 그 효과를 평가하기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구조개선 관련 정부예산이 대폭 확대되고 각종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 있는 농수산업의 건설과 농어촌의 활력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반드시 이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꼭 다행스런 일이라 할 수 있다.

구조개선사업 시행 2년째를 맞는 금년은 이러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각종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제도적인 기반을 정비함으로써 구조개선성과를 가시화하고 보다 빠른 시일내에 구조개선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정부·농어민·생산자단체·소비자 등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住宅의 안정적 공급과 부동산투기 억제

주택 200만호의 성공적인 추진은 그동안 계속 악화되어 오던 주택보급률을 상승세로 반전시켰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도 91년 5월 이후 계속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주택시장도 정상기능을 회복하는 등 주택문제의 해결에 일대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성과는 주택생산능력이 증대되어 우리 경제에 주름을 주지 않고도 연간 주택수요 40만호를 초과하는 50~60만호의 주택건설이 가능해져 안정적 住宅供給時代를 열게 되었다는 점이다.



최종수

건설부 주택정책과장

을 위한 임대주택 및 청약저축가입자를 위한 공공주택과 소형분양주택의 공급에 중점을 두어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기간(92~96년) 중 총 127만호를 건설하고, 民營住宅도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을 현행 40%에서 지역실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한다.

2000년에는 주택보급률을 93%

수준으로 제고

주택금융제도를 정비하여 금융자율화 추세에 대응하면서 금융의 주택수급조절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주택기금의 公益의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주택기금에 대해서는 財政出捐 및 용자를 확대하고 국민연금기금 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장기·안정적인 재원을 조성해가며, 지원대상과 용자규모·용자기간 등도 개선하여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하면서 주택구입능력을 제고시켜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민간주택금융의 경우도 취급기관을 확대하고 금융재원을 확충하는 등 그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다주택보유를 억제하고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재산세를 합산 과세하고, 중·대형주택에 대해서는 重課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주택전산망을 보완·확충하여 전국의 주택소유에 관한 정

주택의 안정적 공급

이러한 안정적 주택공급의 기반 위에서 정부는 앞으로도 10년간 주택수요와 우리 경제능력을 고려하여 매년 50만호 수준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건설함으로써 2000년에는 주택보급률을 93%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核家族化의 가속화에 따른 가구규모의 축소에 대응하고 저소득층의 내집마련이 보다 쉬워지도록 소형주택을 중점적으로 건설하고, 중·대형주택에 대해서는 거래과세 및 보유과세를 강화하여 투기요인을 철저히 봉쇄하여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공공부문에서는 전용 18평 이하로 건설하되 주택구입능력이 부족한 저소득계층

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투 기억제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질서를 정착시키고 주택가격의 안정기반도 확고히 해나갈 것이다.

올해에는 50~60만호의 주택을 건설·공급

올해에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50~60만호의 주택을 건설·공급할 계획이다. 주택건설경기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건설물량이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작년에 建設景氣의 과열을 막기 위해 시행되었던 주택건설물량 할당제 등 건축규제를 해제하여 민간에서 우선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도록 할 것이다. 주택공사·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주택 및 소형분양주택을 건설하여 청약저축가입자의 적체해소와 저소득층의 내집마련 기회의 확대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建設物量은 20~25만호 수준에서 민간부문의 건설추이를 보아가며 신축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 공공주택제도의 개선

이와 아울러 92년부터 건설하기 시작한 공공주택의 관련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주택은 영구임대주택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저소득 청약저축가입자 등 법정영세민의 차상위 계층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정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여 96년까지 분양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현재 주택가격의 30~40%인 국민주택기금의 지원폭을 확대하고, 금리도 인하함과 아울러 20년 이상 장기융자해주는 등 대출한도와 대출금리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고자 한다.

15만호, 임대 10만호 등 25만호를 공급하는 프로그램이다. 公共住宅 중 임대주택은 당초 계획대로 활발히 건설되고 있으나 분양주택은 주택의 규모가 너무 작아(전용 12평 이하) 수요계층의 선호에 맞지 않고 자금지원 수준도 낮아 건설이 다소 부진하였다. 이에 따라 93년에는 공공주택 건설의 활성화와 수요계층의 수요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규모와 유형을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등 이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공공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은 소형분양주택과 통합하여 건설토록 하고 전용 18평 이하로 규모를 확대하되, 저소득 청약저축가입자를 위한 소형분양주택의 공급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비율 이상을 전용 12평 이하로 건설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주체를 확대하여 현재는 大韓住宅公社와 지방자치단체만이 건설해 오던 것을 민간사업자에게도 건설을 허용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주고, 주택의 규모도 전용 12평 이하에서 전용 15~18평 이하로 확대하여 수요계층의 선호에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

■ 근로자주택의 활성화

저소득 근로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고 산업평화의 정착을 위하여 90년부터 도입된 근로자주택 건설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근로자주택의 규모가 너무 작아 근로자들이 입주를 기피함에 따라 주택규모를 수요에 맞추어 전용 18평까지 확대하고, 사원임대주택

〈표 1〉 주택건설 추이

(단위 : 천호, %)

	80~87년(평균)	88년	89년	90년	91년	92년(추정)
주택건설실적	219	316	462	750	613	540
주택 보급률	69.2	69.4	70.9	72.1	74.1	76.0

〈표 2〉 93년도 주택공급계획

(단위 : 만호)

	92년 실적(추계)	93년 계획
공공부문	19	20~25
민간부문	35	30~35
계	54	50~60



에 대한 호당 용자액을 인상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입주자조건을 완화하고 입주대상을 확대하며 입주대상 직종도 현재는 제조업·청소업·운수업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이를 제조업 관련직종에까지 확대하여 형평을 기할 계획이다.

그리고 근로자주택 건설에 따른 戶當 국민주택기금 용자액을 상향조정하고 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감면혜택을 확대하여 근로자주택을 건설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방안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 임대주택 건설의 활성화와 사후관리의 강화

저소득 賃借家口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이동의 증가에 따른 임대주택수요에 대응해 나가며, 주택을 소유에서 거주개념으로 전환하는 등 賃貸文化의 정착을 위하여 민간임대전문업을 적극 육성하고 민간의 임대주택 건설도 촉진해 나갈 것이다. 임대전문업자제도는 일정호수 이상의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를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임대료·임대보증금·임대기간 등 임대조

건을 통제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써, 93년중 賃貸住宅建設促進法令을 개정하여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의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민간의 참여를 허용하고,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따른 분쟁의 해소를 위하여 분양조건을 임대계약시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그리고 공공에서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임대주택의 不法轉貸行爲와, 무자격자의 입주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주택의 관리도 개선해 나갈 것이다.

■ 소요택지의 원활한 공급

93년중 주택건설에 소요되는 택지는 총 1,600만평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 약 60%인 1천만평은 공공에서 개발·공급하고 나머지는 민간의 나대지 등을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93년부터는 민간의 택지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규모지구에 대하여 公共·民間의 합동개발을 확대하고, 재개발·재건축도 적극 추진하여 기존 토지이용의 효율성도 제고해 나갈 것이다.

택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지역별 주택수요에 맞추어 택지를 개발해 나가는 한편, 특히 서울·부산 등 택지가 부족한 지역은 동시생활권을 중심으로 인근지역의 택지를 廣域的으로 개발함으로써 이들 지역의 택지부족에 대처해 나가고자 한다.

■ 주택금융의 확충과 지원체계의 개선

정부는 서민주택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92년과 비슷한 수준인 총 7조원의 주택자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國民住宅基金의 장기안정적인 수입원 확충을 위하여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연금기금 등으로부터의 예탁규모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금융시장의 자율화에 발맞추어 현재 주택은행에만 의존하고 있는 민영주택자금의 지원기관을 다변화하고 지원액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현재 주택가격의 30~40%인 국민주택기금의 지원폭을 확대하고, 금리도 인하함과 아울러 20년 이상 장기융자해주는 등 대출한도와 대출금리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고자 한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내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속칭 '달동네'에 대하여 주민이 기존의 생활터전을 유지하면서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기존주택의 개량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전국 502개 地區를 지정하고 89년부터 99년까지 16만2천호의 주택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93년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전국적으로 재조사하여 도시의 외연적 확산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지역을 조사하여 지정하고, 99년까지 끝내려던 당초계획을 1년 앞당겨 98년까지 개량하도록 연도별 추진계획을 다시 조정할 계획이다.

올해에도 현재 마련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사전예방 위주로 철저한 투기억제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투기를 완전 차단하고 부동산가격의 안정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부동산투기의 억제

그동안 200만호 계획에 따른 주택공급 확대와 土地公概念 등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제반시책을 착실히 추진해온 결과, 92년의 부동산시장은 가수요가 사라지고 투기적 거래가 크게 줄어들었으며 지가상승률이 2/4분기부터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본격적인 안정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시장의 안정기조, 93년에도 지속될 전망

이러한 부동산시장의 안정기조는 93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91년을 頂点으로 부동산시장이 4~5년 주기의 하강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주택건설물량이 50만호를 넘고 실제입주물량도 57만호에 이르러 주택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新都市 입주물량이 작년보다 60% 정도 증가한 7만6천여호로 최대수준에 이르러 수도권 집값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93년에도 경제안정화시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물가·통화량 등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변수들도 안정될 전망이어서 주택수요를 뒷받침할 만한 자금여력도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동산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잠재해 있고 투기심리도 완전히 불식된 것은 아니며, 5대 신도시 분양이 마무리되는 등 가격의 불안요인 또한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에도 현재 마련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사전예방 위주로 철저한 투기억

제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투기를 완전 차단하고 부동산가격의 안정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에서는 분야별로 투기억제를 위한 대책을 살펴본다.

주택공급질서 확립으로 투기발생 사전봉쇄

주택분야에서는 그동안 청약제도개선 등 관련 제도를 착실히 정비하여 신도시에서의 채권입찰제의 확대실시, 1가구 2주택 및 대형주택 소유자에 대한 1순위 청약제한, 전국적인 주택전산망 구축, 상설투기대책반 편성·운영 등 투기억제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제도상 거의 완벽한 체제를 갖추고 있다. 아울러 92년에는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여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입주예정일로부터 60일간 전매·전대를 제한하여 투기적 거래를 금지하였으며,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청약관련 저축 증서나 당첨권의 매매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상의 미비점도 대폭 보완하였다.

이에 따라 93년에는 관련제도가 정비되어 있는만큼 현행 제도의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방지장치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92년 3월 建設部에 설치된 상설투기단속반의 운영을 강화하여 투기우려지역에 대해 사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투기발생을 사전 봉쇄하는 한편 위법행위를 철저히 적발해 의법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투기의 주요수단이 되었던 재개발지역 주민들에게 주는 입주권의 불법거래자, 민영주택의 전매자 등을 철저히 색출하여 공급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고, 주택전산망의 운영을 내실화하여 부정당첨자 적발기능을 제고시켜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내무부에서 추진중인 주민등록전산화가 완료되는 대로 이를 주택전산망과 연결하여 가구별 주택전산화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제도개선과 단속활동 통해 토지투기 억제

토지분야에서는 92년도가 양대선거의 실시에 따라 부동산시장의 불안요인이 클 것으로 보고 종전의 사후단속 위주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전단속으로 전환하여 단속을 강화하였고, 투기조짐의 신속한 파악을 위하여 동향감시반과 投機豫告指標를 운용하였다. 또한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地價가 상승되거나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여 거래질서를 확립하였고, 허가를 받은 토지가 취득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일제조사하여 未利用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토지는 유휴지로 조치하고 전매한 토지는 국세청에 통보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을 넓혀 적용범위를 1천평 이상에서 도시지역은 500평 이상의 사업에까지 확대하였고 택지조과소유부담금을 철저히 부과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였다.

올해에도 토지공개념제도 등을 비롯한 토지제도를 개선하여 투기억제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투기예고지표를 활용하여 투기단속활동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택지소유부담금의 부과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현재 개발부담금제의 부과기준이 착수시점은 공시지가, 완료시점은 감정가격으로 하여 부담금을 산정하고 있는 것을 公示地價 또는 감정가격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형평을 도모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가 취득목적대로 이용되도록 사후관리 장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토지를 필요로 하는 자가 토지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거래허가 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투기예고지표에 의한 예비적 차원에서 투기단속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전속중개제도를 도입하여 부동산 정보망을 구축하며, 무허가 중개업자에 대해 실효성있는 단속활동을 펴므로써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국제경제질서 변화에의 능동적 대응

80년대 들어 세계경제는 국가별 무역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성장도 둔화되면서 60~70년대를 주도해 왔던 자유무역 질서가 크게 동요되기 시작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중심으로 다자체제 자유무역질서의 再創出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면서 선진국의 통상압력 행사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하동만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총괄과장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

우루과이라운드 등 다자간협상과 쌍무적 통상 문제의 범위도 과거 상품 위주에서 이제는 금융·유통 등 서비스산업 개방, 지적재산권 보호 등 교역이 가능한 거의 모든 분야가 협상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무역관련 국내절차도 국가간 협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지구환경보전을 이유로 한 교역상의 제약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2~3년간 급속하게 전개된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는 세계질서를 '理念競爭'으로부터 '經濟力 경쟁' 중심으로 전환시켰으며, EC·NAFTA 등 인접국가끼리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지역경제권 형성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는 우리 경제에 負擔과 機會를 동시에 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개방을 확대해야 하는 취약분야에 있어서는

보다 빠른 속도의 추가개방 부담을 안게 되고, 국내제도의 개선에 대외여건을 보다 많이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반면 우리 경제의 궁극적인 목표가 선진경제를 이룩하는 데 있고 선진경제의 실현에는 개방의 확대, 제도 및 慣行의 선진화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면 대외여건의 능동적 수용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될 것이다.

금년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지역주의, 국가별 통상마찰 등 여러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정리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과거 개발연대에 우리 경제가 한꺼번에 많은 일들을 압축해서 이루어낸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선진경제로 진입해야 하는 단계에서도 이들 급격한 대외여건의 변화를 다른 어느 나라보다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만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내실있는 경제기반의 구축과 개방화·국제화의 추구

대외경제정책은 기본적으로 대내경제의 건설성을 바탕으로 할 때만 그 실효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예상되는 극심한 대외경쟁으로부터의 도전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안정의 토대 위에서 '개방화·국제화' 전략을 착실하게 진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과거 개방정책은 주로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능동적으로 개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대외통상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금융 등 서비스분야·외국인 투자 등 모든 분야에서 종합적이고 단계적인 개방정책을 수립·추진해 나가야 하며, 개방정책에 따른 직접적 보완대책은 농업 등 취약분야 외에는 지양하고 개방정책을 산업구조조정 촉진의 주요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경제운용의 선진화는 물론 제도와 관행도 국제규범에 일치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후속대책의 추진과 90년대 후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산업에 대한 지원, 각종 수입제한조치 및 절차 등을 선진화시켜야 한다. 또한 비합리적인 국내제도의 운영은 우리의 對外 信賴性을 저하시키고 이는 결국 경제능력의 향상을 저해하므로 제도와 관행을 국제규범에 일치시켜 국내제도의 합리화를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개방의 확대나 제도의 개선만으로 선진화는 이룩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양적 성장과 함께 국민의식도 선진화되어야 명실상부한 선진경제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국제경제질서 재편에의 적극 대처

현재 국제경제질서 형성을 주도하고 있는 나라들은 미국·EC 등 선진국이다. 개발도상국들도 77그룹 등을 통하여 自國의 이익을 반영시켜 나가고 있는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중간에 위치한 우리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中間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역할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우리의 實益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능동적으로 개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대외통상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경제운용의 선진화는 물론 제도와 관행도 국제규범에 일치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91년 12월에 제시된 둔켈 GATT 사무총장의 최종 협정문안에는 회색조치의 4년 이내 철폐, 긴급수입 제한조치, 반덤핑조치 발동기준 명료화 등 우리의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농산물 등 우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분야에 있어서는 협상 마무리 단계에서 우리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집중시킬 것이다. 특히 쌀 등 기초식량의 관세화 예외인정, 관세인하 및 보조금 감축에 있어 장기이행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균형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둘째, 지역주의 동향과 관련하여 전세계 국가를 상대로 무역증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우리로서는 GATT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 질서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에 최대한 기여해 나가는 한편, EC·NAFTA 등 지역경제 통합이 역외국에 대한 차별화로 발전되지 않도록 공동이해관계국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EC·NAFTA 등 지역경제권 형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들 개별 지역경제권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하여 분야별 대책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셋째, 아·태 경제협력회의(APEC)에서의 역내무역자유화에 적극 참여하여 동기구가 블록화 되지 않으면서 자유무역을 신장시켜 나갈 수 있는 모범적 기구가 되도록 기여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地域主義 경향이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될 경우에 대비하여 지역협력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은 상황에서 우리의 진로에 대한 종합적 대안도 모색할 것이다.

넷째, 앞으로 본격화될 지구환경관련 국제협상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대외협상 및 국내 대응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GATT·OECD 등 국제기구에서 다루어질 환경보전을 이유로 한 국제무역규제 움직임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특히 선진국의 무역규제는 우리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다. 국제적인 자원보호 및 절약 움직임과 관련한 국제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도 자원재활용 촉진, 수산자원 및 산림자원의 보전·육성 등 자원절약형 산업구조 구축을 위한 장기적 계획도 마련할 것이다.

주요 무역상대국과의 통상교섭 및 경제협력 활성화

美·日·EC시장 진출 확대 도모

미국의 경우 클린턴 신정부도 기본적으로는 부시 행정부를 포함한 과거 미국통상정책의 기초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민주당이 의회와 신정부를 동시에 장악하게 됨에 따라 수퍼 301조의 부활 등 보호주의적 대외통상정책의 추진이 우려되고 있다

미국과는 한국경제와 한·미관계에 대한 실상 전달 노력 등 對美 경제홍보를 강화하고 전통적인 한·미간 우호 협력관계가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통상외교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특히 양국간 무역의 균형이 이루어진 상황을 바탕으로 한·미간 산업기술정보의 교환, 외국인투자 기업의 토지취득제도 개선 및 금융기회 확충 등 양국간 기업환경개선협약(PEI) 결과를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한 단계 높은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일본과는 92년 양국정상회담후 설치한 산업기술협력재단 사업을 통하여 우리 중소기업으로

기술이전이 최대한 이루어지도록 인력교류를 확대하고, 일본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우리 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일본이 斜陽産業 보호 차원에서 유지하고 있는 각종 관세·비관세 장벽의 철폐를 위한 다자간 및 쌍무적 노력을 지속하여 일본시장 진출 확대를 도모할 것이다.

EC와는 93년초부터 본격 실행단계에 진입할 EC시장 단일화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협력협정 체결, 규격 및 인증에 관한 상호 인정협정 체결 등 각종 제도적 장치를 확충하고 기체결된 과학기술협력 약정을 바탕으로 EC의 주요 공동연구계획에 선별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특히 주요 선진국과 균형있는 통상협력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對EC 통상마찰의 소지를 예방하고 우리 기업의 EC시장 진출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중국·아세안 국가와의 경제교류 확대

우리의 주요한 교역상대국으로 등장하고 있는 중국과는 항공협정·해운협정·이중과세방지협정 등 경제관련 협정의 조속한 체결로 경제협력 기반을 확충하고 양국간 무역의 확대·균형을 도모할 것이다.

對中國 건설업 진출과 관련하여 원부자재·기술설비 수출을 확대하고 중국의 소득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고급소비제품 수출시장 개척활동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최근 우리와 경제교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와는 교역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투자진출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아세안국가들의 고도성장에 따른 자본재, 원·부자재 수요 증대와 아세안 신흥공업국들의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재 수요증가를 겨냥해 교역증대를 도모하고, 해외투자를 안정적 자원 확보와 경제협력을 심화시킬 수 있는 분야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것이다.

舊社會主義 경제권 중 러시아·東유럽국가들은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과정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나, 우리와는 자원·기술면에서 상호보완적인 경제협력이 가능하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제협력을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특히, 정치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시장경제체제 도입을 추진함으로써 동남아 신흥공업국의 하나로 부상이 예상되는 베트남과는 국교수립을 계기로 경제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우리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후발開途國으로부터 각종·유·무상협력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세계 경제에서의 응분의 책임수행과 우리 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개도국에 대한 公의 개발원조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對開途國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기술협력을 위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유기적 연계체제를 확보하여 실효성있는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대개도국 지원에 대한 심사·평가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원 시책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갈 것이다.

남·북 경제협력의 본격화

우리는 그동안 舊 사회주의국가들의 체제변화가 이루어지는 세계질서 속에서 북방정책을 능동적으로 추구함으로써 동북아 정세의 개선을 바탕으로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기반을 다져왔다. 88년 이후 홍콩·중국·일본 등 제3국을 경유한 간접교역 위주로 물자교류가 증가하고 남북고위급 회담의 개최로 92년에는 남북 기본합의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부속 합의서, 남북경제교류협력 공동위원회 구성에 합의하였으나 최근에는 핵사찰 문제 등으로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에 있다. 그러나, 북한경제의 어려움과 국제적인 고립탈피를 위한 미국·일본과의 관계개선 필요성 등 남북경제교류에 대한 북한측의 필요를 고려할 때 南北經協의 가능성은 크다 할 것이다.

앞으로 '남북경제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제교류협력사업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할 것이다. 清算計定을 설치·운영하고, 직수송 해로를

선진경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대내적으로 정부·기업·국민 모두가 개방화를 적극적으로 수용·克服해 나갈 수 있는 태세를 갖추으로써 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수지 흑자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세계를 상대로 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對外經濟戰略을 수립,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개설하며, 경제정보 상호교환 및 상담을 위한 경제상담소를 설치·운영하여 현재의 간접교역체제를 直交易體制로 전환되도록 추진할 것이다. 또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해결절차, 산업재산권 보호 등 경제협력사업 추진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제도적 장치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공업분야의 시범 합작투자사업, 지하자원의 조사 및 공동개발 등 협력사업도 실행가능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할 것이다.

급변하는 국제경제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는 경제력에서 뿐만 아니라 제도·관행면에서도 선진경제를 이룩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통일을 실현하는 한편, 세계 및 동북아에서 우리의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내적으로는 정부·기업·국민 모두가 개방화를 적극적으로 수용·극복해 나갈 수 있는 태세를 갖추으로써 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수지 흑자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세계를 상대로 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외경제 전략을 수립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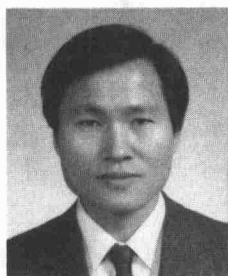
따라서 정부는 '세계속의 한국'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내실있는 대내경제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외경제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환경정책의 재정립

지난 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환경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리우선언은, 이제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을 재정립하지 않으면 안될 근본배경이 되고 있다. 우리가 리우선언에서 명심해야 할 대목은 대내적으로는 소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념을 실현하는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환경이 무역규제 수단으로 등장하는 국제현실 속에서 어떻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하는 과제로 압축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환경정책은 개별공해배출기업을 중심으로 규제하고 관리하는 미시적 접근방법에 주로 의존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개별기업이 준수하고 있는지에만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는 방식이다. 그러나 시각을 바꾸어 일정지역에서 배출되는 汚染總量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지역의 환경용량이 소화할 수 있는 것인지에 초점을 두어 접근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기존의 법규 및 행정력에 의존하는 직접규제방식에서, 가격기능이나 시장기능의 도입을 중심으로 하는, 그리고 환경기술개발을 본격화하여 이를 정책에 연계시켜 나가는 간접규제방식으로 정책의 중심이 옮겨져야 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환경정책을 다



정혁진
환경처 정책조정과장

시 가다듬기 전에 몇가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環境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구현

모든 개발행위나 개발계획, 그리고 개발정책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開發'과 '保全'이라는 개념이 통합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올해중 제정될 예정인 「環境影響評價法」에는 영향평가비용을 개발프로젝트에 반드시 반영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시·도 등이 사업승인을 해줄 때 환경처와의 영향평가협의 결과를 사업승인내용에 반드시 반영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사업정지나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기준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여, 개발프로젝트별·산업체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급하는 일도 금년의 주요과제가 되어야 할 것 같다. 기술적으로는, 우선 우리나라의 환경용량에 대한 정확한 조사, 생태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환경용량의 조기조사 및 이러한 환

경용량을 유지할 수 있는 개발제한 또는 오염물 질배출량 제한 등의 조치들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투자재원 조달방안의 재검토

환경예산 連動제의 실시

환경투자재원을 조달하는 방안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경우 환경투자를 아직 사회 간접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자치단체 고유영역으로 미루고 있어 예산편성 우선순위에서 뒤지고 있는 실정이다. 설령 환경투자의 우선순위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가용재원의 한계로 인해 환경부문 세출예산의 급격한 증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전체 세출예산규모 對比 일정률 또는 환경기초시설 연차별 확충률 등과 연계하여 환경세출예산을 편성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환경 國·公債의 발행

환경투자는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킨다는 차원에서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도로·항만의 경우처럼 기본수요가 충족될 때까지는 막대한 투자소요가 있으나 일단 충족되고 나면 유지보수 비용만으로 충분하다.

예컨대, 중기계획이 완료되는 97년 이후부터는 기본수요가 대부분 충족되어 투자소요는 급격히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91년	96년
하 수 처 리 율	33%	65%
일반폐기물 위생처리율	27%	90%

공채나 차관은 일시에 대규모 투자소요를 조달하고 장기간에 걸쳐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므로 사회간접자본 소요비용을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에 분담시키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環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기존의 법규 및 행정력에 의존하는 직접규제방식에서, 가격기능이나 시장기능의 도입을 중심으로 하는, 그리고 환경기술개발을 본격화하여 이를 정책에 연계시켜 나가는 간접규제방식으로 정책의 중심이 옮겨져야 할 것이다.

境公債 및 차관도입에 의한 투자재원조달을 가능케 하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본다.

특히, 중기계획기간 동안은 지방비 부담 압박이 심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당장 재정부담 없이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기초시설에 先投資하고 나중에 이를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갚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생산·제조시설물에도 총량부담금제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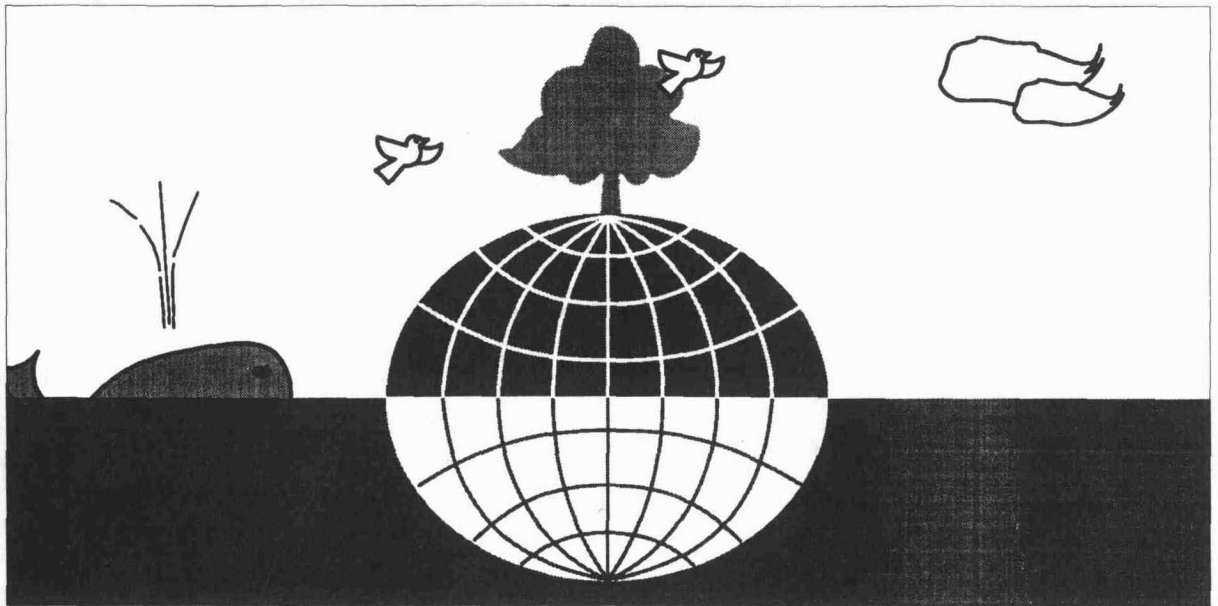
현행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은 유통·소비시설물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악성 오염물질을 배출하고도 배출허용기준 이내라는 이유로 사실상 부담을 하지 않는 생산부문과의 형평상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유통·소비부문에 추가하여 생산부문까지 배출총량에 대해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大氣環境保全法 등 각 개별법에서 규정된 배출부과금제도를 폐지하고 이들을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일괄 규정하는 것도 그 한 방법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할 경우 생산·제조시설에도 수질·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에 부과하게 되어 현 개선부담금보다 훨씬 큰 규모의 재원조달이 가능해질 것이다.

폐기물분야의 부담금체계 정비

폐기물 부담금체계도 폐기물 회수예치금 대상 품목을 축소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빈병 등 극히 일부품목에 한하여 회수예치금



제를 적용하고, 폐기물부담금 적용대상 제품을 확대하여 이 財源으로 부담금 부담업체가 배출하는 폐기물 처리사업비에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의 쓰레기처리 수수료는 쓰레기처리비용의 10% 수준에 불과하여 폐기물배출량을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는 쓰레기수거료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행 고정률제도를 수거량기준제도나 수거서비스기준제도로 전환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環境稅의 도입

환경기초시설 투자소요는 막대하나 이를 모두 일반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은 현행 재정구조하에서는 어려움이 많다. 그러므로 현재 난립되어 있는 각종 환경관련 부담금 등 준조세를 간명하게 일원화하여 보다 체계적·능률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국민이 일용 환경오염자라 볼 수 있고, 기업에 대한 부담금도 결국 가격에 전가되어 일반국민이 부담하게 되므로 이를 일반국민이 알기 쉬운 환경세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세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방위세나 교육세

처럼 한시적 目的稅로 하고 또한 환경기초시설 투자가 집중되는 기간, 예컨대 1993~2001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상정할 수 있다.

환경세는 환경비용부담체계를 간소화하고 충분한 재원조달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조세부담률 증가로 인한 조세저항, 공평과세 실현 곤란 및 기업의 오염배출노력을 둔화시킨다는 단점도 있다.

환경처에서 환경세 도입여부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용역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는 금년 5~6월경이 되어야 확실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투자비용 부담방식의 재검토

한번 오염된 환경을 원상회복시키는 데는 오랜 기간과 엄청난 투자비용이 소요된다. 英國의 테임즈강을 연어가 살도록 회복시키는 데 20년의 세월과 천문학적인 투자가 이루어졌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오염물질이 환경에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생산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그리

고 발생된 오염물질을 제로상태로 줄이는 것은 오늘날의 첨단기술을 가지고도 불가능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경제적 비용이 엄청나다. 현실적으로 환경용량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어느 정도의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허용범위를 어느 정도 엄격하게 정하느냐 하는 것은 각국의 기술적·경제적·정치적 여건에 달려 있다. 중요한 것은 환경자원을 지속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염물질이 가능한 한 환경용량 이내로 배출되도록 저감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먼저, 기업이 오염시키는 뭇은 기업이 그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주민이 오염시키는 뭇은 재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이 汚染者負擔原則에 부합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경우는 상품판매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그리고 재정의 경우는 세금을 통하여 일반주민에게 최종부담이 전가될 것이다.

기업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근본이유는 수혜자인 소비자를 위한 것이므로 수혜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따라서 기업은 환경비용을 가격에 전가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수익에서 이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기업의 이러한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稅制·金融支援을 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일반주민들에 의하여 발생하는 생활하수 및 쓰레기의 적정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 및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소요되는 방대한 투자자원을 일시에 주민들의 호주머니로부터 조달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이들 시설들은 한번 설치되면 20~30년간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공채발행이나 起債를 통하여 현재의 투자소요를 충족시키고, 그 원리금 상환은 20~30년에 걸쳐 분할상환해 나가는 방식으로 미래세대에게도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투자자원의 최적배분 문제

공공투자를 위한 환경투자자원은 정부재정과

올해에는 우선 법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92~96년)의 추진상황을 평가·분석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시 동분석결과를 반영하는 등 환경개선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각종 부담금이 주요원천이다. 정부재정이라고 하여도 地方讓與金은 93년도에 경우 2,500억원인데 이미 하수처리장·분뇨처리장 설치 및 하천정화사업에 사용하도록 法에 명시되어 있다. 국고에서는 약 800억원이 책정되어 광역매립지 건설 및 기타 경상사업비에 지원된다. 이 밖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설치된 폐기물관리기금(93년 약 500억원)은 폐기물재활용산업을 중점 지원하고 있다.

91년 12월 31일 제정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금년 2월부터 부과·징수된다. 매년 약 1천억원 정도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 부담금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개선 중기계획 사업을 중점 지원하게 된다.

이와 같이 현재 환경투자자원의 배분은 재원별로 이미 꼬리표가 붙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환경투자자원이 적정 배분되고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 한정된 환경투자자원을 최적상태로 배분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환경오염을 제거하여 환경편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환경투자자원 최적배분 매커니즘을 발굴·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대기·수질 및 폐기물분야 간에 환경투자자원이 균형배분되고 있는지 즉, 이들 분야간의 오염제거 한계비용이 균등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大氣의 경우 대기오염원 간에, 그리고 水質의 경우 수질오염원 간에 오염제거 한계비용이 균등하게 배분되고 있는지 검토가 이루어



어저야 할 것이다.

셋째로, 각 대도시 지역간 및 하천별로 한계 비용이 균등하게 배분되고 있는지도 검토하여 지역간 재원배분에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기술의 위상 강화

장래 환경문제 해결의 성패는 기술개발에 달려 있다.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생산공정에서 원천적으로 봉쇄 또는 격감시키는 기술의 개발이야말로 환경문제 해결의 최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제품을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하는 생산기술의 개발에만 온갖 투자를 집중시켜 온 반면, 생산에 수반되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원치 않는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기술 개발 투자에는 인색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환경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환경에 우호적인 생산기술을 제도화하는 것이 생산원가를 절감하여 오히려 기업에 이익이 되는 시점에 다다른 것이다.

이렇게 환경에 우호적인 생산기술을 도입하고 그러한 생산공정으로 전환해 나간다면, 환경오

염물질 처리를 위한 환경투자소요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 한가지 중요한 기술개발분야는 再活用技術이다. 오염물질을 무해한 물질로 처리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오히려 오염물질을 다른 용도로 재활용하여 처리비용의 절감뿐 아니라 자원절약효과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환경행정에 자연과학과 경제학 등 인문·사회 과학분야의 접목이 필요한만큼, 환경기술을 환경관리와 환경정책분야에까지 연계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환경기술의 효능성과 그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환경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비를 증대시키고, 환경기술 개발을 제도적으로 선도하는 전인차 역할을 할 環境技術開發院을 본격 가동하게 될 것이다.

환경권문제의 대두

環境權을 누가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에 대해 게임의 룰을 정립하는 것은 21세기를 향한 환경정책의 주요 과제 중의 하나이다.

현재의 배출허용기준제도는 아직도 기업에게 환경오염권을 부여하고 있는 좋은 예이다.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부여되는 것이다. 그러나 금년 2월에 부과·고지되는 유통·소비시설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배출허용기준 이내라도 부과대상이 된다.

배출허용기준제도는 기본적으로 허용기준이 일정농도로 표시되므로 물을 많이 쓰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간에 환경권행사의 불공평이 생긴다. 똑같은 농도 100ppm이라고 할지라도 물을 많이 쓰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몇배나 더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공공재를 오염시키면서 똑같은 환경권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한테 한푼의 보상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따라서 그냥 면책특권을 부여할 것이 아니라 오염시키는 권리를 오염농도가 아니라 오염부하량에 따라 부여하는 대신, 거기 상응하는 대가를 그 기업이 속한 市나 郡이 징수하여 이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환경개선 투자재원으로 활용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렇게 市나 郡으로부터 부여받은 환경권은 同種 기업간에 거래될 수 있도록 하여 신규로 입주하는 기업은 반드시 환경권을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을 시나 군단위에서 총량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주민들과 기업간의 환경권 행사가 균형을 이루게 되어 소위 넘비현상이 사라지고,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을 원할 경우는 기업으로부터 보다 많은 환경권을 구매하여 폐기처분하면 될 것이다.

올해의 환경정책 운용방향

올해에는 우선,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92~96년)의 추진상황

을 평가·분석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 수립시 동분석결과를 반영하는 등 환경개선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중기계획상의 투자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환경투자재원의 조달 방안으로 환경세 도입, 각종 부담금 체계 재정비 등 기존의 환경투자재원 조달 관련제도를 재검토하여 획기적인 환경투자 확충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이 도출되는 환경투자재원의 합리적인 관리방안도 아울러 강구할 계획이다.

環境適合性 평가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그동안 연구용역사업에 의해 개발된 환경적합성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금년중에는 우선 각 지방자치단체별 시책 및 개발사업의 환경훼손도 또는 환경적합도를 시범적으로 평가·분석할 것이다.

또한 환경영향권별로 주민·기업·정부가 지역 환경개선계획을 공동으로 수립·집행하는 영향권별 환경관리를 정착시켜 나가고, 대기·수질 등 각 부문별 환경보전대책을 지역 특성에 맞도록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개선효과가 가시적으로 거양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중인 경기도 용인군 및 경북 포항시 지역의 환경보전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제도운용과정에서 야기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자연환경보전대책기능의 종합조정 등 자연환경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장기기본계획(94~2003년)을 수립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地球環境綜合對策의 지속적·효율적 추진, 지구환경규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지속개발위원회(CSD) 활동에의 적극 참여 및 유엔개발계획(UNDP)과의 협력사업 추진 등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의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각종 국제환경협약에 대한 대응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다. 

과학기술의 혁신

對內外的으로 일고 있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경제가 2000년에 이르러 1인당 소득 1만5천달러 수준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과학기술의 도약에서 경제의 성장요인을 찾지 않으면 안된다. 뛰어난 우리만의 기술을 담고 있는 고품질 상품만이 세계시장에서 독점적인 수요를 창출할 수 있으며, 풍요한 우리 사회의 삶의 質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이 경제전반에 확산되어야 한다.

93년도 경제운용 전반에서 '科學技術의 革新'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어야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올해에는 전략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본격적 추진, 민간기업의 산업기술개발 촉진, 기술개발의 국제화, 정부·공공부문의 과학기술투자 확대,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확대에 중점을 두고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전략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본격적 추진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중·장기적인 기초기술과 민간이 담당하기는 부적절한 공공복지와 환경 관련기술을 개발한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연구개발사업으로는 92



김덕제

과학기술처 기획예산담당관

년도에 이미 착수한 11개 핵심 선도기술개발사업(G7 프로젝트)을 지속적·발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93년도에는 政府 1,462억원, 정부투자기관 606억원, 민간기업 1,983억원 등 총 4,051억원을 투입하여 신의약·신농약, 첨단생산시스템, 첨단소재기술 등 10개 사업의 2차연도 연구개발에 들어가고, 256메가D램을 선진국과 동일시점(98년)에 양산·출하한다는 목표

아래 금년 상반기까지 세부개발계획과

部處別 투자계획을 확정하여 추가로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G7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서 연구개발 효율 및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기업이 일정비율 이상 투자하여 공동개발하는 체제를 장려하고, 연구개발 결과의 기업화 설비투자에 대한 금융지원과 조세감면을 확대함은 물론 연구사업의 엄격한 관리와 평가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둘째로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농업의 개방화를 기술혁신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부가 추진중인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 중·장기 계획'을 범부처적으로 지원하여 농업구조조정 10개년계획을 뒷받침하고, 농업기계화·농산물 가공 기술개발사업을 과학기술처·농업진흥청 협동으로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나아가서 유전

공학기술을 이용한 종자개량·병충해 제거·신작물에 대한 기술 등을 특정연구개발사업비에서 12억원을 투입하여 집중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셋째로, 리우회담을 비롯한 세계적인 地球環境保全運動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오존층 파괴물질의 대체물질 개발 및 회수정제기술을 관련 산업계의 참여하에 과기처·상공부 공동으로 앞당겨 개발할 계획으로 있다.

끝으로, 에너지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92년에 수립한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에 입각하여 93년에는 액체금속냉각로 개발의 19개 정부주도과제에 881억원, 개량형 핵연료 개발의 13개 산업체 주도과제에 549억원 등 총 1,430억원을 투입하고 연료전지·석탄가스화 복합발전기술 등 깨끗한 代替에너지원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기업의 산업기술개발 촉진

정부는 기술개발활동의 주역인 민간부문에서의 기술개발투자를 높일 수 있도록 金融·稅制·産業現場人力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 확대를 통하여 세계일류 기업기술 개발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첫째로, 한국종합기술금융(주)의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를 92년 1,800억원에서 4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이의 90% 이상을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93년 3월부터 기술개발福券을 발행(93년 총 2,050억원 계획)하고 공공자금 예수와 채권발행을 확대하여 기술개발 금융지원을 뒷받침하며, 금융지원 심사요원의 기술평가능력을 제고하여 담보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성 위주의 자금지원 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둘째로는, 92년 세법 개정시 대폭 확충한 바 있는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실효성있게 운용하여 기업의 기술혁신을 간접적으로

올해에는 전략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본격적 추진, 민간기업의 산업기술개발 촉진, 기술개발의 국제화, 정부·공공부문의 과학기술투자 확대,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확대에 중점을 두고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유도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과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연구시험용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특별상각시 이를 일반고정자산 투자와 분리 적용하는 동시에 耐用年數의 단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감면 연구개발용품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통관절차도 대폭 간소화시키는 한편, 제조업과 직결되는 技術用役業 및 소프트웨어業에 대한 소득표준율이 제조업 수준으로 인하되도록 적극 유도할 것이다.

셋째로, 신기술의 기업화와 國產 신기술제품의 시장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술집약제품에 대한 종합낙찰제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기술성 위주의 중기구매 예시제도의 활용을 촉진하는 등 정부·공공기관의 국산 신기술제품 구매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그뿐 아니라, 국내에서 개발된 우수 신기술에 대한 인증마크제도를 도입하여 제품과 기업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신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1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개발성과 목록을 93년 2월말까지 조사하여 전국의 중소기업에 제공하고, 당해 기술을 보유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연간 총 60억원의 후속개발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조성중인 대전과학산업단지에 기술창업지원센터(TBI)를 설치하여 첨단기술집약

형 創業 소기업에게 대덕연구단지에서 산출된 신기술과 연구인력·정보·장비 및 창업부지를 제공하여 일정기간후 사업화 성공여부를 심사하여 졸업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미래성장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92년에 시범 착수한 한국과학기술원의 기술혁신센터(TIC)도 적극 지원하여 활성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신기술 기업화를 위해서는, 92년 12월 한국중합기술금융(주)에 설치한 '연구개발실용화사업단'에 8억원을 투입하여 신기술의 기업화 斡旋·仲介 등을 시범적으로 추진한 후, 94년 이후 별도 法人化하여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넷째, 연구개발조직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리법인 연구소에 대하여 조세·금융·병역 특례 등에서 기업부설연구소에 준하는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연구소용 부지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 판정기준을 완화하며, 산업기술연구조합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기술개발의 국제화

기술개발의 국제화는 한정된 국내 연구자원의 제약을 극복하고 선진국별로 특화된 강점기술 습득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제이다.

먼저 미국과는 1월에 양국의 정부·산업계·연구계 인사가 참여하는 '과학기술협력포럼'을 현지에서 개최한 바 있다. 同성과를 토대로 하여 금년도에는 양국의 공동관심분야인 반도체·HDTV·공작기계·항공분야의 공동연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특히 구체적인 협력추진 구심체로서 '韓·美 科學技術開發財團'의 설립을 추진하여 협력의 실질화·내실화를 뒷받침할 것이다.

일본과는 '한·일 산업기술협력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우선과제로 추진하고 EC와는 지난해 체결된 과학기술협력 약정을 기반으로 하여 실질협력 가능분야를 발굴·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러시아 연방과는 이미 합의한 74개 첨단기술 기업화과제 중 잔여 43개 과제를 조기에 착수할 것이다. 또 150명의 러시아 고급과학기술자를 국내에 유치·활용하는 동시에 50명의 한국 과학기술자를 러시아 현지에 파견하며, 신소재·항공분야의 3~4개 과제를 러시아의 연구기관에 위탁개발을 추진할 것이다.

끝으로 중국과는 지난해 체결한 '한·중 과학기술협력 협정'을 바탕으로 10개 공동연구과제 개발에 우선 착수하고, 이와 함께 양국 과학기술자 100명을 상호 교환 파견할 것이다. 아울러 한·중 과학기술협력센터 북경사무소의 개설과 상반기중 주재과학관 파견을 추진하여 기술정보 수집 등 중국과의 기술협력 증진의 산파역을 담당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공공부문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과학기술 활동에 있어서도 돈과 사람은 그 성과달성을 좌우하는 기본요소이다. 90년대 들어서 정부·정부투자기관 그리고 민간기업 모두의 노력으로 과학기술투자가 가시적으로 확대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예산의 긴축기조 유지, 제조업의 성장둔화 등으로 인하여 획기적인 과학기술투자 확대에는 그 한계가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다.

93년도에는 정부부문의 연구개발투자의 획기적 확대를 위하여 정부 과학기술예산의 제도적 증액 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관련부처와 협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96년까지 1조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科學技術振興基金을 93년에는 1,375억원을 조성하여 기초과학연구에 748억원, G7 프로젝트 참여기업 등에 625억원을 각각 지원하는 동시에 총국방예산의 2.8%로 확대된 국방연구개발비가 軍·民需 겸용기술 개발에 집중 배분·지원되도록 협의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투자기관의 기술개발투자를 증대시

키기 위하여 주요 15개 기관에 이미 권고한 바 있는 93년도 투자규모의 이행상태를 점검·독려하는 한편, 94년도 투자규모를 대폭 상향 勸告하며 경영평가항목 중 연구개발 비중의 제고와 계량지표 부문의 보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확대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에서 중요한 점은 고급과학기술인력과 생산현장인력을 같은 비중을 두어 양성한다는 것이다. 고급과학기술인력 공급은 미래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두뇌를 양성하는 면에서 중요하고, 생산현장 인력의 양성은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고급과학기술인력의 최적공급을 위해서는 우선 전국 이공계대학(원)과 한국과학기술원의 정원을 연차적으로 늘리고, 92년 12월에 토목기초공사에 착수한 '光州科學技術院'을 95년 3월까지 개교하기 위하여 93년중에는 119억원을 투입하여 건설공사를 계속하고 교과과정의 개발, 敎具裝備와 실험시설의 도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다음 산업현장인력 양성 방안으로는, 먼저 社內技術大學을 적극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둘째,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가 협동하여 산업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석·박사 교육과정을 92년의 82명에서 334명으로 대폭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그리고 병역특례 연구요원의 규모를 92년의 1,550명에서 1,743명으로 확대함은 물론 특례업체 선정기준과 연구요원 선발기준을 석사 이상에서 학사 이상(대기업 10인 이상, 중소기업에 5인

정부는 기술 개발활동의 주역인 민간부문에서의 기술개발투자를 높일 수 있도록 金融·稅制·産業現場人力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 확대를 통하여 세계일류 기업기술 개발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상)으로 완화하여 민간기업의 전문인력난 해소에 주력할 것이다.

과학기술 혁신이 경제발전의 핵심요소

93년도에는 경제발전의 핵심요소인 기술을 둘러싼 국가간의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가 국가의 총체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의 지속적인 활력을 되찾는 유일한 길은 '과학기술의 혁신'이다.

이 과학기술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원·인력·제반제도 등을 제한된 경제의 틀과 여건 속에서 효율적으로 확보·배분하여 최대의 성과를 이루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개발 관련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기술개발 지원기능이 서로 상충되어서는 안되며, 오히려 최대의 상승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 관련 부문별로는 정부·연구계·학계·기업 모두가 일체감을 가지고 기술혁신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우리의 지혜를 결집시켜야 할 것이다. 

〈표〉 대학·출연(연) 협동 석·박사 과정 확대 계획

	92년	93년
참여기관 모집정원	2개 출연(연), 6개 대학 82명	7개 출연(연), 12개 대학 334명

金融自律化가 선결과제

세계 각국이 金融의 국제화·금융의 자유화라는 공통현상 아래 새로운 금융질서를 모색함에 따라 오늘날의 금융산업은 제도의 개편 등 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그동안 정부 주도적인 경제개발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금융의 자율적 기능이 저해되어 실물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비하여 금융산업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는 지적을 받아온 우리나라에도 예외없이 적용되고 있다.

금융산업 개편의 배경

그간 우리나라는 금리 및 업무영역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기타 유동성에 대한 직접규제 등으로 인하여 금리의 시장기능이 제약을 받아왔고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국민소득 증대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다양한 금융자산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금융중개 기능이 미흡하였다. 또한 수출증대 및 중화학공업 육성 등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정책금융이 지나치게 확대 운용됨으로써 자율적인 시장원리에



장경천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금융산업 개편은 종합적인 경제제도의 변혁을 포괄하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과제이다. 거기에는 먼저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가 있고 정당한 순서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순서에 의하지 않고 산발적·부분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나 제도개편은 오히려 혼란과 왜곡만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의한 금융산업의 자원배분 기능이 약화되었던 것이다. 즉,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경쟁원리와 시장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함으로써 금융기관 수지개선의 부진 등 기업으로서의 금융기관의 발전이 불충분하였다.

금융산업 내부적으로는 금융기관 상호간의 적정 경쟁여건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전체 금융산업의 균형적 발전이 미흡하였고, 금융기관 상호간의 보완관계 결여 및 금융시장의 불균형 발전으로 부문간 자금수요 조절기능이 제약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 측에서도 효율성·기업성을 중시하는 경영자세가 미흡하여 금융의 자율적 기반이 취약하였다. 損益概念에 입각한 경영기법 도입 등 기업으로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경영쇄신 노력의 부족과 경영을 정부에 의존하는 부작용도 나타났던 것이다.

이처럼 현행 금융제도는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 고도성장 지원을 위한 투자재원 조달의 극대화와 私金融市場의 제도금융으로의 통합 등에 주안점을 두어 형성된 것으로서 그동안의 경제규모 확대와 구조

고도화, 투자재원의 자립 및 금융 구조의 변화, 정부주도 경제운용 방식의 민간주도 방식으로의 전환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금후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뒷받침하는 제도로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금융제도, 경제발전 뒷받침하기엔 부적합

이에 정부는 그동안의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새로운 금융기능의 정립으로 실물경제 발전에 부응하는 금융산업의 자율적 기반을 구축하고, 금융기관 경영의 자율성 보장과 금융기관간 경쟁여건의 조성으로 기업성을 회복시켜 금융산업의 자력성장을 촉진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증대된 저축이 경제적 효율이 높은 부문으로 유입되어 지속적 경제성장과 경제사회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자금 배분의 효율성 제고가 시급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국제경쟁력을 계속 높여나가면서 국제적 지위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외개방과 국제화의 적극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하게 된 것이다.

결국 정부는 자율화·개방화에 따른 금융의 효율화와 선진화 도모를 대전제로 하여 금융산업의 자율적 경제기반 구축, 기업자금 배분의 효율성 제고, 금융 국제화의 본격 추진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경영혁신,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산업과 금융의 균형발전을 위한 금융

금융산업의 개편 논의에서 가장 먼저 지적되어야 할 것이 금융자유화이다.
금융자유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금리규제와 여신규제 제도의 완화 내지 철폐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제도완화 내지 철폐의 선결과제는 中央銀行 대출을 통한 정책금융의 대폭적인 축소이다.

산업의 개편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92년 금융산업 개편내용 88년과 큰 차이 없어

財務部는 92년 12월 금융산업발전심의회를 통하여 금융산업 개편의 주요 방향 및 연구과제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88년 5월에도 '금융산업 발전방향과 개편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먼저 88년에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운용면에서는 금융기관의 경영측면에서의 자율성 제고와 경쟁여건 확대 조성에 주력하는 한편 금융산업 개방화 추세에 사전 대비한다.

둘째, 금융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금융산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통화신용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동시에 건전성 및 안전성 확보

장치를 강구한다.

셋째, 금융시장면에서는 금융산업개편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금융산업의 유기적 발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단기 금융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보험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88년도 발표는 금융개방 및 자율화에 대한 청사진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스스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행의지를 보여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4년이라는 시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92년 12월에 발표된 내용은 종전과 별다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92년도에 발표된 금융산업 개편의 기본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자유화와 금융산업의 효율성 제고이다. 금융자유화를 위해 금리 및 각종 수수료, 상품의 자유화, 자금운용의 자유화, 人事 등 내부경영 자율화를 추진한다. 자유화를 위한 선결과제로는 산업정책적 고려 등에 의한 자금운용상의 제약을 해소하고, 자율화에 상응하는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며, 부실채권 해소방안을 모색하고, 공정경쟁여건 조성을 위해 각종 규제 및 관행을 정비한다. 금융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기관 與受信업무의 개선을 유도하고, 金融先物去來制度를 정비하며, 금융전산화·자동화 확대방안을 강구한다.

둘째,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이다. 이를 위해 은행을 비롯한 각 금융부문의 적정규모를 추정하고, 합병에 의한 대형화 방안, 금융기관별 차등화 및 전문화를 추진한다. 금융시장 경쟁촉진의 필요성과 공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신규참입의 일반적·객관적 기준의 설정 등 신규진입 문제 및 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다. 또한 우리의 금융현실에 맞는 합리적 업무영역 조정기준을 설정하고 1, 2 金融圈의 조화로운 발전과 연계성 제고를 위한 업무영역 조정방안을 강구한다. 아울러 화폐시장·자본시장·보험시장 등 금융시장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며 금융기관의 소유구조와 효율성 검토, 동일인 주식소유 한도설정 등 금융기관의 소유구조를 검토한다.

셋째, 금융자유화 및 개방화에 따른 통화신용정책 및 금융감독체계의 발전방안 모색이다. 즉, 통화관리 방식의 개선, 통화관리 여건 개선, 적정 유동성관리 지표의 선택, 개방경제하의 통화신용정책 효율화 방안 등 통화신용정책의 효율화 제고방안을 살핀다. 자율화의 진전에 따른 감독기능의 개선방안을 살피고, 우리 금융현실에 적합한 금융감독체계를 확립한다. 自律規制機構 설치 등 자율규제 강화방안을 살피며, 소비자 보호장치의 강구 등 금융감독체계의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넷째, 금융정책과 산업정책과의 조화로운 관계 모색이다. 금융의 역할에 대한 한국적 파라다임의 모색과 정책금융제도의 전면 개편,

特殊銀行의 기능 재정립 등을 통해 향후 경제운용에 있어서 금융의 역할을 재정립한다. 또 대기업 여신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신용할당제도를 개선하는 등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과 보완기능을 재정립한다.

다섯째, 부문별 연구과제로 은행·산업 부문과 비은행 금융기관부문의 규제, 경쟁체제, 업무영역, 소유구조, 경영합리화 및 감독 등에 관한 연구이다.

결국 88년과 92년에 발표된 금융산업 개편의 기본내용은 시차가 있음에도 별다른 차이점을 보이고 있지는 않으며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① 책임경영체제 확립에 의한 인사·자금운용·상품개발 등 경영의 자율화

② 업무영역 조정, 소유구조 조정 및 대형화와 신규참입 허용에 따른 경쟁력 및 효율성 강화

③ 통화신용정책 및 금융감독 체계의 개선

금융산업 개편의 방향

금융산업의 개편 논의에서 가장 먼저 지적되어야 할 것이 금융자율화이다. 금융자율화 그 자체가 금융산업 개편의 목적이라기보다는 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선진화라는 목적 달성의 선결과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금융자율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금리규제와 여신규제 제도의 완화 내지 철폐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제도완화 내지 철폐의 선결과제는 中央銀行 대출

을 통한 정책금융의 대폭적인 축소이다.

금융의 자율화

그간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금융의 자율화를 살펴볼 때 인사자율화를 포함한 금융기관의 내부경영 자율화는 미흡하나마 어느 정도 진전을 보여왔다. 금리자유화도 1단계 금리자유화 이후 금융시장이 안정을 보이는 등 당초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자금운용의 자율화는 정책금융 및 부실채권의 尙存, 산업정책적 필요에 의한 자금운용 규제, 금융기관의 貸出審査 기능 미흡 등과 간접 규제 통화관리 여건이 성숙되지 못하여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향후 금융기관의 자율성 확보의 핵심은 인사의 자율성 확보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은행장 選任의 문제가 경영자율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몇가지 대안들이 있을 수 있으나 동일인 여신한도의 강화, 금융기관 대주주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 실물부문의 경쟁력 집중 완화 등의 조치가 실효성있게 시행된 후 株主總會에 그 선임을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자산관리의 자율성을 위해서는 우선 당국의 여신규제는 자금의 전체적인 수급상황에 따라 부문별 자금흐름의 조정을 위한 지침을 설정하는 데 그쳐야 할 것이다. 정책금융은 가급적 특수은행이 구체적인 융자대상·여신액·여신조건의 결

정을 스스로 행하며 전담토록 하고, 일반은행의 興信은 불건전 대출만을 규제하며 상업금융의 역할과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정책금융의 규모와 대상을 축소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기관의 금융기법 개발·신용정보 수집·분석능력의 제고 노력 등을 통한 금융기관의 자체 여신심사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은행의 경영건전성 유지와 대기업의 私金庫化 방지를 위해 경영실적에 대한 사후평가를 강화하고, 적정 자기자본 비율을 유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편중여신의 방지 및 경영내용의 공시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구조개편을 통한 경쟁의 촉진

다음으로, 금융산업의 구조개편을 통한 경쟁촉진을 살펴본다. 그간 금융산업에의 신규참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금융산업의 효율성 증대와 경쟁촉진을 위한 업무영역 조정의 필요성은 상존하고 있다. 특히 금융의 증권화·통합화 추세에 대응하여 合併 등을 통한 대형화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며, 이와 함께 특정분야에 전문화된 전문금융기관 육성의 필요성도 증대되었다. 아울러 최근 산업자본과의 바람직한 소유관계에 대한 논의도 제기되었다.

업무영역의 조정은 앞서 지적한 금리자유화 등 금융자유화가 진전된 후에야 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업무영역 조정에서

서 겸업주의가 반드시 분업주의보다 우월하다는 확증은 없다. 따라서 고유 업무영역은 분업주의에 의거,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살리되 부수업무 및 주변업무는 兼業主義를 택하는 단계적인 업무영역 조정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제1금융권의 경우 商業銀行體制 (commercial banking system) 구축으로 은행의 고유업무인 예금과 대출 및 주변업무를 취급하고, 제2금융권의 경우 증권회사·투자신탁·투자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업무기능을 통합하는 투자은행체제 (investment banking system)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 문제는 은행만이 그 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향후 증권시장에서 기업금융의 심화와 관련하여 재벌그룹 계열투자기관의 인수·자기매매·위탁매매 등 모든 주요 업무분야에서의 이해상충은 보다 큰 결과를 파생할 수도 있다. 앞으로 금융시장에의 신규진입이 완화되어 감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소유제한도 완화되어 갈 수 있다고 보이나, 투자기관을 소유한 재벌그룹의 소유제한은 매우 선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금융기관 자산의 건전성 유지, 유동성 규제, 금융리스크 관리 등 건전 경영제고 측면의 감독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자율화 진전에 따라 야기될 각종 금융사고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후 감독강화를 위한 감독체계와 감독기법

의 선진화가 요구된다.

장기적 안목에서의 공정한 개편작업 이루어져야

금융산업 개편은 종합적인 경제제도의 변혁을 포괄하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과제이다. 거기에는 먼저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가 있고 정당한 순서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순서에 의하지 않고 산발적·부분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나 제도 개편은 오히려 혼란과 왜곡만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금융산업 개편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준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다 객관적인 분석과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당사자들이나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자들을 엄격히 배제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財務部の 발표에 따르면, 이번 금융산업 개편이 완전 백지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라 하지만,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향후 경제정책과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그것이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공정한 개편작업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나 金融發展審議會의 최종안이 금년 상반기까지 제출되도록 시한이 잡혀 있다는 사실은, 금융산업 개편이라는 과제의 비중을 생각할 때 지나치게 성급하지 않은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 

金融의 산업지원 역할 강화해야

국내기업의 자금부족규모는 적을 때는 GNP의 10% 수준에서 클 때는 17%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는 우리의 경제가 아직도 고도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므로 기업의 설비투자가 계속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6~7% 이상의 고도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이에 상응하여 투자율도 GNP의 30% 이상이 계속 견지되어야 하므로 기업의 자금부족현상은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구조조정자금이나 경쟁력강화를 위한 생산성향상자금, 기술개발자금 등 質的인 면에서의 資金需要도 갈수록 커지고 있어 앞으로 이러한 증대되는 산업금융수요를 금융산업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뒷받침해 주느냐가 우리 경제의 성장의 크기나 내용을 좌우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산업금융수요 중 주축을 이루는 설비투자자금에 한정하여 볼 경우, 기업은 감가상각충당금이나 이익금 등에 의한 내부자금으로 약 30% 정도를 충당하



이용기
한국산업은행 조사부장

당분간 시중은행의 금융채 발행은 불허하되, 대신 시중은행의 유가증권 운용시 금융채 활용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금융의 산업지원 역할을 충족시키면서 아울러 기관간 유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라 할 것이다.

고 있으며 70%를 외부자금에 의존하고 있다.

外部資金을 세분하여 보면, 전체 외부자금의 50% 정도를 은행차입 등 間接金融에 의존하고 있으며 약 35% 정도를 直接金融 그리고 15% 정도를 리스·해외차입 등 기타자금으로 조달한다.

기업의 자금부족 규모와 금융중개기능

우리나라 기업의 설비자금 조달 패턴은 외부자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간접금융 위주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내부자금 의존비율을 늘려나가는 한편 직접금융을 적극 유도하여 기업의 자금조달구조를 보다 다양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내부자금은 국내기업들의 수익력이나 재무구조의 취약성에 비추어 볼 때 중단기적으로는 그 비율을 제고시키기는 매우 어려우며, 기본적으로 설비투자증가율이 크게 낮아지는 저성장 체제가 되지 않는 한 개선될 것 같지는 않다.

또한 설비금융에 국한하여 볼

때는 직접금융의 경우, 금융기관차입 비중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주식의 경우 기본적으로 장기재원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즉, 설비투자는 장기적인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자금도 장기안정적인 자금이 主財源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증권시장의 시황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는 有價增資 등에 의한 자금조달은 투자계획과 직접 연결되기가 어려워 주로 운영자금 용도로 쓰이고 있다. 한편 社債는 설비투자와 기간대응이 가능한 점에서 주요 조달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경우 社債滿期가 대부분 3년 이하로 비교적 短期性を 띠고 있어 역시 운영자금으로 많이 쓰이는 편이다.

한편, 기업의 입장에서 설비자금조달을 위해 간접금융에 의존할 경우 투자계획에 맞추어 적기에 자금조달이 가능하고, 장기자금을 빌릴 경우 길게는 10년 이상의 분할상환이 가능하여 투자수익으로 元利金を 상환할 수 있어 자금계획집행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금융비용은 損費로 처리되기 때문에 코스트면에서도 훨씬 유리하므로 기업의 금융기관 차입수요는 쉽게 줄어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식이나 사채발행 등 資本市場을 이용한 자금조달이나 해외시장을 이용한 자금조달은 신용도면에서 유리한 대기업이나 가능하므로 中小·中堅企業은 대부분 금융기관 차입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금융의 산업지원 역할이
금융제도 내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은, 기본적으로
장기재원이 조성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단기자금의
장기산업자금화가
유도될 수 있는 방안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기업의 설비금융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銀行圈을 중심으로 한 금융기관의 중개활동이 계속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금융기관간 역할분담에 의한
設備金融의 효율성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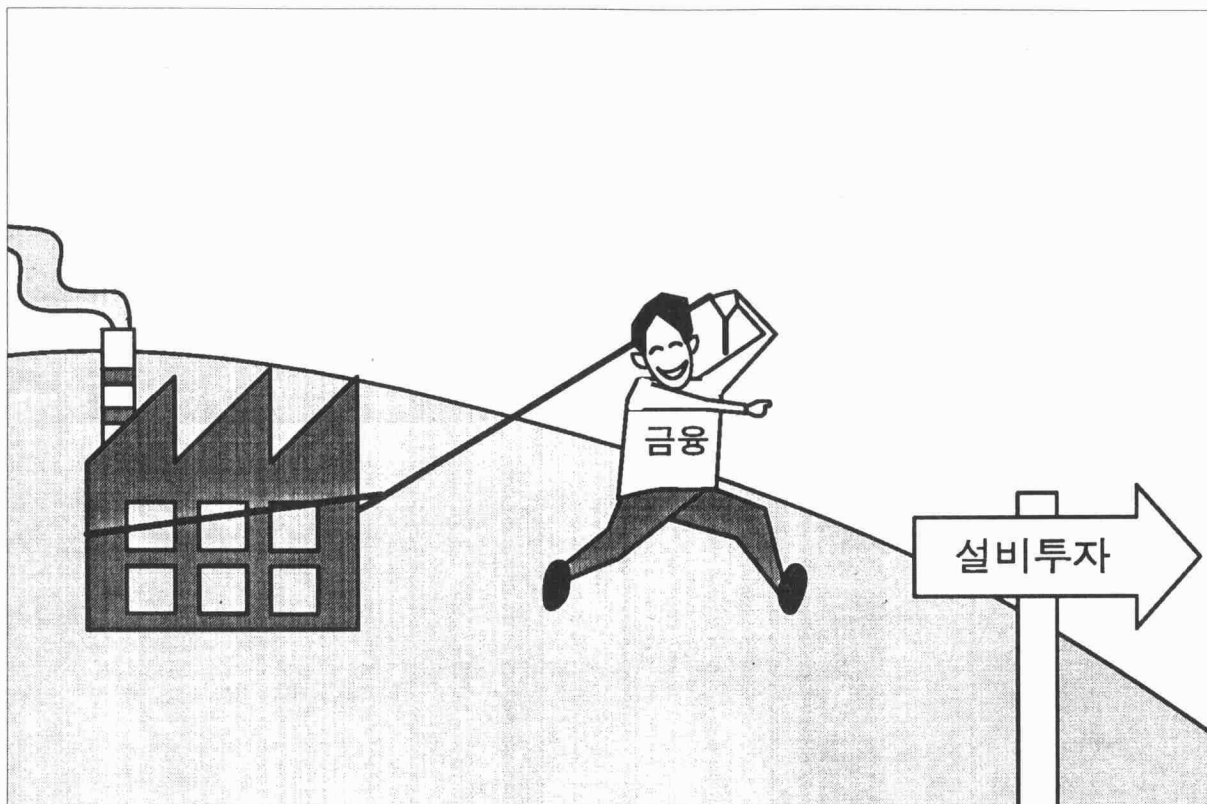
현재 은행권을 통한 설비자금공급은 預金銀行이 약 49%, 한국산업은행이 43%, 장기신용은행이 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예금은행의 설비자금은 대부분 韓銀차입 등에 의한 정책성 자금으로 자체재원은 20% 미만이다. 따라서, 예금은행의 설비자금 공급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性 財源의 특성을 갖고 있어 안정희생하에 성장을 지원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금융자율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예금은행의 정책금융 취급이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는 점을 고려하면 예금은행의 설비자금 취급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으므로 長期金融機關의 역할이 한층 중시된다.

또한 예금은행이 자체재원으로 설비금융을 취급하는 것은 업무의 겸업화가 촉진되고 있는 추세하에서는 비판할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이보다는 예금은행의 경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즉, 예금은행은 기본적으로 短期財源이 주축이 되는데 이러한 단기자금을 장기고정화된 자금으로 대출할 경우 자금회전이 안되어 경영상의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또한 설비자금은 長期이며 거액이므로 은행의 경우 대출리스크가 큰 편이다. 따라서 순전히 수익성에만 의존할 경우 장래적으로 유망한 첨단산업 등에 대한 대출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 점은 최근 일본의 都市銀行이 장기자금 취급을 늘리고 있으나 대부분 부동산업·레저서비스업·개인주택 론 등 수익성면에서 무리가 없는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데서도 쉽게 알 수 있다.

반면, 장기금융기관은 사업성 검토·기술조사·산업조사 등의 전문적 심사능력을 바탕으로 장기대출에 따른 리스크를 철저히 심사함으로써 국민경제적으로 긴요한 제조업분야나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에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상당기간은 예금은행은 본래의 상업금융업무에 전념토록 해야 하며, 설비금융은 장기금융기관 중심으로 전문성을 살



려나가 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장기재원 조성을 위한 금융구조의 정비

그동안 우리나라의 設備金融制度 운용은 국민경제적으로 긴요한 분야에 자금이 집중 되도록 공급방향에 대한 조정노력이 증시된 반면, 실제로 이를 뒷받침할 長期財源의 조성에는 다소 소홀한 감이 없지 않다. 장기금융상품보다 단기금융상품의 수익률이 높은 상황에서 장기저축보다는 단기저축상품에 대한 선호가 커지는 가운데 이러한 단기재원 분야로 집중된 자금을 장

기산업자금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통로도 마땅히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단기금융권의 高利資金을 산업자금화함에 따라 금리 부담이 커짐은 물론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가 어려워 자금의 가수요 현상을 촉발시켜 더욱 더 자금부족 현상을 심화시키는 면이 있다.

이 점에서 日本의 경우 오랫동안 장기금융상품이 수익률이나 조건면에서 계속 우대되어 왔으며, 또한 도시은행의 金融債 인수 등으로 장기재원 조성 및 단기재원의 장기산업자금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어 왔음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기업의 설비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장기금융기관의 주도하에 설비금융이 이루어졌으며, 이 때 장기금융기관의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재원의 확보에 정책적 주안을 두었다. 즉, 起債조정시 장기금융기관의 금융채 발행을 우대하였으며, 도시은행의 정기에금만기를 규제함으로써 금융채와의 경합을 회피하였다. 또한 자금운용부를 통해 장기신용은행 금융채를 인수함으로써 정부에서도 직접적으로 장기자금 조성에 참여하였으며, 도시은행 등이 장기신용은행 금융채를 구입할 수 있도록 금융채를 日銀信用의 적격담보채권으로서 인정하였다. 그리고 전문금융제도의 기본

들을 엄격히 유지하여 도시은행이 직접 장기대출을 행하는 것을 피하고 도시은행이 장기신용은행 금융채를 구입하면 장기신용은행은 도시은행의 거래업체에게 대출을 행하는 협조유자제제가 발달하였다. 이에 따라 도시은행 등이 개인으로부터 수취한 단기에금까지도 장기산업자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 단기자금의 장기산업자금화가 이루어짐으로써 모든 자금이 부족한 투자재원을 보전하는 데에 이용될 수 있도록 제도가 운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일본의 설비금융체계는 최근에 와서는 여러 면에서 변화를 겪고 있어 그대로 오늘의 우리 현실에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장기금융기관을 축으로 설비금융제도를 운용해온 일본의 금융체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설비금융체계는 공급면에서의 효율성 제고도 중요하지만, 장기재원의 조성과 나아가 단기자금의 장기산업자금화를 촉진시키는 데 정책의 주안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금리가 안정됨으로써 장기저축이 선호될 수 있도록 물가 안정·부동산투기 억제 등 경제안정기조 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금융제도권 내에서 장기저축이 우대될 수 있는 제도적 배려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단기금융상품으로 수취한 자금이 장기산업자금화될 수 있도록 제2금융권 내지 시중은행의 금

융채 인수 내지 구입을 적극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日本의 資金運用部가 아직도 정부계 금융기관을 통해 또는 長信銀의 금융채를 인수함으로써 장기설비금융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도 財政投融资의 산업지원 역할이 한층 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市中銀行의 금융채 발행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우리의 설비금융의 현상을 고려할 때 당분간 계속 불허되어야 할 것이다. 혹자는 업무점업화 추세에 비추어 시중은행에게 금융채를 발행 시킴으로써 동채원을 장기자금으로 활용할 경우 경쟁의 효율성이 증진될 뿐 장기자금의 공급량에는 전체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중은행은 특성상 수익성에 치중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수익성에 치중할 경우 투자리스크가 큰 자본집약산업이나 기술집약산업에는 대출을 꺼리게 된다. 이 점은 앞에서 보았듯이 일본의 도시은행의 장기자금대출이 대부분 비제조업분야 등에 치중된 면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市中銀行의 金融債發行 허용여부는 자금이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운용되어야 할 것인가, 개별기관의 상업성에 주안을 두어 운용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당분간 시중은행의 금융채 발행은 불허하되, 대신 시중은행의 유가증권 운용시 금융채 활용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금융의 산업지원 역할을 충족시키면서 아울러 기간 유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라 할 것이다.

설비투자수요에 대한 원활한 지원이 과제

최근 금융산업 개편 논의가 다시 제기되고 있어 금융제도의 운영과 관련, 세간의 관심이 크나 어떠한 금융의 산업지원 역할은 금융자율화나 업무점업화 등의 환경 이전의 상위목표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금융의 산업지원 역할이 금융제도 내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은, 기본적으로 장기재원이 조성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단기자금의 장기산업자금화가 유도될 수 있는 방안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제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책적인 노력도 당분간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자금부족시대에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기업의 설비투자수요를 무리없이 지원해 나가는 것이 국민경제발전과 관련, 중요한 과제가 되기 때문이다. 

한국적 특성에 맞는 개편방안 마련해야

최근 우리 금융산업의 낙후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금융 개혁에 관한 논의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30여년간 고도의 경제성장을 지속해 오는 과정에서 우리의 금융산업은 실물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해 온 것이 사실이다. 수출촉진, 중화학공업 육성,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 중소기업 지원 등과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각종 정책금융을 제공해 왔다. 또한 금리와 금융상품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와 함께 金融圈域間·市場間 엄격한 분리정책도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발전됨에 따라 이와 같은 정부의 과도한 금융 규제와 개입은 그 순기능보다 오히려 역기능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정부의 규제로 인해 금융기관 경영의 자율성과 금융중개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금융기관들은 상호경쟁보다는 정부의 규제와 보호하에 안주함으로써 체질이 약화되고 대외 경쟁력이 약화된 것이다.



엄봉성

재무부 자문관

이번 개편작업은, 첫째 금융자율화와 금융산업 효율성 제고, 둘째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셋째 금융자율화 및 개방화에 따른 통화신용정책과 금융감독체계 발전, 넷째 금융정책과 산업정책과의 조화로운 관계 모색 등 네가지 과제에 중점을 두어 검토할 것이다.

금융제도 개편의 배경과 필요성

이러한 문제점들은 사실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따라 8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제운용기조가 자율과 개방으로 전환되면서, 금융자율화와 국제화도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시중은행의 민영화와 함께 은행경영에 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은행경영의 자율성이 한층 제고되었으며, 각종 금융기관이 새로 설립되고 短資社의 업종전환 등 부분적인 금융산업의 구조개편도 단행되었다. 또한 대외 개방면에 있어서도 은행은 물론 보험·증권 등 우리의 금융산업은 대폭 개방되었으며,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금융기관에게 명실공히 내국민대우를 보장하게 된 것이다. 또한 90년대 들어서는 4단계 금리자유화계획과 3단계 금융개방계획을 발표·시행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금융자율화와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융의 자율성과 효율성, 나아가서 對外競爭力이 크게 나아졌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아

직도 금리규제와 정책금융 등을 중심으로 與信運用에 대한 제약이 상존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권역간 차별적 규제는 금융산업이 불균형적으로 성장하게 된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의 책임경영체제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며 선진국에 비해 預貸金利差가 매우 높아서 금융중개의 효율성이 그만큼 낮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범세계적으로 금융의 자율화·증권화·국제화가 급격히 진전되면서, 세계의 금융산업은 대내외적인 극심한 경쟁압력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제 인위적 장벽 등에 의해 금융산업이 보호될 수 없으며, 다양화된 금융수요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충족시키느냐에 따라 금융기관의 생존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선진국들은 경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금융개혁을 추진함은 물론, 개별 금융기관들은 생산성향상·비용절감·신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대내외적인 금융환경의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우리 금융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정부는 금융의 선진화·효율화를 목표로 금융제도의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은 그동안 이루어져 온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개편이 아니라 금융제도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개편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金融産業發展審議會에 금융제도 개편관련 연구를 의뢰, 그 결과를 6월까지 제출

앞으로 산업정책적 고려에 의한 정책금융과 여신배분에의 정부개입을 점차 축소하고, 금융자율화를 통하여 금융기관 경영의 자율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도 經營革新의 의지를 가지고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처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도록 요청하였으며, 동심회의의 최종안을 토대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정부의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제도의 개편방향

금융제도 개편의 목적은 금융기관간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고 금융기관의 경영혁신을 유도하며, 산업과 금융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금융제도의 효율화와 선진화를 달성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표 아래 이번 개편작업은 다음 네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첫째, 금융자율화와 금융산업 효율성 제고, 둘째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셋째 금융자율화 및 개방화에 따른 통화신용정책과 금융감독체계 발전, 넷째 금융정책과 산업정책과의 조화로운 관계 모색 등이다.

金融自由化와 금융산업의 효율성 제고

이를 위하여 먼저 금리자유화와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및 운용상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즉, 금리의 가격기능에 의한 자금배분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금융기관간 공정한 경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금리를 조속히 자유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급속한 금리자유화로 인하여 금리가 급상승하거나 금융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부작용 및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금리자유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정책금융과 여신규제 등 산업정책적 고려에 의한 자금운용상 제약이 존재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경영자율화가 저해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면서 가급적 財政이나 특수은행에서 정책금융 공급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이 다양한 자금조달과 운용수단을 개발하도록 유도하고 임직원에 대한 인사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내부경영을 자율화해야 한다. 그리고 자율경영 여건을 확립하되, 자율에 따른 책임도 중시하는 경영풍토를 조성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하고 책임있는 경영체제를 정착시켜 나가야 함은 물론이다.

금융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금융의 개방과 국제화에 대비하



있게 하여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반면, 특정고객·지역·업무에 特化한 전문 금융기관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활성화되는 것도 바람직하므로, 대형화와 전문화는 적절히 조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규모의 경제는 존재하나 범위의 경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경우 한 분야에 특화하여 전문화를 달성함으로써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이와 아울러 금융의 공공성과 상업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금융기관의 소유구조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전문 금융자본의 육성을 통한 금융산업의 발전측면과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 우리 금융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국제경쟁력을 배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실정과 국제적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산업의 발전방향을 정립하고,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업무영역·규모의 적정성·소유구조 등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최근 범세계적으로 겸업주의 금융제도로 이행하는 추세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이 비교적 엄격하게 구분되어 왔으나, 예외적으로 특정 금융기관에 새로운 업무 및 상품을 허용하는 등 부분적인 업무영역 조정이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이 마

련되지 못했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금융발전 모형을 설정하여 금융의 효율성과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업무영역을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하겠다. 이와 함께 겸업화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와 금융집중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차단장치(fire wall)의 설치와 감독제도의 보완도 요구된다.

한편, 금융자율화와 국제경쟁의 시대에서 금융기관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규모나 범위의 경제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그간 美國이나 日本에서는 매수·합병 등을 통하여 대형화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금융기관간 합병을 통한 대형화는 경비를 절감시키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통화신용정책과 금융감독체계의 발전

금융자율화와 개방화 추진에 따라 통화관리에는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되며,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信用秩序의 유지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즉, 금융자율화와 혁신은 금융상품의 성격을 변질시키고 금융상품간 급격한 자금이동을 초래하여 通貨指標에 혼란을 야기함으로써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현재 통화량 중심의 경직적 통화관리에서 탈피하여 통화량 뿐만 아니라 금리·환율 등 가격변수와 실물경제 여건, 금융시장 상황 등 제반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통화를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여신규제·通安證券 강제인수 등 직접규제에 의한 통화관리방식을 개선하여 시장원리에 입각한 간접규제방식이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금융의 자율화·개방화 추진에 따른 경쟁격화로 금융기관의 경영악화, 대형금융사고의 蓋然性이 점차 커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한 감독체계의 개선과 발전이 요구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사후적·처방적 감독에서 사전적·예방적 감독으로 전환해야 하며, 내부감사체제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감독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독기관간 정보교환 및 협조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의 부실 또는 도산으로부터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預金保險制度의 도입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정책과 산업정책과의 조화로운 관계 모색

금융의 자율화·국제화에 따라 금융의 기능과 역할도 변화하고 있으므로 금융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과 보완기능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제운용에 있어서 금융의 역할에 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정책금융제도의 개편, 특수은행의 기능 재정립, 여신규제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금융을 축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政策金融 중 상당부분을 재정에서 담당해 나

가는 한편, 금융자금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수은행이 이를 전담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특수은행제도를 정비하여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역할을 재정립하고 일반은행이 취급하기 곤란한 정책금융 취급기관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한편 대기업에 대한 여신관리제도와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등 여신규제제도는, 실물경제의 발전을 지원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으나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자금운용을 제약하고 있다. 앞으로 자금배분이 시장원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수출산업 지원, 부문간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한 시책이 계속 요구되고 있는 우리의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실물경제의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경제현실 감안한 개편방안 마련해야

앞으로 산업정책적 고려에 의한 정책금융과 여신배분의 정부개입을 점차 축소하고 금융자율화를 통하여 금융기관 경영의 자율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며, 금융기관도 정부규제하에 반사적 이익에 안주하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經營革新의 의지를 가지고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처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금융자율화 과정에서 금

융기관간의 경쟁격화에 따라 금융의 안정성과 건전성이 저하될 경우, 예금자와 투자자는 물론 나아가서 국민경제 전체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또한 금융자율화에 따라 지역간 불균형 해소,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제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동안 금융부문이 담당해오던 지원기능이 약화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자율화에 따른 이성과 같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하고 우리 경제의 현실을 감안한 한국적 특성을 지닌 금융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제도 개편은 한 차례의 추진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은 아니다. 금융산업은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서 계속 진화하게 마련인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금융산업이 발달한 국가에서도 금융제도 개혁은 오랜 기간에 걸쳐 진전되어 왔으며 현재도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금융자율화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여건조성과 사전 안전장치를 강구하면서 단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정부와 금융기관, 기업 그리고 일반국민이 서로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금융제도의 효율화·선진화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民族의 역량 시험받고 있는 韓國經濟



노조에 신이치
(野副伸一)

日本아시아경제연구소
국제교류실장

한 국경제는 지금까지의 活力을 잃어가고 지금은 긴 슬럼프에 빠져 있는 것 같다. 국가적 목표였던 先進國 진입을 目前에 두고 擔保상태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轉換期의 진통

89년 이후의 한국경제의 변화에 대하여 여러가지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필자는 이 변화가 한국경제가 지금까지 이룩하였던 발전결과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경제으로 移行하기 위한 진통으로 해석하고 싶다. 그러므로 앞날을 필요 이상으로 비관적으로 보거나 또한 현실을 너무 가볍게 낙관적으로 봐서도 안되며, 냉정하게 판단하여 올바른 處方策을 구할 때라고 본다.

한 나라의 경제도 인간의 성장과 성과 똑같이 성장단계에 따라 衣·食·住 등을 바꿔갈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도 이만큼 성장한 결과 지금까지의 고도성장을 뒷받침하여 왔던 시스템 또는 기본적 조건들이 喪失되거나 弱화되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이 새로운 상황에 걸맞는 성장 구조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며, 여기에서 바로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混迷가 파생되고 있는 것이다.

低賃金 勞動力의 상실

그러면 한국경제가 상실해 버린 시스템 또는 기본적 조건들이란 무엇인가?

첫번째는 低賃金 勞動力의 상실이다.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이 수출의 급증에 의해 이룩되었고, 또한 이 수출의 급증은 근면하고 저렴한 노동력에 의해 뒷받침되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경제에 있어서 저임금 노동력은 성장의 엔진이었다.

그러나 지속적 성장은 서서히 노동력 부족을 초래하기 시작하였고, 87년의 6·29 민주화선언 이후에는 대폭적인 임금상승이 야기되었다. 거기에 무역수지 흑자의 急増으로 인한 '원'貨切上마저 겹쳐 한국제품의 가격경쟁력은 88년 이후 급속히 저하되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賃金上

료를 흡수할 수 있는 生産性的 향상 不均衡한 것이다. 生産性 향상의 關鍵은 技術혁신의 추진이다. 그러나 技術혁신은 一朝一夕에 달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韓國경제의 딜레마가 있는 것이다.

권위주의적 정책의 약화

또 하나의 요인은 政治적·사회적 요인의 변화이다. 韓國의 경제발전은 政府의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때로는 ‘開發獨裁’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朴正熙 政權은 國民의 에너지를 경제건설에 결집시키기 위하여 政治적 壓迫도 불사하였을 뿐 아니라 한정된 資源과 資金을 효율적으로 活用하기 위하여 政府를 經濟建設의 前衛로 내세웠다.

그 결과, 政府는 企業의 生死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갖게 되었다. 이 같은 강력한 開發獨裁는 60년대 초기 韓國이 직면한 상황에서 볼 때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여겨진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美·蘇 冷戰체제가 이와 같은 韓國의 方式(=開發獨裁)에 유리하게 作用하였다는 점이다.

그런데 經濟발전의 결과, 더이상 權威主義的 政治가 통하지 않게 되었다. 소득수준의 향상에 의해 國民은 多樣的 가치관과 욕구를 추구하게 되었으며, 民間기업도 크게 성장하여 經濟의 폭이 넓어지고 그 구조도 복잡다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政府의 역할도 變化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더욱 冷戰體制

에서 平和共存체제로의 이행이라는 國際적 糾류도 권위주의적 政策의 수행을 어렵게 만들었다.

필자는 韓國에 있어서 經濟開發 5개년계획의 역할은 제4차 計劃(1977~81年) 때,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朴正熙 政權의 퇴장과 함께 끝이 났다고 본다. 80년대초에 이른바 民間主導經濟論이 등장한(예를 들어, 80년초 경제백서) 바 있으나 아직도 民間주도의 經濟 運用方式는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

韓國의 經濟발전에 있어서 輸出伸張의 전략적 重要성은 앞으로도 變함이 없을 것이다. 이는 89년 이후의 ‘內需主導型 景氣’가 國際수지의 벽으로 무너졌던 사실에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예전과 같은 방식의 수출신장은 불가능한 것이므로 별도의 方式·시스템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럼 새로운 시스템이란 어떤 것 일까?

지금이야말로 韓國경제는 名실공히 ‘고임금·고생산성체제’의 구축에 힘써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본다. 이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①적극적인 設備투자 ②自主的 技術개발
③기업경영의 근대화 등이 必要하다.

으로 보인다.

이것은 經濟적으로 본다면 企業의 자율성과 金融의 自립성을 저해하여 결국은 資源配分의 왜곡을 초래하는 것이다. 특히 大企業에 대한 政策의 지나친 보호와 간섭은 韓國經濟의 건전한 발전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高賃金·高生産性 체제의 구축

이처럼 고도성장을 뒷받침했던 요인들의 상실 또는 약화는 韓國으로 하여금 새로운 발전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서두르게 하고 있다.

韓國經濟는 그 成長方式에서 볼 때 고도성장에서 안정성장으로의 전환, 또는 ‘經濟’에서 ‘經營’으로의 전환이라는 질적 전환을 필요로 하고 있다.

韓國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企業레벨에서는 ‘高賃金·高生産性體制’를 확립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 표현은 이미 70년대말에 鄭周永 당시 全經聯 회장이 주장한 것으로서 이른바 ‘賃金論爭’을 韓國에서 처음 일으킨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만 해도 時機尙早라고 인식되었던 듯하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韓國經濟

는 명실공히 '고임금·고생산성체제'의 구축에 힘써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본다. 이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①적극적인 설비투자 ②自主的 기술개발 ③기업경영의 근대화 등이 필요하다. 특히 기술개발에 대하여는 기술자의 근로의욕 제고, 기업내의 기술축적에서부터 경영의 근대화, 구체적으로는 專門經營者의 등용, 권한의 하부양이 크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기업경영자는 기업을 '자신의 것'에서 '사회의 것'으로 보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中小企業의 육성 및 강화

한국경제 전체를 보면, '고임금·고생산성체제'의 확립만 가지고는 해결 안되는 몇가지 문제가 있다. 그 중에서도 中小企業의 육성·강화가 중요하다. 이에 대한 인식은 한국에서도 강하게 있어 釜斗煥 정권은 헌법에까지 중소기업의 역할을 언급할 정도였다. 그후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다고도 말할 수 있겠으나 大企業의 압도적 우위체제는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다.

대기업 우위체제가 한국의 수출에 그림자를 주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국의 수출은 대기업 중심으로, 소위 '少品種大量生産·販賣' 방식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무역상대국과 마찰을 불러일으키기 쉽고 필요 이상으로 경계를 당하게 된다. 반대로 '多品種少量生産·販賣' 방식의 대만경제가 별로 무역마찰을 확대하지 않

으면서 세계최대의 외화준비고를 자랑하고 있는 사실을 한국은 배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한 한국은 무역불균형 개선을 위해 對日輸出增進을 강력히 원하고 있지만 對日수출은 여전히 부진하다. 그 이유의 하나로서 일본의 品揃主義(少量單位의 체제)에 한국이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이는 바로 작은 量으로는 생산회전(quick response)이 되지 않는 大企業中心의 생산·수출체제에서 비롯된다.

한국의 대기업체제는 朴政權 이후 채택되어온 산업정책의 산물이다. 이는 後發의 자본주의 국가가 세계시장에 파고들어가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지금은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성장률은 낮게, 需要는 다양화하고 있기 때문에 벤처 캐피탈의 대응이 보다 적절한 때라고 본다. 한국에 있어서 정부가 끌거나 밀거나 하여 기업을 육성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본다.

위에서 언급한 중소기업의 육성·강화 외에 첨단산업의 육성, 지방경제의 活性化 등에 정부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 한편 기업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自助노력을 촉구하는 방향에서 대처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된다.

포스트 冷戰體制에의 대응

냉전체제의 붕괴는 한국에 커다란 가능성을 제시했다. 즉, 中·蘇 등과의 國交樹立이 대표적이며, 이

와 같은 北方外交의 성과는 경제면에서도 시장의 다각화, 자원확보선의 다양화, 새로운 투자시장의 확보 등 여러가지 메리트를 한국에 갖다 주었다. 특히 對中國 무역과 투자는 韓·中 양국의 상호보완성에서 볼 때 앞으로 계속 확대되리라 보여진다. 또한 對ASEAN 투자자의 활성화에 따라, ASEAN과의 무역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美·日에의 과도한 무역의존을 탈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으로서는 바람직한 일이다.

다른 한편 냉전체제의 붕괴는 美國으로 하여금 한국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의 강도를 더 높이게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예전과 같은 밀월시대는 끝났다고 보아야 한다. EC統合과 NAFTA의 추진 등 블럭化에 대한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日本의 對韓投資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도 한국에게는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더욱 南北統一의 준비도 한국에게는 불가결한 일이 되고 있다. 한국은 현재 수출랭킹 세계 12위(91년 기준)의 經濟大國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내부의 일을 정비하는 것 못지 않게 외부의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금이야말로 韓國은 민족의 力量이 시험받고 있는 때라고 여겨진다. 

관광, 이제 우리의 관심을 모아야 할 때



김세호

교통부 국제관광과장

지난 60, 7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은 국가 경제 발전에 필요한 外貨獲得源으로서 범국민적 관심과 지원 속에 국가의 주요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되어 오면서 세계 29위권의 관광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최근 몇년간 과소비와 향락풍조의 만연에 따른 불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새롭게 하는 과정에서 상품수출과 같은 외화획득산업인 관광산업이 소비성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등 다른 퇴폐·향락산업과 동일시되어 세계·금융·행정상의 지원과 국가적 관심이 크게 퇴조하였다.

그 결과 일종의 상품인 우리나라 관광에 대한 가격 상승으로 외래관광객의 구매력이 감퇴하여 국제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었으며, 특히 관광산업 역군인 관광업 종사자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는 등 관광산업 전반의 분위기가 크게 위축되어 있는 실정이다.

관광산업 국제경쟁력 크게 약화

특히 이와 같이 침체된 관광산업의 발전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또 하나의 걸림돌은 바로 관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그 중요성에 대한 지나친 경시풍조이다.

최근 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한국관광의 재도약을 이룩하려는 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 비록 작년말 관광숙박업이 소비성서비스업에서 제외되긴 하였으나 아직도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해결

해야 할 과제는 상당히 남아 있다.

따라서 관광진흥정책의 실현을 위해 관광의 실체와 중요성, 우리 관광이 처한 현실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 등을 살펴봄으로써 관광정책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정책입안 및 결정권자 그리고 일반국민 등의 이해와 협조를 널리 구하고자 한다.

세계는 바야흐로 관광전쟁의 시대

91년 걸프전 이후 다소 위축되었던 세계관광산업은 공산주의 국가의 몰락에 따른 脫이데올로기현상과 국제간의 人的·物的 교류의 증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서비스분야의 본격적인 개방, 그리고 항공수요의 지속적인 성장과 여가생활에 대한 가치부여 등으로 관광환경이 능동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관광기구(WTO)에 따르면, 세계관광산업은 매년 4~5%의 성장을 계속하여 2000년에는 국제간 관광교역규모가 5,270억달러에 이르러 관광산업은 미래에 가장 성장잠재력이 높은 세계 최대의 산업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와 같은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여 관광을 환경·첨단 산업과 함께 21세기의 3대 주요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부시 前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도 각각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광선전에 직접 나서는 등

관광산업은 원가 중 재료비의 비율이 제조업의 3분의 1인 22.7%에 불과한 반면 부가가치는 제조업의 2배에 상당하는 51.9%로서 경제성이 매우 높은 산업이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관광산업이 농업·자동차·전자·철강·섬유 등의 산업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열한 관광객 유치경쟁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일화이다. 특히 美國議會는 작년 9월 관광을 수출전략산업으로 간주하여 「관광정책 및 수출진흥법(Tourism Policy and Export Promotion Act)」을 제정하는 등 관광을 통하여 자국이익 최우선의 경제전쟁시대에 대처해 나가고 있다.

관광산업, 국가경제발전에도 큰 역할을 담당

세계관광기구의 자료에 의하면 국제관광교역과 국내관광지출을 포함한 90년 세계관광 총생산량은 무려 2조9천억달러로서 세계 GNP의 5%, 서비스산업의 15%를 점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91년도 관광외화수입은 34억3천만달러로서 자동차수출로 인한 외화획득액 25억7천만달러를 상회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총수출액의 5%, 무역외수입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관광산업은 특히 원가 중 재료비의 비율이 제조업의 3분의 1인 22.7%에 불과한 반면, 부가가치는 제조업의 2배에 상당하는 51.9%로서 경제성이 매우

높은 산업이다. 와튼 경제예측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서독·일본 등 주요국가의 산업별 부가가치 생산액 중 관광산업이 농업·자동차·전자·철강·섬유 등의 산업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은 투자로 높은 부가가치 생산

한국은행과 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외화기득률은 수출산업의 1.3배인 82.8%인 반면 수입유발도는 수출산업의 2분의 1, 취업유발률은 수출의 2배에 달한다.

우리의 경우 외국관광객 한 사람 유치는 신발 110켤레, 칼라TV 12대의 수출과 동일한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관광선진국인 이탈리아의 경우, 90년 기준 관광수지 흑자(64억달러)로 무역수지 적자의 56%를 補填하고 있으며, 이 비율이 스페인은 44%, 싱가포르 36%, 프랑스의 경우도 34%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관광산업은 일명 굴뚝 없는 공장으로서 점점 늘어가는 산업재해, 공해증가와 같은 환경파괴의 위험이 없는 녹색산업으로서 환경 및 문화유산 보존에 크게 기여한다. 아울러 교통·상하수도 등 관광기반시설의 확충과 생활권 중심의 균형있는 관광자원의 개발로 국민복지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우리나라 관광의 현 좌표

우리나라를 찾는 외래관광객은 숫자면에서는 꾸준히 늘고 있으나 88년 이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을

〈표〉 우리나라 외래관광 변화추이

(단위: 천명, 백만달러, %)

	87년	88년	89년	90년	91년
외래관광객수	1,875 (13.0)	2,340 (24.8)	2,728 (16.6)	2,959 (8.5)	3,196 (8.0)
관광외화수입	2,290 (48.5)	3,265 (42.0)	3,556 (8.9)	3,559 (0.1)	3,426 (-3.7)
관광지출	704 (14.9)	1,354 (92.3)	2,601 (92.2)	3,166 (21.7)	3,784 (19.5)
관광수지	1,596	1,911	955	393	-358

註: 괄호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뿐만 아니라 관광외화수입도 최근에는 줄어들고 있어 그동안 지속적인 흑자를 보이던 旅行收支가 91년부터 적자로 반전, 3억6천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관광산업에 대한 국가적 관심의 퇴조

최근 몇년간은 관광산업에 대한 관심이나 지원이 대폭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과도한 규제만 강화되어 왔다. 예를 들면, 상품수출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부가세 零稅率이 상품수출보다 외화가득률이 높은 관광호텔의 외래관광객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지난 91년 7월부터 폐지되었다.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을 호화·사치성산업으로 규정하여 광고선전비 등 각종 세제지원이 축소되고 관광호텔의 사우나

주1회 휴무제, 관광호텔 및 관광객이용 시설업 등의 심야영업시간 제한, 대기업에 대한 관광시설용 부동산 취득금지 등 각종 행정적 규제가 강화되어 왔다.

우리 관광상품의 대외경쟁력 약화

관광호텔의 외화회득액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폐지됨에 따라 당장 10% 내외의 추가 여행요금이 발생하여 아시아 주요 경쟁국가들과 비교할 때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례로 외래관광객 1인당 總消費費 중 숙박·교통 등 필수경비의 점유율이 지난 88년 48%에서 91년부터는 52%로 크게 상승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외래관광객의 감소를 초래할 뿐

급증하는 관광수요에 맞춰 관광시설과 제도측면에서 건전한 관광여건이 정착되지 못할 경우, 외래 관광객이 발길을 돌림은 물론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 또한 검증을 수 없이 확대되어 여행수지의 적자폭은 더욱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니라 이미 입국한 관광객에게는 쇼핑비용 등의 절약을 간접적으로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관광의 침체는 국가산업 전체에 걸림돌

91년을 기점으로 적자로 반전된 여행수지가 더욱 악화되어 작년에는 4억5천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앞으로 별다른 조치가 없는 한 계속 증가될 전망이다.

이는 관광수입 감소에 따른 국제수지 균형 애로, 관광사업체의 경영 악화 및 투자위축에 따른 고용감소 등으로 국가 산업전체에 큰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지방관광지 개발에 따른 주민 소득증대, 지역균형발전 등 지방경제 활성화 역시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특히, 급증하는 관광수요에 맞춰 관광시설과 제도 측면에서 건전한 관광여건이 정착되지 못할, 경우 외래 관광객이 발길을 돌림은 물론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 또한 검증을 수 없이 확대되어 여행수지의 적자폭은 더욱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1세기를 향한 관광정책의 방향

관광은 이제 특정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리이다. 정부는 온국민 모두가 관광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권 중심의 다양한 관광지를 개발해 나가고, 굳이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다양한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각종 관광이벤트의 개발과 지방관광 행사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화·지방화·자율화 추세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우선 우리 국민의 관광이 활성화되어야 외

래관광객도 기꺼이 찾아올 수 있다는 전제 아래 관광진흥을 가속화하며, 복지정책 차원의 국민관광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성숙단계에 진입시킨다는 목표하에 2000년대를 대비한 관광진흥 중장기계획을 수립·추진중이다.

이러한 전제아래 오는 2001년에는 국민관광수요가 5억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외래관광객 유치 750만 명, 관광수입 110억달러를 달성하여 세계10대 관광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다.

다음에서는 이와 같이 불가피한 관광정책의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몇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관광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되어야

외래관광객의 구매의욕을 감퇴시키는 지금과 같은 관광시설에 대한 각종 규제, 즉 관광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나 관광호텔관련 신규 부대시설 설치의 신규허가 규제, 사우나 주 1회 휴무제 등은 재고되어야 한다. 또한 주말과 휴일이면 혼잡을 이루는 각종 관광시설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이나 관광(단)지내 관광시설용 투자에 대한 각종 투자제약 요인도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해말 소비성서비스업에서 제외된 바 있는 관광숙박업은 물론 현재도 소비성서비스업으로 규제되고 있는 여행업도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외국관광객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상품수출과 동일한 효과를 거두는 이상 관광호텔 등에 대한 부가세 및 특별소비세를 면세해 줌으로써 우리나라 관광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인 관광 편의 증진 차원에서 골프장·관광열차 등 관광시설에 대해

관광시설 확충에는 많은 財源이 소요되나
관광개발에 대한 국고지원은 점차 축소되고
있고, 관광부문의 유일한 정책금융인
관광진흥개발기금마저 연간 370억원에
불과하여 수요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관광투자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다각도의 방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서는 외국관광객 우선예약제 등도 도입할 필요가 있
을 것으로 보인다.

관광투자재원의 확보가 시급

국민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른 여가생활이 보편화됨
에 따라 91년 기준으로 1일 국민관광 수요는 1,200
만명에 달하였으나 수용능력은 수요의 절반 수준인
600만명에 불과한 실정이고, 앞으로 획기적인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관광시설 부족현상은 더욱 심화
될 전망이다.

관광시설 확충에는 다른 사회간접자본과 같이 많
은 財源이 소요되나 관광개발에 대한 국고지원은 점
차 축소되고 있고, 관광부문의 유일한 정책금융인 관
광진흥개발기금마저 연간 370억원에 불과하여 수요
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관광투자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다각도의 방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강
구되어야 할 것이다.

내국인 해외여행자와 관광호텔 등 관광시설 이용
자에 대해 일정액의 관광진흥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은 하나의 대안으로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된다. 아울러 民資誘致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에 대하
여도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시행권을 부여하고, 현재
선진각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3섹타 방식의 민
·관 공동출자 방식도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
다.

건전관광문화의 정착이 긴요

우리나라 한 사람의 해외여행경비는 외국인이 우
리나라에 와서 쓰는 비용의 약 2배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은 미국의 4분의 1, 영국의
3분의 1, 싱가포르의 2분의 1에 불과한 반면, 해외에
서 쓰는 여행경비는 91년의 경우 각각 미국의 2.4배,
영국의 3.3배, 싱가포르의 1.8배인 2,039달러에 달하
고 있다. 이를 바꾸어 얘기한다면, 지혜롭고 효율적
인 관광으로 여행경비가 절약된다면 결국 우리상품을
세계시장에 수출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하겠다.

관광은 단순 위락적인 비생산활동이 아니라 국가
의 주요 전략산업이다. 관광이 건전한 여가선용과 휴
식, 새로운 세계와의 만남이 되어 보다 성숙한 관광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
못지 않게 국민전체의 공통된 인식이 있어야 한다.

끝으로 궁극적인 목표인 '세계 속의 觀光韓國'과 국
민관광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은 관광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재평가가 선행되는 것
이라 할 것이다. 



박성득

체신부 통신정책실장

‘유엔우주통신 워크숍’을 마치고

○ 엔사무국은 총회의 위임에 따라 우주응용계획을 수립하여 우주 과학기술에 관한 워크숍·교육·회의 등을 지역별로 시행하고 있다.

95년 발사를 목표로 무궁화위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제우주의 해’인 92년도에 우주응용계획의 시행과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유엔과 체신부 공동주관으로 지난해 11월 24일부터 4일간 서울에서 ‘92 유엔우주통신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아시아·태평양지역 27개국 대표와 국내 산업체·학계·연구소 인사 등 모두 70여명의 국내외 위성통신전문가가 참가하여 위성통신기술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활발한 토의가 있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은 대륙국가와 도서국가가 혼재하여 위성통신의 수요와 위성통신기술의 이용 필요성이 다른 어느 곳보다도 큰 지역이다. 특히 이 지역은 지난 수년간 경제·사회분야의 성공적인 발전으로 전기통신 수요가 빠른 속도로 증가되어 왔고, 2000년대에는 전세계 경제물량의 4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관련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잠재적인 산업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통신시설의 확장과 능률적인 통신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다.

오늘날 통신은 지구상의 모든 개개인을 보다 밀접히 연결시켜 주고 이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통신의 중요성에 비추어 ‘유엔우주통신 워크숍’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어 장래의 이동위성통신계획들이 폭넓게

논의된 것은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계획들은 低軌道에 배치될 수십개의 소형위성으로 지구 전체를 연결하는 통신망을 구성하여 언제, 어디서, 누구와도 無線通信을 하게 하자는 구상으로 이는 21세기가 시작되기 전에 현실로 다가올 전망이다. 그리하여 90년대 후반에는 달리는 자동차·배·비행기 안에도 휴대용전화가 등장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번 워크숍에서의 주된 논의대상이 바로 이와 같은 미국의 ‘이리듬계획’과 ‘글러벌스타계획’, 국제해사 위성통신기구의 ‘프로젝트 21’, 러시아의 ‘소브칸스타 계획’ 등 육상·해상·공중 이동위성통신의 현재와 미래의 발전방향을 다루는 것이었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계는 지금 엄청나게 변해가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여 미국·러시아 등 위성통신의 선진국을 포함한 이 지역의 모든 나라들과 협력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위성통신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정보화사회의 실현을 촉진하고 국가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남원



김인환

환경처 폐기물관리국장

제2세대 환경문제

‘제2세대 환경문제’가 우리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有害廢棄物이나 핵폐기물의 처리문제가 바로 그것인데, 이들 문제는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방지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우선, 기술적인 처리능력으로 볼 때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된다. 유해폐기물을 埋立할 때의 지하수 오염방지기술이나 소각할 때의 유해가스방지기술이 그러하다. 더욱이 매립이나 소각방법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고 경제적인가에 대해 세계의 과학기술은 자신있는 대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둘째는, 유해폐기물의 안전처리에는 엄청나게 많은 재원이 소요된다는 사실이다. 유해폐기물처리 소각로 설치비용이 톤당 2~3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이 선진국의 예이다. 뿐만 아니라 유해폐기물의 매립으로 인하여 오염된 토양이나 지하수를 정화하는 데는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셋째는, 이들 유해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였을 때 환경이나 건강에 미치게 될 피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일지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상당히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미국 등 선진국들이 위험도 평가 등 많은 연구를 하고 있으나 만족할 단계는 아니다. 인간이나 동식물이 어느 물질에 어느 정도 노출되거나 그 물질을 섭취하였을 때 발암확률 등 위해성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문제가 쉽게 규명되지 않기 때문에 정책 판단이 어렵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이기주의로 인하여 폐기물처리시

설의 입지선정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이다. 이 어려움은 88년 쓰레기를 실은 전용선이 뉴욕을 떠난 후 미국내 6개주와 3개국을 6개월간이나 배회하다가 결국은 버릴 곳을 찾지 못하고 되돌아온 사례나, 수도권 해안매립지에 산업폐기물 매립을 반대하는 김포주민의 집단행동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유해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는 현대 산업사회를 사는 우리의 지상과제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와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선진국이 겪은 어려움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장단기 유해폐기물 관리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은 초기단계에 불과하다.

사실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같은 제1세대 환경문제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실정에서 제2세대 환경문제의 해결은 아직 너무나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지난해 6월의 리우환경회의를 계기로 세계는 지금 ‘제3세대 환경문제’에 여론이 쏠리고 있다. 기후변화, 生物種多樣性 보호 등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그것이다.

지역이기주의를 넘어 국가이기주의가 팽배해져 가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에 어떻게 대응하여 나갈 것인지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局面으로 들어서는 느낌이다. 1세대, 2세대, 3세대 환경문제를 한꺼번에 끌어안고 있는 우리로서는 차분히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지혜와 공동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하겠다. 



김신종

동력자원부 원자력발전과장

원자력, 정말 위험한가

그 년은 우리나라가 고리에서 최초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한 지 15년째가 되는 해이다. 그동안 원자력은 다른 發電源에 비해 월등히 경제적이고 국산화율이 높은 주종 발전원으로 성장해온 결과 이제 각 가정에서 쓰고 있는 전등 2개 중 1개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로 충당할 만큼 우리 생활의 주요한 일부분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국내 원전사업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70년초 석유파동 이후 원자력은 새로운 대체에너지원으로 각광을 받았으나, 79년에 미국의 TMI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80년대 들어 미국 등 일부국가에서 다소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특히 86년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전세계적으로 反原電 활동을 촉발시키면서 각국이 공통적으로 원전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사회 발전에 따른 여러 가지 여건변화로 원전 지역주민들의 제몫찾기 주장과 원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얹혀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최근 국내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원전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에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국민의 86%가 원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73%가 원전 추가 건설에 찬성하고 있는 반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45%가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근래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문제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해지면서 현실적으로 원전이 불가피한 대안이라는 점을 국민 대부분이 인식하고 있으면

서도 원전은 위험하다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자기 지역내에 원전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반대하는 우리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원전은 과연 위험한가. 환경보호단체나 반핵단체를 비롯한 일부 사람들은 원자력 그 자체가 위험하므로 더이상 계속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생활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설비는 그 자체로 위험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69년부터 86년까지 18년간 전세계에서 채광사고로 3,600명 이상이, 가스폭발사고로는 1,400명 이상이 사망하였다.

따라서 安全性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 그 자체보다는 현재의 과학기술로써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안전하게 통제하여 사용할 수 있는냐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옳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원전은 대단히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원전은 지진·태풍·해일 등 자연재해시에도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되고, 만일 사고가 발생되더라도 더이상 진전되지 않고 발전소가 안전하게 정지되도록 각종 안전설비를 장치할 뿐 아니라 그래도 사고가 진전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방사능이 발전소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다섯겹의 방호벽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원전은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모든 災害의 가능성에 대비하여 완벽하게 설계·건설되기 때문에 어느 산업설비보다도 안전하며, 그 결과 원전사고로 주변주민이 방사선 피해를 받을 확률은 사람이 낙뢰



로 사망할 확률보다도 적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그동안 국내 원전지역에서 원전으로 인해 추가로 받는 방사선량이 연간 1밀리렘 이하로 측정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콘크리트 건물·음식물 등으로부터 받는 자연방사선량이 약 200밀리렘에 이르고, X선 1회 촬영시에 약 100밀리렘의 방사선을 받는 점을 고려하면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적은 양인 것이다.

흔히 반원전론자들은 미국 TMI 원전사고나 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사례를 원전이 위험하다는 증거로 들고 있으나, 체르노빌원전은 원자료를 둘러싸고 있는 격납용기가 없는 점 등 서방원자로에 비해 치명적인 안전상의 결함이 있었을 뿐 아니라 사고 당시 수차례의 경보음이 울렸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모종의 실험을 강행한 것이 주된 사고원인이었던 것은 이미 밝혀진 바 있다. 또한 TMI 원전사고의 경우, 각종 조사결과 직·간접적인 인명피해는 물론 주변환경에 대한 방사능 오염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볼 때 위의 두 원전사고는 오히려 국내에서 가동 또는 건설되고 있는 원전의 안전성을

입증해 주는 사례라 하겠다.

지금 세계 각국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인 규제가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에너지의 안정확보를 위한 대안으로서 原子力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전력소비량이 일본의 약 3분의 1, 대만의 약 2분의 1 수준에 불과하여 앞으로도 전력소비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데 반해 부존자원이 극히 빈약한 실정이어서, 원전이 다른 모든 산업설비와 같이 잠재적인 위험은 있겠으나 이에 충분히 대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환경적·경제적 편익이 지대한 점을 감안할 때, 원전의 계속적인 건설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정부에서는 원전의 안전성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모든 자료를 숨김없이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원전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 확보에 노력을 다하고 있는만큼, 국민들도 이제는 우리나라의 에너지문제를 함께 숙고하면서 그 해결방안을 찾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남인준



허영선

교통부 해운정책과장

교통문제를 푸는 실마리

거대한 주차장이 되어버린 도로, 숨막히는 지하철,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열차표와 비행기표 구입, 그리고 자기 차례를 지겹도록 기다리고 있는 화물을 滿載한 선박...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있어서 잠시도 떼어놓을 수 없는 교통현장의 적나라한 모습이다.

교통문제가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첫번째 사회경제적 과제로 대두되면서 그동안 각계각층의 국민과 전문가들이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통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하는데, 교통시설 확충에는 상당한 시간과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한정된 국토공간으로 인하여 한계가 있으므로 교통수요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대책을 병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대응과 국민의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이렇게만 하면 일견 교통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다.

교통문제에 관한 한 누구나 일가견을 갖고 있으나 모든 상황을 고려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 구체적인 시행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이해조정과 많은 제약요인으로 애로에 부딪치고 마는데, 흔히들 말하는 ‘원론에는 일치하지만 각론엔 제각각’이라는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떤 교통시설을 어느 정도의 자금을 투자하여 언제 건설할 것인가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 교통수요를 조절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 도출이 어렵다. 심지어 합의가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경우도 있다. 다원화되고 민주화된 사회에서 정부정책에 대해서 찬반론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 결과는 없이 논란만 되풀이하는 것은 정책시행의 시기를 놓치고 귀중한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 아닐까.

교통문제는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즉, 일관성 있고 균형된 종합교통정책이 필요한데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교통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대책에 있어서는 산만한 갑론을박은 있어도 종합적인 결론이 없는 이유는 교통행정체제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수준 향상과 사회의 발전으로 교통권역의 廣域化 및 교통이용 서비스 패턴의 고급화 등으로 교통분야가 더욱 복잡해지고 교통서비스의 고급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신기술 도입 등이 요구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행정체제는 미비되어 있는 것이다.

미래의 사회는 자율화·개방화시대에 발맞추어 응집성 있게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체제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분산되고 산만한 교통행정체제는 점점 더 그 심각한 역기능만 드러낼 것이다.

교통문제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행정조직이 있어야 하며, 그 조직에는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실효성 있으면서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통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가능해질 것이다.

교통문제를 푸는 실마리는 바로 여기에 있다. 나라

‘맑고 깨끗한 대기’를 지키는 환경보전의 침병

대기보전국은
대기보전 측면에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고 규제수단을
마련하는 데
대기보전정책의
기본방향을 두고 있다.

글/ 편집실(최병규 기자)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이 있지만, ‘가장 환경적인 것이 가장 경제적인 것이다’라는 말이 등장할 날도 머지않은 것 같다.

언제부터인가 산업화의 긍정적 결과는 경제발전, 부정적 결과는 환경오염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경제발전의 상징처럼 솟았던 공장의 굴뚝들이 이제는 환경오염원으로 전락하여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도 그만큼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환경문제는 이제 ‘성장’이나 ‘환경보전’이냐를 놓고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人類의 생존과 직결된 20세기 지상최대의 과제로 떠올랐다.

지난해 12월초大選의 뜨거운 열기로 전국이 후끈하게 달아올랐을 때, 전세계 20대 거대도시 중 서울의 공기오염도가 멕시코시티에 이어 두번째라는 世界保健機構(WHO)



대기보전국은 금년 초에 대기환경 기준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시켰다



의 조사 보고서는 서울 하늘에서 별을 보기가 어려워졌다거나, 가로수가 말라죽고 있다거나, 건강을 위한 새벽 조깅이 도리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던 터에 나온 객관적인 평가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다.

우리나라의 대기보전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처 대기보전국은 즉각 세계보건기구의 조사보고서가 도시별로 순위를 정한 것은 아니고 6개 항목에 걸친 권고치 중에서 서울은 아황산가스와 먼지오염도만 기준에 초과했을 뿐이며, 이것도 최근 들어 급격히 개선되고 있다는 반박 자료를 발표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사건(?)으로 '환경오염'하면 폐놀과동과 수질 오염만 생각하던 국민들의 관심이 대기오염에 쏠렸고, 언론매체들이

앞다투어 대기환경 특집을 마련하면서 대기보전국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는 등 연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면서도 '신바람나게' 일하고 있다. 대기오염문제가 심각하다는 여론과 더불어 그 동안 관심권 밖에 있던 대기보전국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환경정책이 성장논리에 밀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환경개선대책을 내놓아도 관계부처간의 협의과정에서 우선순위가 뒤쳐지거나 배제되기 일쑤였는데, 이제는 각종 정책심의에서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쪽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대기보전국을 이끌고 있는 金鍾奭 국장의 설명이다.

대기보전국은 그야말로 국민들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기제도와 △대기관리과 △교통공해과 △소음진동과 등 4개과로 이루어져 있다.

대기제도와(과장 金德治)는 대기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7개 항목에 걸친 대기오염물질의 환경기준치 마련, 청정연료 보급 및 경유·병커 C유 등에 포함된 황함유량 저감대책,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각 시도별 오염도를 평가·발표하는 일을 맡고 있다.

대기관리과(과장 李凡信)는 대기오염원 관리 기본계획 수립, 대기배출시설 규제기준 설정, 악취 및 먼지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교통공해과(과장 李圭用)는 자동차공해 방지 종합대책 수립, 자동차 매연 및 소음허용기준 설정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소음진동과(과장 高允和)는 산업·생활·항공기 등 소음에 관한 규제와 진동규제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추진하는 업무들이 인체의 감각기관들에 직접 작용하는 체감오염을 다루는 일이어서 기준치 설정이나 규제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또한 정책효과가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꾸준히 나타나고 관련 산업이나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종 기준치나 규제를 만들 때는 많은 고심을 한다.

“대기오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을 세우게 되면 그것은 곧바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그것이

저소득층에 관련된 정책이거나, 요즘같이 기업의 여건이 어려울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대기오염 해소 정책은 국민의 소득수준과 부담을 수용하고자 하는 국민의 인식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金德治 대기제도과장은 정책추진에 따르는 고충을 이렇게 토로했다.

서울의 경우, 연탄사용가구가 42%나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을 모두 청정연료로 대체할 경우에도 엄청난 시설자금이 소요되고, 저황유류 공급에도 유가인상 등의 조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관련부처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정책추진에 이렇저런 걸림돌이 적지않다.

지수오염도와 체감오염도와의 괴리도 대기보전국이 안고 있는 고민거리 중의 하나. 각종 수치상으로는 대기오염도가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피부로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것은 계절별·지역별·시간대별로 대기오염도가 틀리기 때문이다. 계절별로는 난방연료 사용이 많은 겨울철이, 지역별로는 공장이나 대형빌딩 밀집지역이, 시간대별로는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의 대기오염도가 가장 심하다는 것.

우리나라는 아황산가스의 경우는 79년 2월에, 일산화탄소·이산화질소·옥시단트·부유분진·탄화수소 등 5개 항목은 83년 8월에, 남은 91년 2월에 각각 환경기준을 설정하여 현재까지 운영·관리하고 있다. 또한 항목에 따라서 장기기준과 단기기준을 별도로 설정하



여 관리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오염저감대책 등으로 환경기준을 달성한 아황산가스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기준을 강화하고, 탄화수소 등과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환경기준항목에서 이를 제외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아황산가스(SO_2)는 황과 산소의 화합물로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무색의 유독 기체이다. 석유의 정제나 중유가 연소할 때 원유에 함유되어 있는 황이 산화되어 공중에 방출되는데, 최근 에너지원이 석유로 전환됨에 따라 아황산가스의 대기 중 농도가 증가하여 대기오염물질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1952년 12월 5일부터 9일까지 수천명의 사상자를 내는 대참사를 빚었던 런던 스모그 때의 아황산가스오염도는 무려 0.7ppm 정도였다고 한다.

대기보전국에서는 그동안 추진

해오고 있는 대도시 내의 저황유 공급,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 고체연료 사용 금지 등의 조치로 서울의 아황산가스 오염도를 80년의 0.094ppm에서 지난 91년에는 0.043ppm으로 감소시켰으나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치(0.015~0.023ppm)보다는 2배 정도 높고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와 함께 난방연료로 사용하는 무연탄을 경유 또는 LNG 등으로 대체시켜 서울의 아황산가스 농도를 96년까지는 세계보건기구 권고치 수준인 0.021ppm까지 감소시키고 2000년까지는 0.014ppm까지 저감시켜 선진국의 대기환경 수준까지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먼지오염도도 84년의 $210\mu\text{g}/\text{m}^3$ 에 비하면 절반 정도나 줄어들었지만 91년 현재 세계보건기구 권고치인 $60\sim90\mu\text{g}/\text{m}^3$ 에는 훨씬 못 미

치는 $121\mu\text{g}/\text{m}^3$.

먼지 저감대책으로는 배출허용 기준을 양적 규제로 전환하고 시멘트·철강·연탄·레미콘공장 등 대도시 주변 먼지 다량 배출업소를 집중관리하는 등 먼지 다량배출시설 특별관리대책과 함께 대형 공사장 등의 飛散먼지 발생원의 근원적 제거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와 같은 대책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오는 96년에는 먼지오염도가 $60\mu\text{g}/\text{m}^3$ 로 개선되어 세계보건기구 권고치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기오염의 주범은 역시 자동차 배기가스.

“전체 대기오염물질 중 자동차 배출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34%에 이르고 서울의 경우는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연 등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발생시키는 시내버스·트럭 등 경유차 보유율이 미국·일본·유럽 등 선진국이 20% 이하인 데 비해 우리는 36%에 달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교통공해과 李圭用 과장은 자동차 배기가스가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설명했다.

자동차 속도가 3분의 1로 줄어들면 배출가스 발생량이 3배로 증가하고 연료소비량은 2배로 늘어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재 도로사정을 감안한다면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강화한다고 해서 쉽게 대기오염이 해소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기오염 관련 전문가이면서 工學博士이기도 한 金鍾奭국장은, “경제규모가 확

**대기보전국이
수행하는 업무는 정책효과가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꾸준히
나타나고 관련 산업이나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종 기준치나
규제를 만들때는
많은 고심을 한다.**

대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민간의 자율성이 확대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환경문제는 본질적으로 외부성과 공공성이 높은 부문이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대기보전정책의 기본방향도 대기보전 측면에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고 규제수단을 마련하는 데 두고 있다고 설명한다.

“생활의 質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경제개발정책과 환경보전정책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경제성장만 과도하게 강조할 경우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여 장기적으로 기업의 비용부담요인이 되고 이것은 결국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적 여론과 의식이 높아지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른바 님비(NIMBY) 현상 등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내 20

여곳에 설치되어 있는 측정소의 결과를 토대로 매월 대기오염도를 발표하고 있는데, 오염도가 심한 지역의 주민들은 집값이 떨어진다고 오염도 발표를 안 할 수 없겠느냐는 민원 아닌 민원이 들어온다면서 쓴웃음을 지었다.

환경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특히 감각공해에 대한 불만이 많아졌다. 최근 일선기관에 접수된 전체 환경관련 민원 중 악취 관련 사항이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옛날 같으면 이해하고 넘어갈 가두행상 소음, 건축현장의 진동 등에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생활의 質을 중시하는 사회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골프장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발파소음 및 진동으로 주변 농장에서 기르던 가축들의 출산율이 저하되는 등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는 최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도 앞으로의 환경기준치 설정이나 경제활동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맑고 쾌적한 대기’ 만들기는 대기보전국만의 과제가 아니다. ‘우리는 함께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지난해 리우환경회의에 참가했던 세계민간환경단체의 슬로건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시점에 서 있는 것이다 

對日 貿易逆調 개선을 위한 관세정책

수출입규모에 있어 일본은 우리나라의 제일 큰 수입대상국이고,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큰 수출대상국이다. 對日 무역수지는 88년의 39억달러 적자에서 91년에는 88억달러 적자, 92년 11월말 현재 73억달러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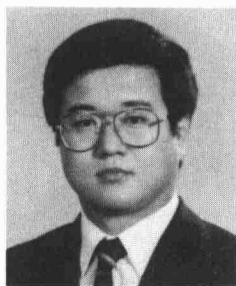
對日 수출입동향

對日 수출은 89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92년 11월말 현재 대일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5.4%가 감소한 106억달러를 기록하였는바, 이는 일본의 경기침체에 따른 수입 수요 감퇴와 중국·아세안 등 개도국에 비해 우리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산업별 수출동향을 보면, 88년 이후 경공업제품은 감소추세이고 중화학공업제품은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경공업제품의 수출이 부진한 이유는 주종수출품인 섬유류수출이 크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對日 수입은 89년 이후 91년까지 큰 증가세를 보였으나 92년 11월말 현재 대일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7.1%가 감소한 179억달러를 기록하였다. 92년중 대일 수입이 감소한 것은 국내 설비투자 부진

및 내수 진정에 따라 기계류·전자기기 등 자본재와 부품수입이 감소하였고, 국내 석유화학 및 철강의 공급능력 확대로 석유화학제품과 철강제품의 수입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92년 1~11월중 무역수지가 73억달러 적자로 전년 동기의 81억달러 적자보다 8억달러가 개선된 것은 대일 수출이 감소(-5.3%)한 가운데 대일 수입이 더 크게 감소(-7.2%)한 결과이다.



김병기
재무부 산업관세과장

대일 무역역조의 원인

92년중 對日 무역수지가 전년 대비 다소 개선되었다지만 대일 무역수지는 만성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수지역조는 근본적으로 기계·전자 등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대일 주종 수출품목인 섬유 등 경공업제품의 수출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국내산업은 70년대 이후 산업구조 고도화 및 수출드라이브정책의 일환으로 제조업분야의 조립가공업 부문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하였으나 외형적인 성장에 치중함으로써 자체기술 개발 및 관련부품·소재산업과의 균형발전을 이루지 못해 부품·소재를 외국에 의존하는 수입유발 산업구조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對日 기술·기계·부품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중화학공업의 무역역조 심화는 對日 무역역조 개선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 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하는 임금상승으로 ASEAN·중국 등 저임금을 바탕으로 하는 경쟁국에 비해 경공업제품 중심으로 對日本 수출경쟁력이 약화된 것도 대일

무역역조의 한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무역수지 동향

최근 일본은 버블경제의 붕괴로 92년 들어 86년 이후 가장 심각한 경기침체를 맞고 있다. 91년 이후 토지·주식 등 자산가격의 하락으로 민간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었고, 광공업생산 및 설비투자의 부진, 제품재고의 확대 등 기업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일본정부는 92년 들어서 2차례의 금리인하를 단행하고 재정정책도 긴축기초에서 확대기초로 전환하는 한편, 93년 들어 사상 최대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할

93년중에는 관세법을 개정하여 수출통관제도를 획기적으로 신속·간소화하여 수출업계의 물류비용을 절감시켜 수출경쟁력이 향상되도록 지원할 것이다. 수출통관은 세관통제를 거의 철폐하고 수입통관은 소비자보호·환경보전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제수단을 유지할 계획이다.

계획으로 있다.

이러한 경제여건 속에서 일본의 무역수지 흑자규모(통관기준)는 92년 11월말 현재 959억달러를 기록하여 사상 최대규모였던 86년의 827억달러를 이미 초과함에 따라 미국 등으로부터의 통상압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무역흑자 축소방안

을 적극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의 수출입 동향

일본의 수출은 89, 90년도에 잠시 정체현상을 보이다가 91년 이후 다시 급속한 증가추세에 있으며, 92년 11월말 현재 3,089억달러로 전년대비 8.4%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미국·EC 등 선진국에 대해서는 상대국의 경기침체로 부진한 반면 중동·중국 등 對開途國 수출은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품목별로는 전자제품·통신기기·자동차·일반기계·섬유제품 등 중화학공업제품 및 경공업제품 모두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수입은 88년에 전년 대비 25.3%로 크게 증가한 이후 둔화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92년 들어서는 11월말 현재 2,130억달러로 전년 대비 1.9% 감소세를 시현하였다. 지역별로는 對중국 수입이 그 규모가 점차 확대되는 반면 미국·EC 등 선진국과 한국·싱가포르에 대한 수입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품목별로는 석유제품과 식료품 수입이 증가한 반면 자동차·원유·석유제품·철광석·원피 등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표 1〉 대일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단위 : 억달러)

	88년	89년	90년	91년	92년 1~11월
수 출	120	135	126	123	106
수 입	159	175	185	211	179
무 역 수 지	-39	-40	-59	-88	-73

〈표 2〉 대일 중화학공업 무역수지 추이

(단위 : 억달러)

	전체 무역수지	對日 무역수지	對日 중화학공업 무역수지
88년	89	-39	-95
89년	9	-40	-98
90년	-48	-59	-107
91년	-97	-88	-132
92년(1~11월)	-51	-73	-112

〈표 3〉 일본의 무역수지 동향

(단위 : 억달러, %)

	88년	89년	90년	91년	92년 1~11월
수 출	2,649	2,752	2,869	3,145	3,089
(증가율)	(15.6)	(3.9)	(4.3)	(9.6)	(8.4)
수 입	1,874	2,108	2,348	2,367	2,130
(증가율)	(25.3)	(12.5)	(11.4)	(0.8)	(-1.9)
무역수지	775	644	521	778	959
(증가율)	(-2.8)	(-16.9)	(-19.1)	(49.3)	(41.4)



일본의 무역흑자 확대원인

92년 11월말 현재 일본의 무역수지 흑자는 전년동기 대비 41.4% 증가한 959억달러로서 사상 최대 규모인바, 이러한 일본의 무역흑자 확대는 수출의 견조한 증가와 대폭적인 수입둔화에 기인한다. 일본의 최근 수출증가는 수출물량 증가보다는 단가상승에 주로 기인하고 있고, 수출단가 상승은 엔화 강세 및 수출제품의 고급화 때문이다.

일본의 수입둔화는 고도의 기술 및 품질 등 자국제품의 국제경쟁력 우위로 일본시장에서 외국산 제품의 입지가 약화되고 일본소비자 대중에 自國產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 등이 우수하다는 판단 아래 국산품을 선호하는 의식구조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수입감소현상은 일본경기 침체와 버블경제 붕괴에 따른 자산소득 감소로 인한 소비위축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것이다.

일본 리서치종합연구소가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일본에서 수입을 저해하는 특수제도(규제)의 존재, 거래관행 및 유통경로의 복잡성이 수입감소의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주목할 사항이라 하겠다.

무역역조 개선을 위한 관세정책

대일 무역역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對日依存이 강한 기계류·부품·소재 등의 국산화 개발을 통해 산업구조의 대일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임금안정, 생산성향

〈표 4〉 수출물량 및 단가상승률 추이

(단위 : %)

	92년 1/4	2/4	3/4
물량증가율	2.8	2.6	1.0
단가상승률	5.0	6.6	10.0

상 및 기술개발 등을 통해 수출품의 대외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인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세정책차원에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한 실정이다.

국산화 개발 지원

對日 무역역조의 가장 큰 이유는 중화학공업분야에서의 무역역조 심화에 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대일의존도가 높은 기계류·부품 및 소재의 국산화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일의존 핵심품목 등에 대한 신규 국산 개발에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은 일본기업의 低價 수출공세이다.

이러한 신규 개발산업에 대한 일본기업의 저가 수출공세는 불공정한 무역으로 국내 관련산업에 큰 피해를 주게 되어 어렵게 기술개발을 하느니 손쉽게 수입·판매하려는 분위기를 팽배시켜 국내기업의 국산개발 의욕을 떨어뜨리고 수입 대체산업 육성을 저해시키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신규 국산개발된 품목의 일본기업으로부터의 저가수입 사례를 수집하여, 국산품이 초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국내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일정기간 관세를 인상하여 보호하는 조정관세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92년에도 2차에 걸쳐 신규 국산품목과 同種의 저가 수입물품에 대해 조정관세를 발동한 바 있다.

특히 국산개발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보다도 낮은 저가공세로 신규 국산개발을 방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제도

대일 무역역조 개선대책이 보다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술·기계·부품·소재 등 대일 수입의존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국산화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탄력관세제도의 적절한 운용으로 국내산업을 보호하여야 한다.

를 적극 활용하여 국내기업의 국산화 개발의욕을沮喪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국내산업피해구제제도가 될 수 있도록 덤핑방지관세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내생산이 곤란한 시설·기계류 등 자본재에 대해서는 관세감면 지원을 통하여 시설투자를 확충함으로써 대일 수출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겠다.

수입관리의 효율화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세인하예시제에 의해 93년도에는 수입품에 대한 평균관세율이 92년도의 10.1%에서 8.9%로 낮아지게 되었다. 대내외 경쟁촉진을 통해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통상마찰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관세인하 약속은 착실히 이행하되, 국제무역규범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통관절차·관세평가·산업피해구제 등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관세의 산업보호기능을 강화하고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신속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정관세·할당관세 등의 탄력관세제도를 적절히 운용해야 할 것

이다.

그리고 선진국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원산지 확인제도를 내실화하여 원산지 확인 대상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기준 및 稅番變更 기준에 관한 자료를 국가별·물품별로 축적하여 데이터 베이스화함으로써 수입선 다변화 품목이 우회수입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세관 통관행정에서도 수입상품의 품질·가격표시 사항에 대하여 세관에서 심사·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표시 불이행 물품 또는 허위표시 물품을 정밀히 검사하여 반송이나 통관보류 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도 특별법상의 수입요건 확인을 엄격히 하는 등 정당한 세관집행에 의해 수입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수출지원을 위한 관세정책 강화

93년중에는 관세법을 개정하여 수출통관제도를 획기적으로 신속·간소화하여 수출업체의 물류비용을 절감시켜 수출경쟁력이 향상되도록 지원할 것이다.

즉, 현재는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을 구별하지 않고 같은 수준으로

통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수출통관은 세관통제를 거의 철폐하고 수입통관은 소비자보호·환경보전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제수단을 유지할 계획이다. 예컨대, 수출촉진 차원에서 수출물품 제조 전에 수출신고를 허용함으로써 물품이 제조되는 즉시 선적지로 운송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출통관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면 통관시간이 종전 3~7일에서 1~2일 정도로 단축되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1,500억원 정도 物流費用이 절감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과의 관세율인하협상 강화

일본은 우리의 수출주종분야인 의류·신발·혁제품 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기업의 對日輸出 증진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

예컨대, 신발류의 경우 할당관세제도를 운영하면서 최고 60%까지의 高關稅를 적용하고 있고, 가죽의류의 경우는 관세율이 12.5~

20%로서 특혜관세율의 적용도 받고 있지 않아 대일 수출의 큰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류·신발·가방 등 우리의 대일 수출 주종품목의 관세가 인하되는 경우 대일 수출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GATT 체제내에서 일본의 관세인하를 원하는 다른 나라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면서 일본에 대한 관세인하협상을 통하여 우리 관심품목의 관세율이 인하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다.

비관세장벽 및 통관애로 해소

일본은 매우 복잡한 수입절차제도와 보건 및 안전규정 등을 이유로 까다로운 비관세장벽을 갖고 있어 우리의 대일 수출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잘 알려진 바이다. 이 때문에 우리의 대일 수출상품이 일본에서의 통관과정에서 지연·억제되거나 반송되어 수출업자가 과다한 비용 및 손실을 감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무역의 최종관문인 통관 단계를 이용한 세관규정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기업의 적응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의 수출업자가 일본의 수입절차 및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와 일본 세관당국과의 세관협력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수출상품이 일본의 통관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대일 무역역조 개선대책이 보다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술·기계·부품·소재 등 대일 수입의존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국산화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탄력관세제도의 적절한 운용으로 국내산업을 보호하여야 한다. 아울러 수출입관리를 효과적으로 하는 등의 관세정책 운용뿐만 아니라 세제·금융·통상 등 여러 분야와 유기적인 관계를 강화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경제정책 상담전화 「우리의 경제」 이용 안내

경제정책에 관한 건의나 경제통계에 관한 문의 등이 있으시면 경제 관련 사항 모두를 상담해 주는 경제정책 상담전화 「우리의 경제」를 이용하십시오.

「우리의 경제」는 경제정책에 대한 건의는 내용을 정리하여 정책 수립시 참고하고, 정책관련 문의는 즉석에서 응답해 주고 있으며, 자료 확인 등 시간이 필요하면 차후에 전화 또는 우편으로 대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전화 : ☎ (02) 507-2100 • (02) 507-3100



석유의 안정적 · 경제적 공급을 위한 送油管사업의 추진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공업화 중심의 경제개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결과, 괄목할 만한 경제 규모의 확대 · 성장과 더불어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輕質油를 중심으로 석유소비량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주요 소비지에 적기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석유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러나 기존 수송수단인 철도 · 항만 · 도로 시설의 수용능력은 이제 한계에 달해 석유공급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더욱이 우리나라 정유공장의 90% 이상이 남부해안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수도권을 비롯한 주요 소비지까지 석유의 장거리수송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현대화된 석유 수송수단인 送油管(oil pipeline)의 조기건설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89년 12월 송유관사업법을 제정하여 송유관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국송유관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송유관사업을 전담할 대한송유관공사를 설립

하였다. 이에 따라서 1단계로 총 6,095억원을 투자하여 서울~인천, 서울~대전, 서울~온산 구간의 총 955km 송유관을 94년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송유관사업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가 일천하여 관련 법률 ·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가운데 전국에 걸친 방대한 사업용지 확보 및 각종 인 · 허가의 조속한 해결, 막대한 초기투자 소요자금의 적기확보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원활한 송유관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이러한 여

러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시급히 모색하여야 할 실정이다.

우리나라 送油管事業, 90년부터 본격 착수

우리나라에서 송유관 건설사업이 정책에 처음으로 반영된 것은 83년 12월 제5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수정시에 송유관사업이 에너지 자원 부문에 포함되면서부터이다. 이후 정부에서는 점증하는 경질유의 수송체계를 현대화하여 저렴하고 안전하게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전국에 걸친 장거리 송유관망을 건설키로 하고 85년 7월 '장거리 송유관운영 기본계획'을 확정된 바 있다.

그 첫단계 사업으로 서산~천안 구간 송유관이 89년 7월에 완공되어 우리나라도 송유관 수송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그러나 89년 이후 난방용 경질유의 수요급증과 전국적인 교통체증 현상으로 유류의 적기 수송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송유관의 조기건설이 긴요하여 송유관사업 기본계획을 재조정하여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89년 12월



정만원

동력자원부 석유수급과장

송유관사업법을 국회에서 의결·제정하여 송유관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가 석유사업기금에서 50.8% 出資, 민간(정유 5社 각 8.2%, 항공 2社 각 4.1%)이 49.2%를 공동출자하여 90년 1월 20일 대한송유관공사를 설립하였다.

그해 11월 정부에서 '전국송유관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대한송유관공사가 송유관건설을 전담케 함으로써 대한송유관공사는 전국송유관 건설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송유관사업의 현황

우리나라 송유관건설은 9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정유공장과 화학공업단지간의 송유관을 제외하고 정유공장과 주요 저유소간의 단거리송유관은 회사의 필요에 따라 이미 부분적으로 건설 운용되고 있다. 기존 송유관 및 현재 추진중인 전국송유관사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한국중단송유관

(Trans Korea Pipeline)

우리나라 장거리송유관은 69년

정부에서는 89년 12월 송유관사업법을 제정하여 송유관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국송유관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송유관사업을 전담할 대한송유관공사를 설립하였다. 이에 따라 1단계로 서울~인천, 서울~대전, 서울~온산 구간의 총 955km 송유관을 94년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중이다.

9월 포항에서 서울까지 총 연장거리 414km, 관경 6~8인치짜리 송유관 건설공사를 착수하여 70년 하반기에 완공한 것이 최초이며, 그 후 의정부까지 연장되어 총 연장은 현재 451km에 이르고 있다. 그 운영실태를 보면, 처음에는 공공용 석유제품을 송유하기 위해 건설되었으나 수송능력(3만3천배럴)에 비해 송유물량이 적어 대구에서 서울까지의 구간에서는 유공의 물량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서 오히려 民需用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공송유관(Y. K. P)

油公의 정유공장이 위치한 울산에서 대구 한국중단송유관까지 연결하여 대전·서울지역의 석유수요를 장거리송유관으로 수송·공급하고자, 71년 5월 울산~대구 구

간의 약 102km의 관경 12인치짜리 송유관건설에 착수하여 72년 6월 30일에 완공하였다.

울산~대구 간의 유공송유관과 대구~서울 간의 한국중단송유관을 통해 서울까지 수송할 수 있는 물량은 하루 3만6천배럴(울산~대구간은 1일 5만5천배럴)인데, 78년에는 경인지역의 경질유 소비량 중 유공에서 공급하는 전물량을 수송했으나 그 이후부터는 석유 수요증가로 인하여 일부만을 송유관으로 수송하고 나머지는 유조선으로 인천항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한국송유관(株)의 송유관

우리나라 최초의 송유관 전문회사로서 한국석유개발공사와 극동정유가 합작으로 86년 한국송유관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대천~천안간 송유관 건설공사를 89년 7월 완공했는데, 이 송유관은 총 연장 93km이며 管徑 12인치로서 하루 송유능력은 약 3만4천배럴에 달한다. 현재 경질유만을 수송하고 있으나 향후 대한송유관공사가 추진 중인 전국송유관 시설과 연계되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표 1> 송유관건설 기본계획

(단위 : km, 억원)

		경로	배관	사업비	완공목표
1단계	경인	인천(울도) ————— 서울 			

(단위 : km, 억원)



대한송유관공사의 전국송유관사업

대한송유관공사는 설립과 동시에 전국송유관사업을 구간별·단계적으로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우선 시급한 경인가간 송유관건설을 90년 12월 착공하여 92년 10월말 완공하고, 남북구간(여천~서울, 온산~서울)은 91년 12월 착공, 94년말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한편, 전국송유관 건설사업 중 경인송유관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일원지역이 전국 석유수요의 40% 이상을 소비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경인고속도로의 교통량 폭증으로 적기수송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 휘발유·등유·경유와 같은 민생용 유류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송능력 제고를 위해

지난 90년 12월에 착공하여 2년 만에 완공을 보게 된 것이다.

경인송유관은 전국송유관 건설사업 중 제1단계 사업으로서, 수도권 강북지역의 휘발유·등유·경유의 공급을 관할하는 북부저유소는 저장탱크 14기, 출하시설 33기를 갖추고 있으며 14기에 달하는 저유탱크에 의한 48만7천배럴의 석유제품 간접비축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와 함께 항공유 6만5천배럴, 일반 경질유 7만2천배럴 등 하루에 총 13만7천배럴의 유류를 수송, 수도권 일원지역에 대한 석유류 수급안정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하루 평균 2천여대의 유조차 통행으로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표 2〉 전국송유관 건설사업 계획

(단위 : km, 천배럴, 억원)

구 간		관 로	저유소		사업비	건설기간
			개소	시설능력		
경인가간	인천→서울	55	1	487	612	90.4~92.11
남북구간	여천→서울	461	2	1,812	2,697 2,786	90.11~94.10
	온산→서울	439				
계		955	3	2,299	6,095	

의 교통과밀현상 완화와 함께 환경 오염 저감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송유관에 의한 석유수송체계를 확립함으로써 年 120억원에 달하는 유류 수송비를 절감,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월동기 민생용 유류의 적기공급으로 석유수급 원활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적 이해와 정책적 배려 필요

전국송유관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현안과제는 전국에 걸친 방대한 사업용지의 적기 확보를 비롯해 각종 사업 인·허가의 조속한 해결 등이다. 전국송유관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송유관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송유관사업은 이제 시작단계이므로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야기되는 문제점 해소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및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첫째, 많은 토지를 필요로 하는 사업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국가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그 사업이 정착되고 발전할 수 있는데, 송유관사업은 용지확보가 가장 큰 당면과제이다. 즉, 도로사업과 마찬가지로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까지 송유관을 埋設하여 석유를 수송하고 또 일정 수준 저장도 해야 한다.

이 많은 용지를 합리적으로 적시에 확보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다른 公益 또는 國益 사업과 마찬가지로 송유관사업은

전국송유관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현안과제는 전국에 걸친 방대한 사업용지의 적기확보를 비롯해 각종사업 인·허가의 조속한 해결 등이다. 전국송유관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송유관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적 이해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둘째, 송유관건설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전국에 걸쳐 시도·시군·읍면 등 각급 행정기관을 상대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도로점용 및 굴착허가,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지역이 기주의적 집단민원도 야기될 수 있고, 지방자치제가 실시·정착됨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사업에 대한 이해를 달리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인·허가문제가 얼마나 조속히 매듭지어 지느냐 하는 것이 사업추진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셋째, 송유관사업은 초기투자비가 막대한 자본집약적 장치사업이다. 따라서 투자비를 어떻게 조달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재원조달일정에 따라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송유관사업은 다행히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여부는 전적으로 정책의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는바, 국가의 주요 사회간접시설이라는 차원에서 정부관계부처간의 적극적인 협조·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송유관의 설계·운용은 안전성 확보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완벽한 시설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진기술을 습득·축적해 나가야 하고, 유사시의 대비책도 강구되어야 한다.

송유관사업은 앞에서 적시한 네 가지의 주요 문제점을 하나하나 심도있게 검토하여 제도적 장치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면서 그 사업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송유관사업의 가장 바람직한 이상형은 수도나 가스배관이 각 가정마다 들어가듯, 전국의 주유소를 배관으로 연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현시점에서는 다만 이상이고 바람일 뿐 실현 가능성은 요원하다. 그러나 동사업의 경제성과 공익성을 잘 조화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전국의 주요 소비지를 중심으로 단계적인 확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남관



製藥産業의 활성화를 위한 신약개발 지원

제약산업은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큰 고도의 기술집약적·고부가가치 산업이다. 각국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인구증가와 복지정책, 그리고 경제수준 향상 등으로 의약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에도 안정적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며, 2000년대의 전세계 의약품 시장규모는 3천억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세계 제약산업의 현황

현재 세계의약품 시장의 특징은 다국적 기업에 의한 독과점적 지배 형태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의약품이 가지는 특성 때문에 다소 특수한 양태를 보이고 있다.

세계 50대 製藥 다국적 기업들이 전세계 총의약품 판매의 약 3분의 2를 점유하고 있지만 의약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상호대체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어느 기업도 세계시장의 5%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 못하며, 어느 나라도 세계 제약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하는 경우가 없다.

그러나 부문별로는 이들 다국적 기업들이 독과점적 지배력을 갖기에 충분한 만큼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이것은 신약의 개발에 고도의 기술과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상당한 기술이 축적되어 있고 막대한 자금과 시간 소요, 그리고 그에 따른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소수 대기업이 세계 제약산업을 지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제약산업, 구조조정 필요

국내 제약산업의 경우 80년대 후반 이래 노사분규로 인한 임금상승, 제약업체간 과당경쟁 심화 등

內的要因과 통상압력 가중, 물질특허 도입으로 인한 로열티 상승, 원자재가격 상승 등 外的要因으로 인하여 성장폭은 감소추세이나 인구노령화·문화질병 증가·전국민의료보험 및 약국의 의료보험 실시 등으로 인한 수요증가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그 성장의 기초가 연구개발(R&D) 투자에 의한 연구지향적·기술축적적 과정에 있지 않고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에 대한 복사품목(copy 품목) 및 드링크류 등 일반의약품 생산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은 곧 한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수경재배한 나무가 무한정 성장할 수 없듯이 新藥開發이라는 뿌리 없이는 국내 제약산업의 지속적 성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연판

보건사회부 약품안전과장

政府, 신약개발 적극 지원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내 제약산업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이에 실패할 경우 수입자유화·자본자유화가 이미 이루어진 현시점에서 합작투자회사 등 다국적 기업은 우수한 신약을 바탕으로 점차적으로 국내의약품 시장점유율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되며, 한정된 국

내 시장에서 국내기업은 업체간 과당경쟁만 심화되어 경영악화 및 이에 따른 기술개발 투자능력 상실 등 악순환이 거듭될 것으로 보여 궁극적으로는 국내 제약산업 자체가 斜陽化될 우려가 없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내 제약기업이 국제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길은 신약개발밖에 없다는 판단 아래 90년부터 신약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산업계·학계·연구기관이 공동으로 협동연구체계를 갖추어 신약개발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

신약개발 지원사업은 우리나라도 신약개발 기반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켜 2000년까지는 적어도 5~10개 품목의 新藥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신약개발사업이 민간기업의 주도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편, 궁극적으로 신약개발 기반기술을 향상하고 신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91년부터 新藥開發研究資金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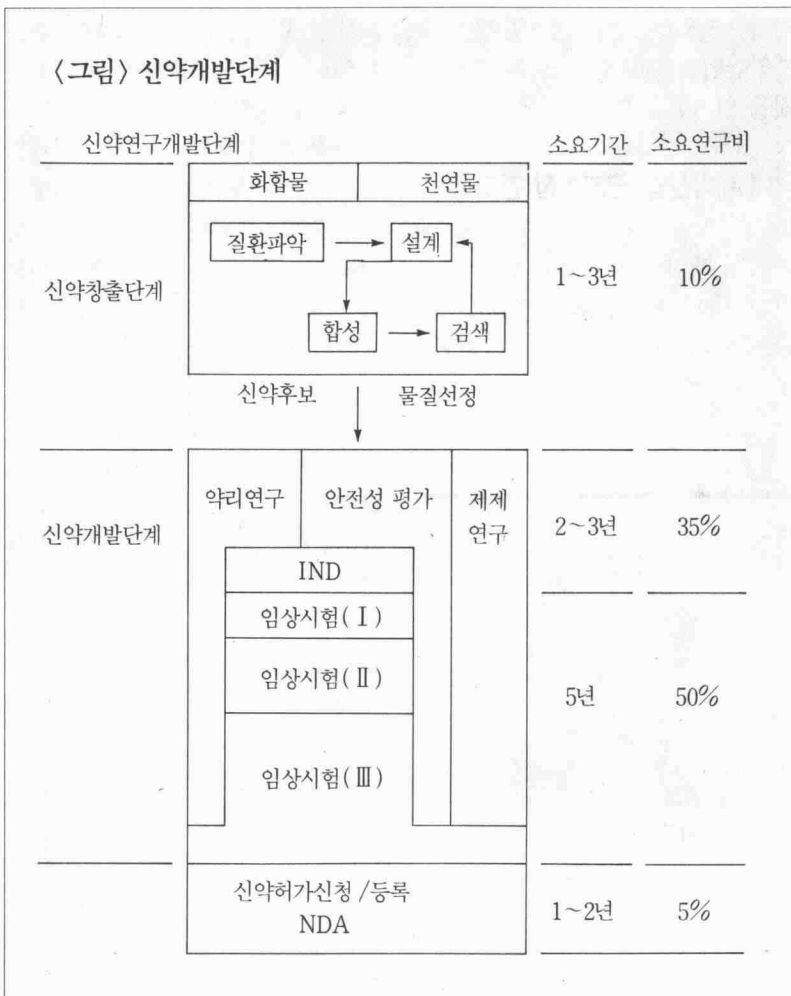
제약기업도 정부의 신약개발 지원 정책에 힘입어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2000년까지는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5~10개의 신약이 국내에서 개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약개발 지원의 필요성

그간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50년대 완제의약품 수입, 60년대 원료수입 및 製劑化, 70년대 원료의약품 국산화, 80년대 신공정 개발이라는 단계를 거쳐 현재는 신약개발 초기단계인 신물질 창출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최근 물질특허제도 도입(87년), 韓·美, 韓·EC간 지적재산권 협상 타결(89년, 91년) 및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진전(92년) 등 보호장벽이 날로 심화되면서 신약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신약개발이라는 일련의 과정이 보통 10년 이상의 연구기간과 500억~1천억달러가 소요되며, 아울러 튼튼한 기초과학의 기반이 없으면 이러한 소요기간과 투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본 및 기술

〈그림〉 신약개발단계





축적이 미흡한 국내 제약산업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도전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정부에서는 신약개발이 매우 큰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있으며 에너지 절약형 산업으로서 빠른 성장을 나타내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단순모방이 어려운 두뇌집약적 산업으로서 미래지향적 투자대상으로 매우 적합하다는 점과, 국내 제약산업의 사양화가 국민보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내 제약업체의 신약개발을 위한 자본 및 기술력이 확립될 때까지 産·學·研 및 정부 역할이 상호보완적으로 조화되도록 2000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할 신약개

발 연구지원사업을 수립·추진중이다.

2000년까지 5~10개 품목 신약 독자개발

신약개발 지원사업은 우리나라도 신약개발 기반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켜 2000년까지는 적어도 5~10개 품목의 신약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신약개발사업이 민간기업의 주도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 신약 개발과정의 여러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지원이 요구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신약개발연구지원센터(신약개발연구센터·질환모델동물연구센터·임상시험연구센터 및 의약품헌정보센터 등)를 신설하고, 모든 임상시험을 담당하고 있는 國立保健安全研究院 및 의약품 안전성 관리기준(KGLP) 지정기관의 기능을 보강하거나 확대시켜 신약개발사업의 원활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신약개발에 있어서 각 단계별 연구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신약개발 관련분야를 6개(신약창출, 약효검색기술, 약효·약리대사, 임상시험평가, 안전성시험평가, 제제화)로 구분하여 집중 지원할 것이다. 또한 연구인력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업의 연구소 및 대학 등 관련 모든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이들의 참여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분야별로 그룹을 형성시켜 協同研究體系를 구축할 계획이다.

본 신약개발사업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예정이다.

제1단계(91~96년)에서는 신약개발관련 6개 분야의 육성과 신약개발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사용수요가 높은 연구지원센터의 시설 및 보강을 집중 지원하여 신약개발사업의 기반기술 구축과 지원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며, 제2단계(97~2001년)에서는 제1단계에서 정착된 기반기술 및 시설의 지속적인 지원 육성과 함께 주로 신약개발 연구에 역점을 두어 신약개발에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추진계획 및 투자내역

이러한 신약개발 지원계획에 따라 정부에서는 産·學·研 연구지원 사업으로서 91년도에 처음으로 6개 분야 10개 과제를 선정하여 5억 6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어 92년도에는 12억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개 과제를 지원하였고 2000년까지는 총 2,800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추진중이다.

신약개발지원기구 설립을 위하여는 92년부터 2000년까지 신약개발에 필수적인 과정인 臨床試驗을 국제수준으로 실시하기 위한 임상시험센터 건립, 창출된 新物質의 효능을 검색하기 위해 사람과 특정 질환과의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모델 동물을 관리하기 위한 질환모델연구센터, 신약개발과 관련된 기술정보·특허정보 등을 신속히 수집하기 위한 의약문헌정보센터를 국립의료원·대학병원 및 국립보건안전연구원 등에 설립할 수 있도록 545억원을 지원하는 등 모두 3,345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약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준제정 및 허가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의약품 안전성 관리기준 적격기관을 확대하고,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KGCP) 기술을 국제적 수준으로 보완 발전시키면서 신약 재심사제도 도입과 아울러 韓國製藥協會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및 신약개발을 위한 기금조성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용이

91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신약개발에 대한 종합적 지원은
업계의 신약개발 노력 촉진, 업계의 신약개발에 따른
재정적 부담의 완화, 産·學·研 연계에 의한
기술협력 촉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한 생약제제 및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연구개발 강화를 위해 국립보건원에 생물검정센터를 설립하고 보건사회부에 生藥課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전문인력 유치활용 방안 및 기술개발 투자에 대한 해당기업의 금융 및 세제상 상대적 우대조치 등 적극적인 지원제도 확립이 뒤따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산·학·연 및 정부의 효율적 협력체제가 관건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경우 신약개발이란 명제는 단순 기술력 제고 및 고부가가치 물질 創製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향후 제약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즉, 신약개발 창제를 통한 업계의 구조개편, 역할분담,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국내에서조차 제약산업이 사양화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91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신약개발에 대한 종합적 지원은 업계의 신약개발 노력 촉진, 업계의 신약개발에 따른 재정적 부담의 완화, 산·학·연 연계에 의한 기술협력 촉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신약개발과 관련된 정부차원에서의 성공적인 지원사례로는 日本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일본은 1, 2차 세계대전까지 현재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외국제품의 복제에 의해서만 제약산업을 지탱하여 왔으나, 장기적인 안목에 의한 제약산업체에서의 막대한 연구개발비 투자와 산·학·연 합동연구개발체제를 주도하는 정부의 노력이 맞물려 종래 어느 의약선진국보다 짧은 기간내에 신약개발 생산국으로서 발돋움하였으며, 현재는 축적된 경제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EC 등과 함께 세계 의약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서 보듯이 신약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궁극적으로 신약개발에 따른 모든 권리를 향유하게 될 製藥業界에서의 과감한 투자와 기술개발 노력, 또한 학계·연구단체의 소명감 있는 적극적 협조 없이는 좋은 결실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신약개발의 3박자를 구성하고 있는 업계, 학계·연구단체 및 정부 간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제 여부가 신약개발 결실의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각 분야의 관계자들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박복**



경제정책해설

앞으로 10년간 自動車保有臺數 전망

우리나라의 자동차보유대수는 해방 당시 남북한 통틀어 7,326대였고, 60~80년대 고도경제성장기를 거쳐 82년에는 그 증가율이 최초로 두자리수인 13.1%가 되었다. 그 후 85년 5월 100만대, 88년 12월 200만대, 90년 6월 300만대, 91년 10월 400만대, 92년 10월 500만대를 돌파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차량의 급격한 증가는 85년 이후 소득수준이 사회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되고 자가용의 편의성과 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자가용 보유욕구가 상승되었기 때문이다.

政府, 자동차 보유대수 전망치 예측·발표

이러한 자동차 증가 추세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며 앞으로 10년후 전국의 전체 자동차보유대수, 차종별 대수, 지역별 대수는 각각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교통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주택건설·에너지·조세 등 정부의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는 것은 물론 각종 기업의 경제활동에도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된다.

그러나 최근 각종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동차보유대수 전망치가

서로 다르고 그 전망치도 전국의 전체 차량대수 또는 승용차대수만 분석될 뿐, 승합차(버스)·화물·특수차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으며 시·도별 보유대수에 대한 전망자료는 더욱 미비하여 각급 정부기관이나 公·私團體에서 신뢰할 만한 공식적인 자동차보유대수 전망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정부에서는 최근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2001년까지의 연도별, 차종별, 시·도별 자동차보유대수를 예측, 발표하였다.

자동차보유대수를 전망하는 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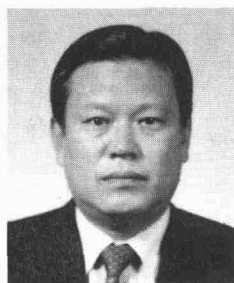
는 여러가지 방식이 있으나 크게 다음 두가지로 대별할 수가 있다.

外挿法에 의거, 추정치 전망

첫째방식은,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제주체의 소비행태와 수요행태를 분석하여 자동차 구입을 결정하는 제반 변수(1인당 소득, 도로연장, 도로포장률, 주차면적, 차량가격, 휘발유가격, 수송통, 수송통킬로 및 지하철·철도 등 대체교통수단의 수송분담구조 등)마다 正(+) 또는 負(-)의 가중치를 더하여 일정한 모델함수를 만들어 단계적인 회귀분석을 하는 모델함수분석법이다.

모델함수분석법은 분석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예측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경제주체 즉, 자동차구입자의 지출행태가 미시적으로 면밀히 분석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물가수준·소득수준·도로계획·주택보급률 등을 예측가능한 수치로 알 수 있을 때 비로소 적용가능한 것으로서 자동차 대중화가 완료된 선진국에서 보다 적합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두번째 방식은 최근 다년간(10년 정도)의 자동차 증가대수, 증가율 등의 증가추세와 차종별 구성비



박영삼
교통부 차량과장

변화추이, 지역별 분포도 변화 및 외국의 자동차보유대수 증가추이 등을 종합하여 外插法으로 장기전망을 하는 방법이다.

外插法은 상대적으로 분석자의 주관에 많이 작용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나 최근 연간 자동차증가율, 증가대수 등 증가추세와 거시적 국내동향에 선진국의 자동차대중화 시기의 총량변수(인구 천명당 보유대수)의 변화궤적을 감안하여 자동차보유대수를 전망한다.

선진국들의 인구 천명당 자동차 보유대수의 변화궤적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외삽법은 개도국의 자동차보유대수 장기전망에 흔히 이용되며, 분석자의 전문적 판단감

각급 정부기관이나 公·私團體에서 신뢰할 만한 공식적인 자동차보유대수 전망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정부에서는 최근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2001년까지의 연도별, 차종별, 시·도별 자동차보유대수를 예측, 발표하였다.

각이 반영될 수 있어 자동차대중화(일반적으로 5인 가족을 상정하여 인구천명당 승용차보유가 200대 수준에 이르면 대중화가 종결된 것으로 봄)가 진전되고 있는 나라에 보다 적합하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2001년도까지의 자동차증가 전망도 외삽법에 의거, 분석하였다.

향후 10년간의 우리나라의 연도별 인구전망, 과거 10여년간의 차종별, 시·도별 변화추세와 미국·일본 등의 자동차 대중화시기의 변화유형 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자동차보유대수를 예측하면 다음과 같다.

97년 자동차 보유대수 1천만대 넘어설 전망

전국 자동차보유대수 전망

우리나라의 자동차보유대수는 97년에 1천만대를 돌파하고 2001년에는 1,380만대에 이르며 이때 승용차는 972만대(70.4%), 화물차 289만대(21%), 乗合車 109만대(7.9%), 특수차 9만7천대(0.7%)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동차보유대수는 각 도시별 전철망 건설계획과 경부고속전철 건설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소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1년의 시·도별 보유대수를 보면, 서울이 317만대(23%), 경기도 261만대(18.9%), 부산시 95만대(6.9%), 인천시 79만대(5.7%), 대구시 79만대(5.7%), 대전시 47만대(3.4%), 광주시 40만대

〈표 1〉 2001년까지 전국의 자동차보유대수 전망

(단위 : 천대,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계
92년	3,478 (27.5)	485	1,262	25	5,250 (23.6)
93년	4,255 (22.3)	584	1,480	31	6,350 (21.0)
94년	5,183 (21.8)	678	1,721	38	7,620 (20.0)
95년	5,956 (14.9)	750	1,872	52	8,630 (13.3)
96년	6,561 (10.2)	793	2,030	56	9,440 (9.4)
97년	7,168 (9.3)	852	2,188	62	10,270 (8.8)
98년	7,735 (7.9)	906	2,343	66	11,050 (7.6)
99년	8,340 (7.8)	962	2,495	83	11,880 (7.5)
2000년	8,991 (7.8)	1,023	2,686	90	12,790 (7.7)
2001년	9,715 (8.1)	1,090	2,898	97	13,800 (7.9)

註 : 괄호 안의 숫자는 전년말 대비 증가율임.

〈표 2〉 시·도별 전체 자동차보유대수 전망

(단위 : 천대,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기타	계
92년	1,570 (14.2)	243 (24.6)	812 (33.1)	407 (17.6)	315 (20.2)	132 (24.5)	148 (25.4)	1,623 (31.3)	5,250 (23.6)
93년	1,784 (13.6)	298 (22.6)	1,048 (29.1)	476 (17.0)	381 (20.9)	159 (20.5)	178 (20.3)	2,026 (24.8)	6,350 (21.0)
94년	2,027 (13.6)	365 (22.5)	1,318 (25.8)	556 (16.8)	457 (19.9)	191 (20.1)	213 (19.7)	2,493 (23.0)	7,620 (20.0)
95년	2,201 (8.6)	432 (18.4)	1,536 (16.5)	630 (13.3)	518 (13.3)	216 (13.1)	250 (17.4)	2,848 (14.2)	8,630 (13.3)
96년	2,341 (6.4)	491 (13.7)	1,709 (11.2)	689 (9.4)	558 (7.7)	245 (13.4)	283 (13.2)	3,124 (9.7)	9,440 (9.4)
97년	2,496 (6.6)	544 (10.8)	1,900 (11.2)	739 (7.3)	606 (8.6)	267 (9.0)	308 (8.8)	3,410 (9.2)	10,270 (8.8)
98년	2,630 (5.4)	597 (9.7)	2,055 (8.2)	785 (6.2)	652 (7.6)	298 (11.6)	342 (11.0)	3,691 (8.2)	11,050 (7.6)
99년	2,792 (6.2)	653 (9.4)	2,222 (8.1)	843 (7.4)	689 (5.7)	333 (11.7)	380 (11.1)	3,968 (7.5)	11,880 (7.5)
2000년	2,967 (6.3)	716 (9.6)	2,405 (8.2)	895 (6.2)	729 (5.8)	371 (11.4)	422 (11.1)	4,285 (8.0)	12,790 (7.7)
2001년	3,174 (7.0)	787 (9.9)	2,608 (8.4)	952 (6.4)	787 (7.9)	400 (7.8)	469 (11.1)	4,623 (7.9)	13,800 (7.9)

註 : 괄호 안의 숫자는 전년말대비 증가율임.

〈표 3〉 시·도별 승용차보유대수 전망

(단위 : 천대,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기타	계
92년	1,198 (15.6)	162 (30.6)	529 (41.1)	260 (22.1)	213 (24.5)	85 (28.7)	102 (30.8)	929 (39.6)	3,478 (27.5)
93년	1,357 (13.3)	200 (23.4)	711 (34.4)	311 (19.6)	260 (22.1)	106 (24.7)	127 (24.5)	1,183 (27.3)	4,255 (22.3)
94년	1,544 (13.8)	249 (24.5)	938 (31.9)	363 (16.7)	311 (19.6)	129 (21.7)	161 (26.8)	1,480 (25.8)	5,183 (21.8)
95년	1,680 (8.8)	292 (17.3)	1,131 (20.6)	405 (11.6)	351 (12.9)	155 (20.2)	185 (14.9)	1,757 (18.1)	5,956 (14.9)
96년	1,745 (3.9)	328 (12.3)	1,279 (13.1)	440 (8.6)	380 (8.3)	177 (14.2)	210 (13.5)	2,002 (13.9)	6,561 (10.2)
97년	1,871 (7.2)	366 (11.6)	1,419 (10.9)	473 (7.5)	409 (7.6)	201 (13.6)	236 (12.4)	2,193 (9.5)	7,168 (9.3)
98년	1,988 (6.3)	394 (7.7)	1,547 (9.0)	511 (8.0)	433 (5.9)	224 (11.4)	263 (11.4)	2,375 (8.3)	7,735 (7.9)
99년	2,118 (6.5)	425 (7.9)	1,685 (8.9)	542 (6.1)	459 (6.0)	250 (11.6)	292 (11.0)	2,569 (8.2)	8,340 (7.8)
2000년	2,257 (6.5)	468 (10.1)	1,825 (8.3)	584 (7.7)	495 (7.8)	269 (7.6)	315 (7.9)	2,778 (8.1)	8,991 (7.8)
2001년	2,429 (7.6)	515 (10.0)	1,972 (8.1)	632 (8.2)	534 (7.9)	291 (8.2)	340 (7.9)	3,002 (8.1)	9,715 (8.1)

註 : 괄호 안의 숫자는 전년말대비 증가율임.

〈표 4〉 자동차대중화 시기의 인구천명당 자동차보유대수

(단위 : %)

한 국			일 본		
연 도	전체자동차	승용차	연 도	전체자동차	승용차
80년	13.8	6.5	61년	20.8	7.0
83년	19.7	9.5	62년	28.7	9.3
85년	27.3	13.6	63년	39.1	12.8
86년	31.8	16.1	64년	51.3	17.2
87년	38.8	20.3	65년	64.1	22.2
88년	48.5	26.6	66년	80.0	28.6
89년	62.8	36.8	67년	100.1	38.3
90년	79.3	48.5	68년	123.2	51.4
91년	98.2	63.0	69년	147.5	67.6
92년	119.1	79.6	70년	169.5	80.6

자료 : 경제기획원, 「한국통계연감」, 1990. ; 日産자동차, 「자동차산업」, 1990.
일본총무청, 「일본통계연감」, 1990.

〈표 5〉 각 연구기관별 자동차보유대수 전망

(단위 : 천대)

기관 연도	교통개발 연구 원 (92. 11)	교통안전 진흥공단 (92. 11)	기아경제 연구 소 (92. 10)	국토개발 연구 원 (90. 8)	산 업 연구 원 (91.)	교 통 부 (92. 12)
93년	6,280	6,116	6,269	4,971	5,417	6,350
95년	7,260	8,032	8,670	6,411	7,043	8,630
97년	9,720	9,948	11,211	8,268	8,993	10,270
99년	11,580	12,148	13,400	10,662	11,483	11,880
2001년	13,800	14,550	-	13,155	14,676	13,800

(2.9%), 기타지역 462만대(33.5%) 등이다.

2001년 시·도별 승용차대수는 서울이 243만대(25%), 경기도 197만대(20.3%), 부산 63만대(6.5%), 대구 53만대(5.5%), 인천 52만대(5.3%), 대전 34만대(3.5%), 광주 29만대(3.0%), 기타 지역 300만대(30.9%)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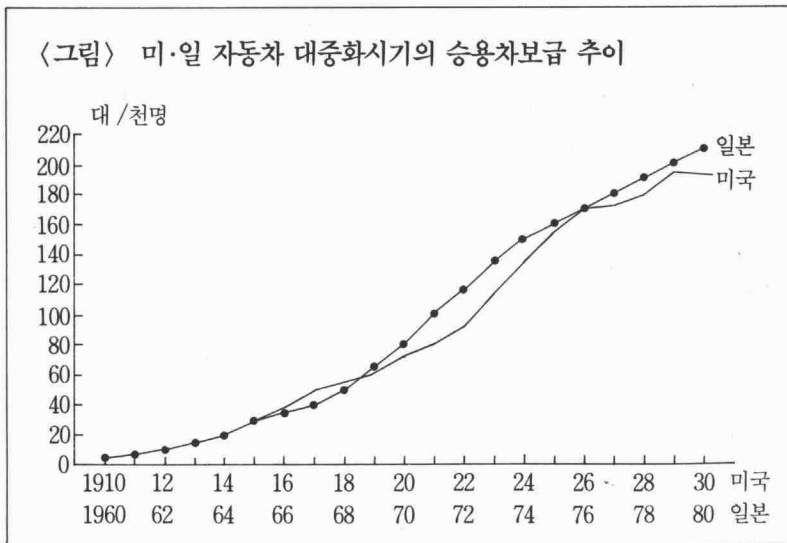
2001년 승용차 보유대수 5명당 1대

지난 87년 23.1%, 88년 26.3%로 급증하여 89년 30.7%를 고비로 91년 25.1%로 떨어지기 시작한 자동차보유증가율은 금년말에는 23.6%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93년 이후 그 증가추세가 계속 둔화되고 도시별 전철망이 확충되는 96년 이후부터는 9.4% 이하 수준으로 저하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전망에 의하면 92년말 현재 8.3명당 1대(승용차는 12.6명당 1대)인 것이 2001년에는 3.4명당 1대(승용차는 4.9명당 1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각종 연구기관의 자동차 보유대수 전망은 〈표 5〉와 같으며 앞으로 각급 행정기관에서는 이번 교통부의 전망치로 통일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림〉 미·일 자동차 대중화시기의 승용차보급 추이





경제정책해설

엔지니어링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

최근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원인으로서 국내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문제가 부각되면서 제조업 등이 자체의 경쟁력 제고 노력과 함께 이들 산업을 지원하는 엔지니어링산업의 지원기능 강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연구개발활동이 활성화되고 투자규모가 확대됨에 따른 투자의 효율성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상업화로 연결짓는 엔지니어링의 활성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관련하여 아직 구조적인 취약성을 띠고 있는 우리나라의 엔지니어링산업은 선진국의 시장개방 요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맞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경제민주화 진전에 따라 규제 위주로 되어 있는 엔지니어링산업 육성정책의 전환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엔지니어링 산업,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필요

엔지니어링활동은 인간의 편의추구를 위해 과학기술 지식을 종합화·최적화시키는 과학기술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엔지

니어링활동은 기존의 과학기술 지식과 연구개발 결과로 얻어진 새로운 과학기술 지식을 결합시켜 실용화·상업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 플랜트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사업 및 시설물의 완성을 위한 일련의 활동과 이들 활동 전체에 대한 사업관리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그림> 참조).

이와 같이 엔지니어링활동은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과학기술혁신,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수출입구조 고도화를 통한 국

제수지 개선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고부가가치 창조사회로 이행되고 있는 시대변혁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에서 실용화-상업화로 이어지는 과학기술 혁신시스템의 효율을 높이고, 제조업 등 하드웨어산업의 고부가가치산업화를 통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수출입구조를 건실화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링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핵심 엔지니어링기술,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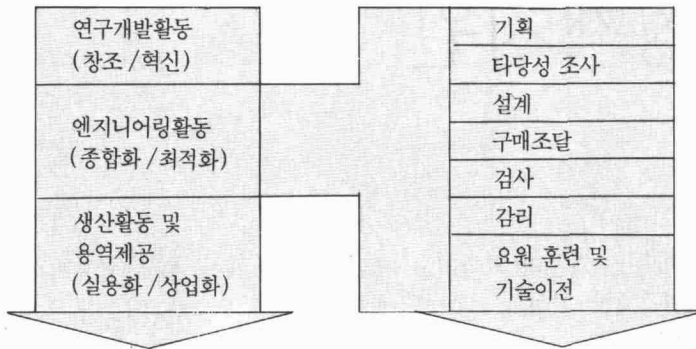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엔지니어링산업은 지난 60년대 산업기반이 거의 축적되지 못한 상태에서 대부분 외국기술에 의존하면서 주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태동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그후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우리의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이에 따른 엔지니어링의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 73년에 「기술용역육성법」



노홍길

과학기술처 기술용역과장

〈그림〉 엔지니어링 활동



을 제정하여 새로운 산업으로 등장하게 된 엔지니어링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뒷받침해 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이 점차 구축되어 왔으며, 양적인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이들 기업의 대부분이 규모의 영세성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기술용역 등록업체는 92년 현재 법제정 당시보다 11배 증가한 723개 업체로 산업설비 용역업체 16개, 종합건설기술 용역업체 24개, 전문기술 용역업체 525개, 그리고 개인기술 용역업 158개가 등록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에 종사하는 등록된 기술인력

은 1만2,500명에 이르고 있다. 국내 엔지니어링 수요에 대한 공급 구조는 등록된 기술용역업체가 공급하는 것과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것, 그리고 자체 수요를 자급하는 것으로 대별될 수 있는데, 이 중에 등록된 기술용역업체가 공급하는 규모는 91년에 약 1조3,793억원에 달하고 있다.

한편, 91년도에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기술용역은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해 승인된 기술용역 도입의 경우 총 233건에 3,424억원 상당액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통계처리가 불가능한 외자도입법과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술도입에 수반된 기술용역까지 포함할 경우 이 보다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표〉 기술용역업 등록업체 현황 및 성장추세 분석

(단위 : 개, 천명, 억원)

	73년	80년	92년	73년과 92년의 비교
등록업체수	63	194	723	11배 증가
기술인력수	0.5	3	12.5	25배 증가
총수주규모	20	1,250	13,793	689배 증가
국내수주	20	930	12,792	640배 증가
해외수주	—	320	1,001	80년에 비해 3배 증가

그리고 자체 엔지니어링 수요를 자급하는 경우는 국내 총 엔지니어링 수요의 약 46%에 해당(86년도에 한국기술용역협회가 분석)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내 엔지니어링 수요에 대한 가장 큰 공급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구조하에서 국내 엔지니어링 업체의 기술수준은 상세설계, 플랜트제작·설치 등 일반 기술은 거의 자립단계에 있으나,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조사·기본설계 등 핵심 엔지니어링 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져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엔지니어링기술의 수출입면에서는 해외수주에 비해 기술용역도입이 현저하게 많은 만성적인 기술용역무역 적자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엔지니어링 기술 자립과 관련산업 육성이 과제

우리나라는 고도기술이 요구되는 부품 및 완제품의 설계도면 대부분을 외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며, 기본설계 등 핵심기술은 선진국의 65% 수준 이하로 낙후되어 있다. 이는 부품과 산업생산설비의 수입증가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엔지니어링 기술의 자립과 관련산업의 육성은 우리가 맞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개방화·국제화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엔지니어링 기술개발지원과 엔지니어링산업의 대형

화·전문화·계열화를 유도하고, 한정된 국내 시장규모에 비추어 선진국과의 기술제휴 확대 등을 통한 해외진출 촉진도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엔지니어링산업에 대한 육성정책은 조세감면규제법 등 일부 세법에 의한 조세지원 이외에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업 등록제와 외국기술용역 도입승인제 등 수요측면에서의 유치산업 보호정책 위주로 시행되어 왔으며, 제조업 등 다른 산업에 비해 공급측면에서의 정책수단과 연계측면에서의 정책수단은 거의 활용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공급측면에서는 엔지니어링산업의 핵심인 현장경험이 풍부한 기술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엔지니어링 시장동향 등 엔지니어링산업에 직접 필요한 핵심기술정보를 수집·분석·가공하여 제공하는 기능을 보강하여야 할 것이다.

수요측면에서는 규제중심인 유치산업 보호정책은 더이상 지속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자율화를 통한 기술경쟁을 촉진하되 정부계약 정책면에서 수주산업의 특징을 연구검토하여 선기술 평가·후가격 협상방식으로서의 계약제도 등을 발전시켜 엔지니어링산업의 기술집약화를 촉진시켜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연계측면에서는 기능별 접근에 의한 엔지니어링 핵심기술 개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제조업 등 하드웨어산업에 비해 담보력이 취약한 엔지니어링산업의 원활한 자

정부에서는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최소화하고 시장경쟁원리에 바탕을 둔 엔지니어링 육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즉, 기술용역육성법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25일자로 법률 제4501호로 공포됨에 따라 현행 기술용역육성법이 사실상 폐지되고 금년 5월 26일부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금 지원을 위한 금융·보험상의 지원과 조세정책 측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엔지니어링산업 육성정책 전환 필요성 커

기술용역육성법이 처음 제정된 73년 당시에 우리나라의 기술용역 시장은 겨우 20억원에 불과한 매우 영세한 규모였다. 이러한 영세한 기술용역시장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다수의 영세업자가 수주경쟁을 벌일 경우, 수주질서가 크게 흔들릴 뿐만 아니라 기술용역산업의 진전한 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成果品の 질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다.

즉, 기술인력·자본금·일정규모의 사무실 등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만을 정부가 등록받고 등록한 업체에 한하여 기술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기술용역업 ‘등록제’를 비롯해서, 국내 기술용역업체가 수행할 능력이 있는 외국기술용역 도입을 억제하고 국내업체의 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외국기술용역을 도입할 경우에도 국내기술용역업체가 주계약자가 되며, 적절한 방

법과 대가로 외국기술용역이 도입되도록 하기 위한 외국기술용역도입 ‘승인제’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국내기술용역산업 기반도 크게 확충되는 등 同法 제정당시에 비해 경제·사회적 여건이 현저히 달라진 현실점에서 현행제도로써는 엔지니어링산업 육성과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가 곤란하여졌다.

기술용역 등록제의 경우, 시장진입을 규제함으로써 경쟁제한적인 기업환경 조성으로 경쟁의식의 결여 및 통상마찰의 원인이 되고, 기술사 등 기술인력의 수급불균형 등으로 기술용역업 등록시마다 등록하려는 업체간의 과당 스카웃 문제와 기술인력 이동심화에 따른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투자환경의 상실로 기술축적이 안될 뿐 아니라, 기등록된 업체의 등록요건 미달에 대한 법 집행의 한계로 인해 무질서가 야기되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엔지니어링 시장에 등록된 기술용역업체만으로 그 수요를 완전공급하지 못함(등록업체의 국내시장 공급능력 약 25%)으로써 무등록업체에 대



한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고, 무등록업체에 대한 영업활동 금지 문제는 국가적인 잠재역량을 제한하는 면에서도 문제가 되었다.

외국기술용역도입 승인제의 경우, 그 기본취지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기술용역업체의 능력과 기술수준이 선진국과는 큰 차이를 갖고 있고 특히 기본설계 등 핵심기술은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때문에 사실상의 시장개방 상태나 다름 없으며 이러한 현상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외국기술용역도입 승인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그 정책의 실효성이 희박하다. 더욱이 실무적으로 도입기술에 대한 기술검토와 실질적인 조정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고 국내적으로 제 때에 해외기술용역의 도입이 지연될 경우 전체 프로젝트 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수도 있다. 대외적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진전에 따른 시장개방 압력은 통상마찰의 원인이 되어 우리의 수출상품의 교역에도 악영향을 가져다 줄 우려도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최소화하고 시장경쟁원리에 바탕을 둔 엔지니어링 육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즉, 기술용역육성법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25일자로 법률 제4501호로 공포됨에 따라 현행 기술용역육성법이 사실상 폐지되고 금년 5월 26일부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개방화 · 국제화 · 자유화 추세에 부응한 法改正

엔지니어링산업의 개방화 · 국제화 · 자유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종래

의 기술용역업체 육성을 대상으로 한 기술용역육성법이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기술집약화 촉진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으로의 전면 개정은 산업법에서 기능법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同法の 명칭을 비롯해서 육성 · 지원대상 · 정책방향 등에서 그 성격을 달리하는바, 그 주요 변경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기업환경 조성

기술용역업 등록제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제로 전환하여 종전의 정부에 등록된 업체만이 기술용역업을 수행할 수 있던 것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자유화하였다. 종전의 기술용역은 타인의 위탁에 의한 용역만을 의미하였으나, 특정기업이 자체 프로젝트를 자급하기 위한 엔지니어링 활동까지 포함시켰고, 따라서 그 지원대상도 엔지니어링 전담부서를 비롯하여 모든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확대하였다.

공정한 기술경쟁의 촉진과 국제경쟁력 강화

정부 ·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수행 능력을 사전에 심사하도록 하였다.

최신 선진기술의 이전 ·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의 엔지니어링 기술도입을 종전의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한편, 엔지니어링 기술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 기술 수출계획을 신고

한 자에 대한 지원규정을 신설하였다.

엔지니어링산업 기술집약화 촉진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는 핵심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보급 등 지원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한국기술용역협회를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로 그 명칭을 변경, 그 기능을 활성화시켰다. 엔지니어링업체 간에 필요한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의 업무를 담당할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설립근거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엔지니어링기술 진흥연구진 구성에 필요한 지원시책의 강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주계약자제도 및 기술용역 수주한도제를 폐지하였다.

연구개발활동과 대등한 수준의 조세·금융 지원방안 강구 필요

기술용역업 등록제의 신고제 전환은 종전의 등록요건인 기술사 확보 의무조치의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어, 기술사들은 고용기회 박탈을 우려하여, 일부 전문기술용역업체들은 업체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과 성과품의 품질저하 등을 이유로 기술용역업 등록제 고수를 주장하면서 기술용역육성법 개정추진을 반대한 바 있다.

그러나 엔지니어링산업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법 개정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고 엔지니어링활동의 핵심주체인 기술사의 효율적 활동문제도 중요하게 인식되어 기술용

연구개발에서 실용화—상업화로 이어지는 과학기술 혁신시스템의 효율을 높이고, 제조업 등 하드웨어산업의 고부가가치산업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수출입구조를 건실화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링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역법 개정과 함께 기술사법 제정도 병행 추진하게 되었다.

엔지니어링진흥법은 엔지니어링회사 및 전담부서의 기술집약화 촉진에 목적을 두고 기업단위의 엔지니어링활동을 육성 대상으로 하며, 기술사법은 기술사의 직무수행 관리, 활동장려를 목적으로 하고 기술사 개인의 활동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기능면에서 다르나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란 점에서 동일하고 같은 차원에서 육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양법률이 상호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 집행과정에서 중복을 피해서 관계를 정립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신고제로 전환할 경우 시행 초기에 여러 업체들이 수주경쟁을 벌이는 등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지난해 5월 예산회계법 시행령(제189조)을 개정하여 기술용역계약에 대하여 기술과 가격을 각각 분리 입찰할 수 있는 규정을 이미 마련함으로써 능력을 갖춘 업체가 우선적으로 기술용역업무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외국기술용역도입 승인제가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단

기적으로는 해외기술용역 도입이 다소 증가하고 이로 인해 국내기술용역업체의 수주여건이 불리해지는 등 문제점이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국내업체로 하여금 경쟁의식을 자극하여 자생적 기술개발력을 키울 수 있고 또한 해외선진기술의 이전·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엔지니어링산업은 기능적 측면에서는 과학기술정책의 틀 속에서의 연구개발정책과, 산업적 측면에서는 제조업·건설업 등 타 산업정책과 연계하여 상호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육성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과 기술사법에서 규정한 제도만으로는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엔지니어링 활동에 대한 조세·금융지원을 연구개발 활동과 대등한 수준으로 제고시키고, 정부계약제도와 세제·금융제도상 엔지니어링활동을 저해하는 규정 등을 개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국립



경제정책연구소

93년에 달라지는 노동행정

올해 달라지는 노동행정은 최저임금 인상, 사업내 직업훈련 활성화 유도, 유휴인력 활용 촉진 및 효율화, 그리고 산재보험요율 조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달라진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최저임금의 인상 조정

93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시간급이 1,005원, 8시간 기준 日給 8,040원으로 92년의 시간급 925원, 日給 7,400원에 비해 8.6%가 인상되었으며, 업종별 구분없이 10인 이상 全産業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올해의 최저임금액을 月額으로 환산하면 22만7,130원이며, 92년 12월말 기준으로 22만8천명의 저임근로자가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내 직업훈련의 활성화

독일·프랑스·일본 등 선진국 기업들은 기능인력 양성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여 기업에 필요한 우수한 기능인력을 자체 양성함으로써 제품의 질과 국제경쟁력을 제고해 왔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80년

대에 들어 기업의 부담경감 등을 이유로 훈련비율이 하향 조정되면서 사업내 직업훈련이 크게 위축되었다. 이는 90년 이후 생산현장의 숙련인력 부족현상을 초래하였고, 결과적으로 제품의 불량률을 높임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사업내 직업훈련비율 상향 조정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도 따지고 보면 국제경쟁력 약화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의 인력양성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해 사업내 직업훈

련을 장려하기 위하여 93년도의 사업내 직업훈련비율을 全産業 평균 0.673%로 고시하였다. 이는 92년도의 0.619%보다 8.7%가 증가된 수준이다.

이를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은 평균 0.646%로 전년 대비 3.8% 상향조정하였고, 그 중 산업합리화 업종인 신발·제조업 등 6개 업종은 최고 40.3%까지 하향조정하였으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과 운수·창고·통신업은 각각 29~30%가 상향조정되었다.

이와 함께 건설업의 직업훈련의 무대상을 전년도 공사실적액 기준으로 92년도의 46억8천만원 이상에서 50억6,500만원 이상으로 축소하였고,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분류하여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였다.

직업훈련 비용기준 현실화

산업사회의 기술변화에 따라 재직근로자에 대한 향상훈련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직근로자 향상 훈련비용의 사용범위를 92년도의 40%에서 93년도에는 55%로 확대하였으며,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轉職訓練을 촉진하기 위하여 3개월 이상 전직훈련시에는



이우룡

노동부 기획예산담당관실 사무관

통상임금 수준의 전직훈련 수당지급제도를 신설하였다.

또한 표준훈련비가 實訓練費에 미달하여 훈련을 하면 손해본다는 의식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훈련과 정별 실훈련비용 인정액을 평균 26.6% 인상하였다.

이와 함께 기업과 훈련기관과의 연계 및 산학협동훈련 촉진을 위하여, 기업이 직업훈련의무비용의 20% 범위내에서 공공훈련원이나 사업주 공동훈련원에 훈련비용이나 당해 기업이 생산한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으며, 사업내 직업훈련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5년 이상 중단된 직업훈련의 재개를 위하여 전면 改·補修가 필요한 경우, 시설 및 장비 등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도 훈련비용으로 인정해 주기로 하였다.

사업내 직업훈련 우선 실시대상 사업주 지정

정부는 산업인력의 수급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내 직업훈련을 반드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업내 직업훈련 우선 실시업종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중이다.

92년도에는 처음으로 '전년도 공사 실적액이 936억6천만원 이상인 건설업'을 지정하여 사업내 직업훈

올해 달라지는 노동행정은 최저임금 인상,
사업내 직업훈련 활성화 유도,
유휴인력 활용 촉진 및 효율화,
그리고 산재보험요율 조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련을 우선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훈련 미실시 업체에 대해서는 분담금의 30%를 추가 징수한 바 있다.

올해에도 그 대상을 건설업으로 하고 다만 지정기준을 전년도 공사 실적액 1,012억9,6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그간의 건설경기 진정추세 등을 감안하여 분담금 추가징수율을 10%로 낮추어 조정하였다.

저소득층 및 농어민 대상 직업훈련 통합

올해부터는 각 부처가 분산하여 실시하던 저소득층 및 농어민 대상의 직업훈련을 통합하여 실시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노동부·내무부·보건사회부 등 7개 부처에서 실업자·생활부조자·의료부조자·농민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왔다. 그러다보니 대상자가 중

복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훈련지원금에 있어서도 가장 우대되어야 할 생활보호대상자가 가장 적게 지원받는 등 훈련비지급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였다. 더욱이 훈련대상자의 희망과 훈련기관의 수용능력에 의해 직업훈련을 실시함에 따라 국가 전체적인 인력수급 조절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가 인력수급 사정에 맞춰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모든 훈련을 통합하고, 노동부의 계획과 통제하에 농어민훈련은 농업진흥공사가, 기타 훈련은 시·도에서 집행하도록 훈련체제를 일원화하였다.

이와 함께 여러가지 문제점도 개선하였다. 종전에는 우리 산업사회의 수요와 관계없이 전체훈련의 40~60% 이상이 사무·서비스직종에 집중되었던 문제점을 개선하여 훈련대상에 따라 훈련과정을 정규과정과 단기적응과정으로 구분하고 훈련직종도 조정하였다.

정규훈련은 생활보호대상자·영세농어민·실업자·無職 및 비진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기본법에 따라 3개월~1년간 훈련을 실시하되, 전자·기계 등 제조관련 직종, 배관·중기운전 등 건

〈표〉 산업별 훈련비율

(단위 : %)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업	건설업	운수·창고 통신업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평 균
92년	0.090	0.622	0.379	0.908	0.212	0.888	0.619
93년	0.095	0.646	0.490	0.974	0.275	1.154	0.673
(증가율)	(5.5)	(3.8)	(29.2)	(7.3)	(30.0)	(29.9)	(8.7)

설관련 직종, 열관리·정보처리 직종 중심으로 하고, 단기적응훈련은 주부·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1개월 이하의 훈련을 실시하되 간병인·건물관리원 등의 직종을 중심으로 추진하게 된다.

또한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훈련비도 종전에는 적게는 월 4만5천원에서 많게는 월 11만원까지 부처별로 다양하였으나 평균 10~32%를 인상하여 6만6천원 이상으로 조정하였고, 훈련수당도 생활보호대상자를 가장 우대하고 실직자·농어민에 대한 지원액을 인상하였다.

장애인과 고령자의 고용촉진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91년부터 시행해온 장애인 고용의무제가 올해부터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먼저 기준고용률이 92년도의 1.6%에서 2%로 상향조정되고, 고용부담금도 전년도의 1인당 월 13만원에서 월 13만8천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의무고용업체가 기준고용률을 초과해서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지급하는 지원금을 92년의 1인당 월 6만5천원에서 6만9천원으로 인상하였다. 또한 의무고용업체는 아니지만 장애인을 다수 고용했을 때 지급하는 장려금도 전년도의 3만2천원에서 3만4천원으로 인상·조정하고, 장려금 지급기준도 강화하여 92년에는 장애인 6명 이상을 고용하고 장애인 고용률이 3% 이상이 되어야 했으나 93년에는 장애인고용 7인 이상, 고용률 4%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유휴인력을 산업인력화

93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5원, 8시간 기준 日給 8,040원으로

92년에 비해 8.6%가 인상되었으며,

업종별 구분없이 10인 이상 全産業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올해의 최저임금액을 月額으로

환산하면 22만7,130원이다.

하기 위한 시책의 하나로 92년부터 시행중인 고령자 고용촉진제도도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이의 일환으로 비영리법인과 공익단체 중에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20개소를 골라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하고 운영비로 월 5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산재보험요율 및 최저보상액 조정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사고를 당한 기업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産災保險은 매년 고시하는 보험요율에 기초하여 산출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험요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로 과거 3년간의 재해율(보험급여/임금총액)을 기초로 하고, 연금 등 보험급여에 필요한 금액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금년도 全産業 평균요율은 1천분의 22.1로서 92년 1천분의 19.4에 비해 다소 인상되었다. 이는 최근에 重大災害 및 고임금 재해자 증가, 연금수급자 등 장기급여가 증가한 데다 진료수가 인상 등이 예상됨에 따라 보험금 예산이 증액된 데 기인한 것이다.

사업종류별 요율변동상황을 보

면 별목업 등 6개 업종은 인하되었고, 輕印刷業 등 5개 업종은 92년도와 같은 수준이나 56개 업종은 인상되었다. 그리고 적용대상업종도 92년 67개 업종에서 7개 업종을 추가하여 74개 업종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재해근로자의 임금이 너무 낮아 보험급여 산정에 있어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에 부적당한 경우 적용하는 최저보상기준액을 1만5,127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이것은 92년도의 1만3,930원에 비해 8.6% 인상한 것으로서 장해급여·유족급여·상병 보상연금 및 장의비에 적용되는 데, 약 1천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리



‘百年大計’를 생각해야 한다

이도선

연합통신 기자/ 건설부

최 근 들어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진전에 따른 농산물의 수입 개방과 관련하여 ‘身土不二’라는 말을 부쩍 자주 듣게 된다. 우리 몸과 마찬가지로 국토도 하나뿐이니 만치 충분한 자생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이리라.

그 하나밖에 없는 국토에 관한 행정을 총괄하는 건설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고, 더욱이 건설산업은 어

느 나라나 경기부양책 또는 억제책의 최우선적인 대상으로 삼고 있을 것을 고려할 때 건설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건설행정은 너무 편의주의적이고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우려를 떨칠 수가 없다.

지난해 여름에는 하루 간격으로 남해의 창선대교와 새해주대교가 붕괴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하더니 이번에는 淸州 牛岩아파트 붕괴사고로 경악과 함께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최근 수년간 국민들의 가슴을 섬짓하게 하는 대형 건설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대부분이 건설업계의 엉터리 시공관행과 당국의 형식적인 감독에서 비롯된 ‘人災’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교량은 대개 설계수명이 30년 이상이고 선진국에서는 50년, 백년이 지나도 끄떡없는 다리가 수도룩한데도 우리나라에서는 10여년 만에 바다속으로 가라앉거나 완공을 5개월 앞두고 한강 속으로 무너져 내린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주택건설 역시 즉흥 내지는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손꼽히고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지난 78년 제정된 후 91년까지 무려 20차례나 개정돼 실무자조차 관계 조문을 일일이 들여다보지 않고는 어떠한 내용인지 알 수 없는 ‘누더기’가 되어 버렸다. 지금도 손을 보아야 하는 부분이 몇가지 있지만 너무 자주 고친다는 말이 나올까 두려워 뒤로 미루고 있다는 데에는

어안이 병병해지는 느낌이다.

커다란 물의를 빚었던 ‘건영사건’도 결국은 건설업체들이 분양가 규제를 피해 주택조합에 치중하는 것을 막는 데에만 급급한 나머지 관련 지침을 이리 뜯고 저리 붙이는 식의 임시미봉책으로 일관하다 빚어진 것으로 요약되고 있고, 6공이 대표적인 치적으로 내세우는 2백만호 정책이 시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부작용을 빚은 것도 앞만 보고 내닫는 오래된 타성의 탓으로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수도권문제는 건설부가 올해의 역점 과제 가운데 첫번째로 꼽을 만큼 갈수록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지만 최근 30층을 넘는 초대형 건물들이 무더기로 승인돼 정권말기의 특혜라는 비난까지 불려일으켰음은 물론, 인구집중유발 시설억제를 골간으로 하는 수도권정책을 뿌리채 뒤흔들고 있는 형편이다.

이처럼 중요하기 그지없는 건설행정이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거나 근시안적인 短見으로 점철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건설부 관리들도 ‘노가다’라고 자조하기에 앞서 國家 百年之大計를 떠맡고 있다는 자궁이 매우 아쉬운 시점이다.

건설부 출입 6개월 경력밖에 안되면서 좋지 않은 점만 무책임하게 꼬집었다는 자책감도 없지는 않으나 ‘다 알면 어떻게 쓰나’라는 기자 사회의 金言(?)에 전적으로 의존했음을 고백하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건설행정이 앞만 보지 말고 뒤와 옆은 물론 위 아래도 함께 살펴보는 여유있는 안목에서 집행되기를 바랄 뿐이다. **한민중**



분유광고의 의미는?

이강봉

서울경제신문 기자/ 보건사회부

최 근 신문지상에는 국내 주요 분유업체들의 논조있는 대형 광고가 수시로 게재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12월초 保社部로부터 “항생제가 소량 함유된 원유를 사용, 분유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12월초 일부 제품의 생산금지조치를 당한 한 분유회사는, 원유 속에 들어있는 항생제검출 시험방법에 문제가 있다면서 自社製品的 무해성을 극력 주

장하고 있다.

한편 수입신고 안된 탄산칼슘과 염화칼륨을 사용, 분유를 제조판매함으로써 물의를 빚었던 한 유명 분유회사는 自社の 이 같은 행동이 좋은 원료를 사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연일 해명 아닌 반박광고를 게재하고 있다.

食品衛生法에 따르면, 이들 분유 업체들이 규정을 어긴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성급한 조치로 업계측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소비자들을 불안하게 했다는 데 대해서는 보사부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어 보인다.

보사부의 조치에 대한 기사가 나간 후 신문사 편집국은 물론 각 소비자단체 고발창구에는 지금 자신의 아기가 먹고 있는 분유가 정말 해로운가 하는 문의성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실사 전화를 앓더라도 관련기사나 광고가 게재되면서 혹시 자신의 아기에겐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불안해 할 부모의 마음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기업측 광고를 일단 안 믿고 보는 성향이 매우 강하다. 그동안 소비자들이 일부 기업들의 횡포로 인해 너무 속아 살아왔기 때문이다.

식품은 물론 화장품·가전제품·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실량을 줄인다든지, 겉모양만 바꾸어 신제품이라고 내놓고 실제로는 내용물이 비슷한 상태에서 가격만 올리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가격조작은 누구나 알고 있는 평범한 사실이다.

일부 기업에서는 제품의 원가를

줄이기 위해 외국에서 형편없는 원료를 수입, 식품을 만듦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분유는 다른 식품의 가격 조작, 有·無害 논쟁과는 또다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가능한 한 아기들이 母乳보다 분유를 먹어야 건강하다는 식의 분유 제조 회사의 주장이다.

아기에게 가장 좋은 식품은 모유이지 소젖(우유)일 수 없다는 내용의 의학논문이 세계각국에서 쏟아지고 있다.

이 논문들은 한결같이 소젖이 소처럼 인간의 골격을 쉽게 자라게 하지만, 가장 중요한 뇌기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모유가 인간에게 가장 적절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박할 여지가 없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분유업체의 기사성 광고경쟁은 한마디로 너무도가 지나친 듯하다.

해명이거나 반박이거나 그 자체를 떠나서 그 내용이 은근히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분유먹이기를 조장하는 분위기로 물고가는 느낌이다.

연약한 아기들이 먹는 분유의 유·무해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는 사실 자체가 분유업체로서는 책임져야 할 일이다.

그것을 해명하는 것은 좋지만 이를 영업신장의 계기로 삼는다면, 그것은 어린아이를 이용한 사기성광고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新韓國’ 건설은 과학기술의 토대 위에서

주태형

세계일보 기자/ 과학기술처

‘新韓國 건설’

金泳三 대통령당선자가 지난大選에서 내건 슬로건이다.

선거공약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모토는 文民정치시대를 맞는 국민들의 정서를 새로운 국가건설이라는 대명제로 포용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선거구호로 평가받았다.

듣는 이에 따라서 가슴을 설레게 까지 하는 新韓國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

경제분야는 물론 정치·사회·문화 등 우리 사회 각 부문의 균등한 발전으로 선진국권에 진입하겠다는 의지를 신한국 건설로 보려는 것이 일반국민들의 보편적인 시각인 것 같다.

자칫 장미빛 선거공약으로 그칠 수도 있는 이 슬로건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이유는 ‘한번 더 도약하자’는 국민적 의지와 각오가 서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분야로 시야를 국한할 때 우리나라가 직면한 국내외 장벽은 의외로 크고 심각하다.

탈냉전시대의 국제사회는 경제력이 군사력에 앞서며, 경제력의 뿌리가 되는 것이 科學技術力이다.

새로운 국제질서의 軸으로 등장한 기술패권주의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적으로는 현재 과학기술수준이 가전제품·PC·반도체·자동차·철강재산업의 경우 선진국의 80% 수준이지만, 핵심기술의 자립도는 그보다 뒤떨어져 있어 이 상태로 나아가면 기존 선진국과의 격차는 훨씬 벌어질 전망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빈약해 에너지자원의 경우 매년 91%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

숙련된 인력과 고유의 기술력으로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으며 오는 21세기에는 대망의 선진국권으로 진입하게 된다.

국내 과학기술력을 국가차원에서 육성·발전시켜야 된다는 당위성과 절대대명제에 직면해 정부가 내놓

은 것이 바로 G7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의 요체는 앞으로 10년간 전략기술분야를 엄선해 집중적으로 투자개발함으로써 우리만의 독창적인 기술우위를 확보, 우리의 특수기술 없이는 선진국의 관련기술과 산업이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없는 다시 말해 ‘좀더 큰’ 스위스가 되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 한반도의 국제정세가 美·日·中·러시아 등 4大 강국의 국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과학기술발전에 의한 경제성장은 국가존립을 좌우하는 절대절명의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G7 프로젝트가 어느 한 시대의 구호나 정책전리품으로 규정되거나 평가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이 프로젝트가 달성되는 10년후에는 또 다른 획기적인 과학기술 진흥정책이 일관성있게 수립·추진돼야 한다. 3共시절 이른바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나 새마을사업 등이 국가차원에서 추진됐던 사실을 상기할 때 G7 프로젝트에 부여된 의미는 실제로 과거의 국가계획에 비해 훨씬 중요한 반면,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 형성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金泳三 차기대통령의 새로운 구상인 신한국 건설계획에 G7 프로젝트가 보다 비중있게 포함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필자가 독일에 온 지 2년이 다 되어간다. 이제 그 까다롭던 독일에 정착이 되어 지난 날을 돌아보니 신참자의 고생과 아픈 마음이 많았다. 그것은 주로 異質文化에 대한 충격이었고, 사전에 준비가 부족한 때문이었다. 미국에서 공부한 적이 있어 독일생활도 비슷하겠거니 생각하고 온 것이 잘못이었다. 처음 6개월은 정말이지 비참했다. 아이들 학교에 입학시키는 일, TV 한 대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동차보험 드는 일까지 심지어 은행에 맡겨둔 내돈 찾는 일 등등 단번에 되는 법이 없어 꼭 두 세번씩 굳어져 속스러워 하는 입술을 강제로역시켜야 했다.

독일인의 時間의식

허 선 경제기획원 서기관/ 베를린경제연구소 초청연구원

편견과 인식

베를린의 경제연구소(DIW)에서 일해야 하는 나에게는 배운이들이 모인 사무실에서도 쉽게 되는 일이 없었다. 그들은 동양에서 온 객원 연구원을 빌어 먹으러 온 베트남 사람 취급하듯 했고 나는 그들의 무뚝뚝한 표정을 볼 때마다 히틀러의 후손이니 어쩔 수 없구나 하고 생각했다.

신문에 나오는 외국인혐오증 등의 어두운 기사를 읽고 서울에서 오는 안부전화를 아무렇지도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달래면서도 사무실에서, 슈퍼마켓에서, 버스칸에서 느끼는 독일인들의 시선은 어쩐지 달갑지 않게만 느껴졌다. 국가대표 선수로 뛴 적이 있는 친척이 준 'Korea'

와 태극마크가 선명한 운동복을 입고 아침 저녁으로 공원을 뛰는 나를 그들은 겁도 없는 외국인으로 보는 것만 같았으나 그럴수록 오기로 더 입고 다녔다.

문화충격이라 해도 이렇게 스트레스 쌓이고 증오감만 늘어나는 일은 처음이라 당초 생각과는 달리 독일인들을 배우고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도 처음에는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나름대로 그들을 이해하게 되었다. 예외에 어긋난 행동에 대해서는 점잖게 나무라기도 하고, 뒷사람에게는 항의하기도 해서 그러저럭 스트레스를 풀었고 시간이 지나자 상호이해의 폭이 넓어져 친구도 생기고 농담도 조금 하게 되었다.

문화와 가치가 다른 어떤 인간집단의 언어와 행태가 우리와 부딪칠 때 불쾌감이 묻어나는 것은 그들의 민족성이나 人性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독일의 경우 독일민족성은 독일정신으로 표상되는 민족적 자부심 내지 민족적 도취감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나올 것 같다.

독일인들의 전형적 특성, 그래서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성격으로서는 좋은 쪽으로는 독일의 이상주의자들이 내세운 '독일의 참된 美德(wahre deutsche Tugenden)'이 있는데, 그것은 고대 게르만시대로부터 물려받은 충성심, 맡은 바 임무에 대한 엄격함, 삶에 대한 진지한 자세, 솔직하고 강직하다는 뜻으로의 진실성·정직함·용기 등이다. 패전후 독일인들은 다소 소심해져서 부지런함과 부단한 노력, 질서의식과 신뢰성을 스스로 자기들의 좋은 품성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다. 외국인들도 독일인에 대해 독일인들이 스스로 그렇다고 여기고 있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다. 즉 부지런함·용감성·정직함·실제성 등이 독일인들의 전형으로 지적된다.

최근 유럽인 6천명을 대상으로 한 유럽의 각 민족성 전형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독일인들의 전형적 특성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것, 일을 성공적으로 끝내고자 하는 성향을 들었고, 그다음 특성으로는 공격적인 것과 오만함, 또 가장 유머가 없고, 남을 친절히 도와 주지 않는 성품 등이 지적되었다. 또 흔히 외국인들끼리 있을 때

나오는 말로 독일인들은 공격적이고 자기주장이 세고 뻣뻣하며, 접근하기 어렵고, 유머가 없고 무뚝뚝한 반면에 능률적이고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들로 묘사되기도 한다. 그러나 능률적이라든지 시간을 잘 지킨다는 긍정적인 평가에도 너무 능률지향적이고 시간에 융통성이 없어 답답하고 지겹다는 속뜻이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인들의 시간의식

그러나 우리가 독일인들을 보다 편견 없이 인식하고자 한다면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편견 없이 그들을 인식하는 것이 외국생활을 해야 하는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다. 그들을 이해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그들의 반응과 행태를 예측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정확한 인식을 갖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화적·민족적 자존심을 굴절시키지 않은 채 그들과 매우 성공적인 삶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독일연방국은 미합중국처럼 異民族·異文化의 집합체도 아니고, 구소연방처럼 정치이데올로기로 강제로 통합된 정치집단도 아니다. 그러면서도 독일이 동일집단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모든 도시와 지역이 자기의 독립성과 고유성을 주장하고 자랑하는 면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北部獨逸과 南部獨逸간에 말·기질·입맛과 감정 등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독일인적인 그 무엇이 분명히 있긴 있다. 그것을 여러가지의 형용사로 서술하려고 해 봤자 우리의 이해를 넓히기보다는 결국 편견만 깊게 만들 우려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많은 형용사로 서술될 수 있는 그 어떤 내면의 태도나 가치, 그리고 그것의 표현인 언행의 근원을 이루는 것을 찾아내 독일인들의 여러가지 특성을 통째로 이해하는 편이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한다.

독일사람이나 한국사람이나 근본적으로 人間(Homo-sapiens)이라는 점에서 사람 이외의 다른 동물과 구별된다. 때문에 독일인의 특성은 우리와 인간으로서 다른 것이 아니고, 그들이 태어

나고 자라오는 과정에서 배우고 터득하고 몸에 길들여진 것이 우리와 다르다는 사실을 먼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사는 全環境, 즉 자연·기후·종교·문화가 우리의 성장과정에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그리고 그것을 의식하든 그렇지 않은 간에 사람의 몸속에 의도적으로 박아 넣는 교육이 근본적 원인임을 알게 된다. 우리는 이 환경과 그 환경이 우리 속에 배어들어 오는 과정인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의 규범이나 질서를 통한 洗腦, 즉 내부인자화하는 과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말하는 것을 배우고, 친구사귀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각 민족은 그들 내부에서 보다 능률적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감정이입과 의사전달이 가능한 것이고 그 패턴에 익숙해지게 된다. 이미 터득된 것과 다른 것 즉, 익숙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먼저 거부반응을 일으킨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한국인의 특성을 공유하게 되고 독일인들도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민 2세대들이 느끼는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의 이중적 규범이나 가치의 내면화 과정에서 오는 혼란과 갈등을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보다 깊이 이해해야 한다.

독일사회의 많은 규범 중에서 인간의 행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것을 찾다면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가르침을 우선 들 수 있다. 우선 시간을 이용하고 지키는 방법에 있어서 독일인들은 우리와 크게 다른 것 같다. 독일인들은 전반적으로 매우 시간중심적인 사람들, 즉 시간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스케줄을 짜서 시간을 나누고 토막내어, 그 토막진 시간에 사전에 계획된 일을 순서대로 해 나가도록 교육받는다. 따라서 그들은 자기 시간표대로 일하고 그 사이에 누가 끼어드는 것을 참으로 싫어하고 견딜 수 없어 한다. 그들은 자기시간을 정확히 지키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시간표와 연결되는 고리인 약속시간도 정확히 지킨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사무실에서 아무리 자주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전약속을 하지 않으면 곧



란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필자는 이 점에서 매우 많은 고통을 당했다. 바로 옆방에 있는 친구와 어떤 사안에 대해 토론하고 싶을 때, 꼭 한 주일후로 시간을 잡는 그를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이 자기시간을 아끼는 것만큼 자기 시간을 존중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옳을 것이다. 그래서 약속시간에 정확히 대는 것을 그들은 어느 다른 민족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하고 그렇지 못한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모양이다.

서양인들이 하는 것처럼 시간을 쪼개고 나누어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기 삶을 조직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의 시간의식을 單視的 사고(mono chronic)라고 한다면, 한국사람들은 複視的 시간관(poly chronic)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만이 아니고 다른 아시아국가·지중해·중동사람들도 이 범주에 속한다. 복시적 시간관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은 흘러가는 한 줄기의 존재라기보다는 소용돌이치고 융솟음치다가 급속히 하락하는 계곡물과 같은 것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다.

시간을 단선개념으로 파악하기보다는 복선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동시에 두서너가지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즉흥적으로 일을 하기도 하며, 밤을 새워 후

다닥 해치우기도 한다. 사전에 계획을 세워 시간을 사용한다기보다는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진하게도 쓰고 연하게도 쓰고, 집중적으로 쓰기도 하고 한가하게 쓰기도 한다. 때문에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시간사용의 규칙성과 시간엄수에 있다기보다는 시간을 상황에 맞게 유연성 있게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껴진다. 우리는 한가한 시간을 즐긴다는 느낌은 있으나 시간을 낭비한다거나 하는 인식은 크지 않다. 그러나 독일인들은 자기 시간표에 벗어나는 것은 곧 바로 낭비라고 판단한다. 미국과 서유럽 사람들이 거의 전부 독일인들과 같은 時間觀을 갖고 있지만, 그 정도에 있어서 독일인들이 가장 심하다고 판단된다. 낮 12시에 약속이 있다고 할 때 우리에게 12시 30분까지, 영국인들에게는 12시 10분이나 20분까지는 범위가 정해지나 독일인들에게는 12시 정각을 의미한다.

독일인들의 이런 시간관념 때문에 우리에게 12시 낮설고 어색한 시간제 노동이나 요일별로 상이한 가게영업시간제, 그리고 시간당 임금제도 같은 것이 유용하게 기능하고 사회경제 총체적으로 최대의 작업능률을 보장하는 유용한 장치가 되고 있는 것이다. 즉, 독일인들의 이러한 시간의식은 수많은 토막시간을 낭비 없이 효율적

으로 연결하고 축적하는 나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이한 시간관을 가진 이질적인 집단이 함께 섞여 생활한다는 것은 兩者에게 모두 고통과 짜증, 좌절과 절망까지 일으키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생활방식이 옳은 방식이고 그에 어긋나는 것은 나쁜 방식이며 정해진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질적 집단에 대한 나쁜 인상을 가지게 된다. 이런 부정적 인상은 누적되어 편견을 낳게 하고 그것이 집단화하면 폭발하는 성향을 가진다.

우리가 이런 사정을 알고 있다면 보다 적은 비용으로 그들과의 문제를 보다 속히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空間意識

우리가 외국인을 이해하기 위한 또 하나 중요한 인식요소로는 그들의 공간관념을 들 수 있다. 시간관이 개인의 행태를 이해하는 실마리를 준다면, 이 공간관은 국민적 행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독일사람들은 특히 북쪽사람들일수록 공간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하다. 그들은 물리적 공간뿐 아니라 심리적 공간도 중시한다. 그것의 면적이 얼마가 되든 간에 배타적 공간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프라이버시의 강한 욕구에 연결된다. 그들은 공간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비좁고 혼란스런 것을 싫어한다. 그들은 감시받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한다. 따라서 그들은 자기공간을 확보하고 그 공간을 잘 지키려 문을 꼭 걸어 잠근다. 내 옆방의 한 동료는 화장실 갈 때도 문을 열쇠로 잠그고 다닌다. 그들은 시간을 쪼개서 쓰듯이 공간도 쪼개서 칸막이를 해서 쓴다. 우선 그들은 가정과 직장 사이에 칸막이가 되어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직장동료를 집으로 초대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로 특별한 호의로 해석해야 할 것 같다. 그들은 우리나라에서 위사람들이 자기 직원들을 집으로 초대해 식사대접을 하고 연말이나 정초

에 사람들을 불러모아 노는 美風良俗(?)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독일인들은 시간과 공간상으로 칸막이가 철저하다. 이런 그들에게 문제는 정보의 흐름이다. 칸막이 때문에 동료간·내부단위 조직간에 흘러야 할 정보가 칸막이 속에 갇혀 있다면 일이 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사회경제가 원활히 굴러갈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시간·공간적으로 열린 데서 지내기 때문에 눈치로 한몫 잡는 경우도 있고 의사소통이 정확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매우 빠른 것은 사실이다. 이에 비해 독일인들 사이의 정보채널은 매우 협소하고 잘 정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쉽게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독일인들이 매우 폐쇄적이며 규칙에 너무 엄매이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다른 말로 하면 대부분의 서양인들이 그 부류에 속하지만 독일인들은 특히 더 저밀적 문화(low-context culture)에 속한다. 즉, 그들이 실제 의사소통에 쓰는 정보는 매우 정교하고 자세하다. 때문에 계약서도 우리가 볼 때 쓸데없이 길며, 말도 많아야 정확한 의사전달이 된다. 우리처럼 상사의 눈치만 보고도 의도를 정확히 짚어 내고, 상사의 속을 꿰뚫는 慧眼이 필요하지도 않고 통하지도 않는다.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들의 정보요구와 의사소통 방식대로 매우 자세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그들을 상대해야 할 것이다.

독일인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기본인식을 살펴봄으로써 독일인들이 왜 그렇게 철두철미하며 답답할 정도로 차분히 단계적으로 일처리를 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았다. 그들은 매우 공식적이며 또한 친구를 만드는 데 매우 느리다. 첫눈에 반하고 한번에 맘에 들어 친구가 되고 형님 동생이 되지 않는다. 또 그들은 어떤 물건을 공유하거나 빌려 쓰기를 좋아하지 않고 전용을 원한다. 이런 것들도 이해가 갈 만하다. 우리가 쓸데없이 오해하여 그들을 교만한 독일인, 건방진 친구, 불친절한 민족으로 매도하고 스스로 소외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안정기조 속에 성장활력의 회복이 필요한 때

한승희

경제기획원 동향분석과 사무관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91년부터 안정기조의 회복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최근 들어서는 지난 수년간 과열양상을 보였던 內需가 진정되면서 성장률의 저하라는 調整期的 代價를 치르고 있으나 물가와 국제수지가 큰 폭으로 개선되었고, 과거 수년간 사회전반에 만연되었던 투기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도 크게 해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물가는 안정화시책 등의 추진에 힘입어 현저히 안정

우선 물가는 91년 하반기 이후 추진해온 경제안정화 시책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농수산물 작황이 호조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주요수입 원자재가격이 하락됨으로써 91년보다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의 소비자물가는 전년말 대비 4.5% 상승에 그쳐 최근 6년내 가장 안정되었

다. 농수산물이 과실류 및 수산물의 출하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91년의 12.7%에서 1.4% 하락으로 돌아섰으며, 서비스부문도 집세 및 개인서비스료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어 물가안정에 기여하였다.

생산자물가도 전년말 대비 1.6% 상승하는 데 그쳐 최근 3년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工產品이 국내 유가조정 등의 영향으로 91년보다 다소 높은 상승률을 시현하였으나, 농수산물이 채소류·과실류 등의 작황호조로 91년의 6.9% 상승에서 1.3% 하락으로 반전됨으로써 물가안정에 기여하였다.

또한, 부동산가격도 뚜렷한 진정세를 보였다. 住宅賣買價格은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시책과 주택물량의 공급확대에 따른 수급안정에 힘입어 그 하락률이 91년(-0.5%)보다 확대된 -5.0%로 나타났다. 주택전세 가격은 이사철 성수기(3월 및 9월)에 오름세를 보여 91년의

2.0%보다 높은 7.5%의 상승률을 시현하였으나, 10월 들어 0.2%의 소폭 상승에 그친 데 이어 11월과 12월에는 각각 0.5%와 0.9% 하락하는 등 안정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土地價格도 작년 연간으로 1.3% 하락하였다.

국제수지도 수입 둔화에 힘입어 크게 개선

對外去來面에서 보면, 92년중 수출은 전년 대비 6.8% 증가한 767억8천만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수입은 설비투자부진 등 내수둔화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0.2% 증가한 817억달러에 그쳤다. 이에 따라, 輸出入差는 91년의 96억5천만달러 적자에서 지난해에는 49억2천만달러 적자로 47억3천만달러가 개선되었다.

지난해 L/C 來到는 전년 대비 4.7% 증가한 반면, I/L 發給은 10.5% 감소하여 최근의 국제수지 적자 개선을 설명해

주고 있다. 92년 1~11월중 수출입차를 地域別로 보면, 동남아 및 중남미지역과의 교역에서는 각각 72억달러와 22억4천만 달러의 黒字를 보였으나 미국·일본·EC 등의 지역에서는 계속 赤字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출입 내용을 살펴보면, 수출은 화공품·반도체·철강제품·자동차 등 重化學工業製品이 수출증가를 주도한 반면, 신발·석유제품·완구 등 輕工業製品은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輸出商品構造面에서도 석유화학제품·반도체·철강·직물 등 部品·素材의 수출비중이 86~88년간 매년 28.3%이던 것이 지난해 상반기중에는 41.6%로 크게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地域別로는 ASEAN·중국 등 아시아개도국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일본·EC 등

선진국에 대한 수출은 우리나라 노동집약적 상품의 가격경쟁력 약화와 이들 국가의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수입둔화로 감소한 반면, 對開途國 수출은 동남아·중국·중남미 등의 경제개발 수요확대와 수출용 수입증가에 따라 호조를 보였다.

수입은 원자재와 기계류의 수입비중은 낮아진 데 비해, 소비재의 수입비중은 높아졌다. 원자재 수입비중이 감소한 것은 수입원자재 가격의 하락, 석유화학제품 등의 수입대체 진전, 건설경기 진전에 따른 철강수입 감소 때문이며 기계류는 국내 설비투자의 부진 등으로 그 비중이 낮아졌다.

소비재 수입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수입개방 확대 및 물가안정용 농축수산물의 수입증가와 동남아·중국 등 현지진출 기업으로부터의 의류 등 소비재수입이 늘어난 데 기인한 것으로 분

석된다.

자금사정도 점차 호전

경제안정화의 효과는 資金市場에서도 나타나 市中實勢金利는 91년말의 19%대에서 92년 말에는 13~14%대로 하향안정되었으며, 금년 들어서는 12~13%대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업설비투자 및 건설투자의 진전에 따른 기업자금수요의 둔화, 원활한 자금공급, 부동산가격의 안정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어음不渡率은 지난해 3월 이후 상장법인업체의 부도발생과 대도시 지역의 섬유·신발·건설 등 일부 영세 및 한계기업의 도산으로 91년에 비해서는 높아졌으나, 10월 이후부터는 자금사정의 개선을 반영하여 점차 낮아지고 있다.

會社債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채권발행 종합관리에 따라 발행물량이 규제되어 순발행규모가 크게 축소되었으며, 주식발행에 의한 자금조달도 증시침체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株價 역시 상장회사의 부도발생 등 주식투자환경의 악화로 하락세를 유지하다가 증시안정화조치(92년 8월 24일) 및 시장금리의 하락 등으로 작년 8월말 이후 점차活力을 되찾아 가고 있다.

〈표 1〉 물가상승률 추이

(비전년말, 단위 : %)

	87년	88년	89년	90년	91년	92년
소 비 자 물 가	6.1	7.2	5.0	9.4	9.3	4.5
생 산 자 물 가	2.6	2.3	7.2	7.2	1.9	1.6

〈표 2〉 수출입동향 비교

(단위 : 억달러, %)

	91년	92년
수 출 (A)	718.7(10.5)	767.8(6.8)
수 입 (B)	815.2(16.7)	817.0(0.2)
수 출 입 차 (A-B)	-96.5	-49.2

註 : 괄호 안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임.

구조조정 속에서 설비투자 성장률은 둔화

實物經濟面에서는 산업구조가 內需와 노동집약적 산업중심에서 수출 및 기술집약적 산업중심으로 전환되는 構造調整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다만, 전체 실물경제를 보면 92년 상반기까지는 비교적 건실한 신장세를 유지하였으나, 3/4분기에 들어서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세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4/4분기 중에도 건설투자활동을 제외한 설비투자 및 소비 등 내수의 둔화추세가 이어진 데다 기업의 재고조정에 따른 생산감축 등으로 지난해 11월중에는 産業生産이 전년동월 대비 1.4% 감소하였으며, 제조업평균가동률도 72.8%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특히 내수관련기업과 중소기업 등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경제성장률은 작년 3/4분기에는 2/4분기의 5.9%에서 3.1%로 낮게 나타났다.

으며, 1/4~3/4분기 전체로도 5.4%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안정기조 속에 성장잠재력 배양해야

현재 우리 경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때, 과열경기의 거품이 해소되면서 안정기반 구축의 전기는 마련되었으나, 최근 수년간 구조적 요인에 의해 약화되어 온 경쟁력의 회복은 미흡한 것으로 보여진다. 물가는 상승률이 크게 둔화되었으나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금상승에 따른 원가상승 요인과 계절적 요인에 따른 농산물 가격의 불안 등 인플레이 재발요인이 남아 있어 지속적인 안정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設備投資의 감소는 그동안 인력난과 고임금, 고금리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생산성 향상과 기술개발 등 적응 노력이

뒷받침되지 못하여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데다, 수요둔화가 가세되어 기업의 채산성이 나빠진 데 그 배경이 있다. 수출도 증가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이는 주로 구조변화·다변화에 힘입은 것으로, 중국·멕시코·동남아제국 등 後發開途國의 추격에 따른 미국·일본 등 先進國市場에서의 점유율 감소를 감안할 때 경쟁력 회복이 뒷받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상황에서는 종래와 같은 높은 성장률을 실현하는데 집착하기보다는 구조적인 물가안정과 투기요인 불식 등 구조적인 안정을 이룩해 나가면서, 자금 및 인력수급·기술·정보 등에 있어서의 근원적인 成長潛在力 요인들을 배양해 나가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가령, 통화증발에 의한 수요창출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인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보다는 결국 물가불안·투기심리를 부추겨 우리 경제를 거품경제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장래의 성장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배양해 나가기 위해서는 작년 들어 둔화추세에 있는 설비 및 기술개발 투자를 촉진하고, 자금수급과 산업인력 공급을 원활히 하여 금리·임금 등 要素費用을 안정시켜 나가는 데 역점을 두어야겠다. 

〈표 3〉 시중실세금리 추이

(단위 : %)

	89년12월	90년12월	91년12월	92년3월	6월	11월	12월	93년1월14일
회 사 채	15.38	18.51	18.98	17.70	17.12	13.39	14.00	13.60
통안증권	14.63	16.80	17.60	16.40	16.46	13.52	14.11	13.70
콜 금 리	14.17	15.01	17.44	14.96	14.87	13.21	13.52	12.12

〈표 4〉 어음부도율 추이

(금액기준, 단위 : %)

	90년	91연간	91년10월	11월	12월	92연간	10월	11월	12월
전 국	0.04	0.06	0.08	0.08	0.08	0.12	0.17	0.16	0.14

주요 선진국 통화간 환율 동향과 전망

안중조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금년에 달러貨는 미국의 성장 회복과 미국과 독일간 금리격차 축소 등에 따라 EC 회원국 통화들에 대해 강세가 예상되나, 엔貨에 대해서는 일본의 무역흑자 확대추세 등을 반영해 현재와 같은 약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달러貨가 이처럼 마르크貨 등에 대해 더 큰 폭으로 절상됨으로써 엔貨는 93년중 EC 회원국 통화들에 대해서도 강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마르크貨의 폭등으로 초래된 유럽통화제도(EMS)의 긴장상태는 하반기부터나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달러貨, 92년중 일본 엔貨에 대한 약세가 두드러져

91년 6월말 달러당 138엔, 1.8마르크로 치솟았던 달러貨는 그 이후 미국의 경기악화와 대폭적인 금리인하로 인해 폭락세가 이어졌다. 달러貨의 약세현상은 G7의 엔貨 강세 합의결과 독일

의 금리인상과 맞물려 더욱 가속화되었는데 91년말에서 92년 초까지는 대체로 달러당 125엔, 1.5마르크대에서 등락하였다. 92년 1월말부터 5월 중순 사이에는 미국의 경기회복 기대, 일본의 주가폭락, 독일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등에 따라 달러貨가 주요 통화에 대해 회복세로 돌아서 달러당 131~134엔, 1.62~1.66마르크대에서 변동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경기부진이 계속되고 미국과 독일간 금리차가 최고 6.5%포인트나 벌어져 달러貨 가치는 5월 중순 이후 다시 급락하기 시작하였다. 미국·독일·영국 등 선진 15개국은 이러한 달러貨 약세에 대처하기 위해 7~8월중 달러貨 지지 외환시장 개입을 네차례 이상 되풀이하고 백악관 대변인도 미국이 더 이상 달러貨 약세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성명을 이례적으로 발표하였지만 뚜렷한 성과를 얻지는 못하였다. 더욱이 9월 초에는 독일의 금리인상

과 미국의 금리인하로 금리차가 계속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류를 이루어 달러貨는 마르크貨에 대해 달러당 1.39마르크로 급락하였고, 이로 인해 유럽통화제도(EMS) 내에서 마르크貨 강세에 따라 자국통화 가치방어가 어려워진 여타 유럽국들과 독일간의 갈등과 긴장은 심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美 대통령선거가 종결된 다음부터는 민주당 클린턴후보의 당선에 재정적자 확대 및 경기회복과 금리상승을 가져올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해져 달러貨가 유럽통화들에 대해 일제히 큰 폭으로 반등하고 있으나, 엔貨에 대해서는 일본의 무역흑자누증 등의 영향으로 달러당 122~124엔대에서 유지되고 있다.

엔貨는 유럽의 통화위기 이후에도 강세

엔貨는 달러貨에 대한 절상과 더불어 92년 하반기부터는 마르

크貨를 포함, EC회원국 통화들에 대해서도 대폭 절상되고 있다. 엔貨가 이처럼 주요통화에 대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첫째, 92년 9월 이후 달러貨의 EC 통화들에 대한 절상률이 엔貨에 대한 절상률에 비해 높았고 둘째, 주가와 지가 하락의 영향으로 일본 금융기관들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해외투자 자금이 환류되어 왔으며 셋째, 對EC 교역에서의 무역흑자 증대와 환율조정기구의 환율 불안이 엔貨의 강세요인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이다.

92년 12월 24일 현재 엔貨의 환율변동을 기준시점별로 비교해 보면 91년말에 비해 독일 마르크貨, 프랑스 프랑貨, 스위스 프랑貨 등에 대해 6~8%, 환율조정기구에서 벗어나 있는 영국 파운드貨와 이탈리아 리라貨에

대해서는 24~25%의 절상률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유럽통화제도의 환율 불안이 극심했던 9월초와 비교해 보면 현재 마르크貨와 프랑스 프랑貨에 대해 13~14%, 파운드貨와 리라貨에 대해서는 무려 30~33%의 절상률을 기록, 92년 하반기 들어 엔貨의 절상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유럽통화제도의 환율 불안은 아직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마르크貨는 92년 상반기중 유럽통화제도 회원국 통화들에 대해 대체로 안정세를 보였으나 덴마크가 6월 유럽통화동맹(EMU)에 관한 조약 비준에 실패한 다음부터 이탈리아 리라貨, 스페인 페세타貨 등 이른바 고금리 통화들에 대해 일제히

강세로 바뀌었다. 9월부터 10월 초 사이에는 EC의 금융·통화통합을 둘러싼 논란 속에 달러貨의 약세마저 겹쳐 마르크貨는 유럽통화제도 회원국 통화들에 대해 폭등세를 거듭하였고, 급기야는 파운드貨와 리라貨가 환율조정기구에서 탈퇴하는 사태로까지 악화되었다.

유럽 각국은 마르크貨의 초강세로 비롯된 이같은 통화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시장개입, 금리조정, 약세통화들에 대한 환율조정 등의 조치를 단행하고 있지만 마르크貨는 92년 12월 24일 현재까지도 베네룩스 3국의 통화를 제외한 거의 모든 유럽통화제도 회원국 통화들에 대해 환율변동 상한선 부근에서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달러貨, 유럽통화들에 대해서는 강세로 전환될 전망

앞으로 달러貨는 주요통화에 대해 차츰 회복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미국경제가 그간의 금융완화와 달러貨 약세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회복이 예상되는 반면, 독일을 비롯한 EC 경제는 80년대 후반 이후의 금융긴축의 효과가 누적되어 나타나면서 성장세가 급속히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미국은 경기회복과 함께 안정성장이라는 장기적인 정책목표를 위해 93년 하반기 무

〈표〉 주요통화의 실효환율과 실질실효환율 비교
(85=100, 평균환율 사용)

	일본엔화			독일 마르크화			한국 원화		
	¥/\$	실효환율 지수	실질실효 환율지수	DM/\$	실효환율 지수	실질실효 환율지수	₩/\$	실효환율 지수	실질실효 환율지수
85년	238.5	100.0	100.0	2.944	100.0	100.0	806.0	100.0	100.0
86년	168.5	73.6	79.3	2.172	74.2	78.8	870.0	118.6	114.7
87년	144.6	65.6	75.0	1.797	66.5	67.2	881.5	120.7	116.1
88년	128.2	59.0	70.7	1.756	64.1	67.2	822.6	114.5	109.3
89년	138.0	62.6	76.7	1.880	71.6	72.5	671.5	100.9	98.4
90년	144.8	67.9	84.0	1.616	63.3	68.8	707.8	105.7	101.7
91년	134.7	62.9	78.0	1.660	65.6	67.0	733.4	113.0	103.6
92.5	130.6	63.4	78.6	1.621	64.1	69.8	782.8	120.9	107.0
12.24일	123.7	59.7	—	1.599	59.8	—	789.4	129.3	—

註: 85년 환율을 균형으로 전제할 경우 비교시점의 실효환율/실질실효환율지수가 100보다 작으면 고평가, 100보다 크면 저평가를 나타냄.

자료: AP-DJ

렵부터 소폭적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반해, 일본·독일·영국·프랑스 등은 상반기중에 경기조절을 위한 금리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결과 90년 하반기 이후 달러貨 약세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 온 美·日 간 단기금리의 역전현상이 금년 중에는 미국의 금리우위로 뒤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미국과 독일간의 금리격차도 큰 폭으로 좁혀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요인에도 불구하고 달러貨가 엔貨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약세권에서 크게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금년에도 일본의 무역흑자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일본경제가 재정 및 금융정책면에서의 경기진작 대책으로 금년 상반기를 고비로 완만한 속도로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보호주의 색채가 강한 민주당 클린턴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미국이 무역흑자국들에 대해 통상압력과 병행하여 통화절상 압력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고 엔貨 가치를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일본의 시장개입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 역시 달러貨의 엔貨에 대한 강세반전을 어렵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달러貨는 이에 따라 금년중

마르크貨에 대해서는 달러당 1.6~1.7마르크대에서 강세가 예상되나, 엔貨에 대해서는 대체로 달러당 125~130엔대에서 등락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일본은 美·日 간 금리격차 확대 등으로 달러당 130엔선이 위협받게 될 경우 금리를 앞당겨 조정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유럽통화제도의 긴장상태는 하반기부터나 완화될 듯

엔貨는 금년중 마르크貨·파운드貨 등에 대해서도 꾸준히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독일·영국·프랑스 등이 금리를 비교적 큰 폭으로 내릴 전망이다. 데 반해서 일본은 금년 하반기경부터 버블 재현 가능성 등을 우려해 금리를 소폭이나마 인상할 가능성이 높고, 달러貨가 엔貨보다는 마르크貨 등에 대해 더 큰 폭으로 절상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가수준을 고려한 실질금리면에서 보면 일본금리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어서 엔貨가 유럽통화들에 대해 현재보다 더 절상되는 데에는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엔貨의 對마르크貨 환율이 금년중에도 저항선으로 인식되고 있는 마르크당 75엔선 이하로 하락하기는 어려운 전망

이어서 달러貨의 마르크貨에 대한 절상폭이 커질수록 엔貨의 달러貨에 대한 절하압력도 가중될 공산이 크다.

독일은 미국경제의 성장회복이 가시화되는 시점부터 경기악화 등으로 인해 금리를 낮추기 시작할 것으로 보여 마르크貨는 금년에 달러貨에 대해 약세로 기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마르크貨와 여타 유럽통화제도 회원국 통화간 환율에 큰 영향을 미쳐 온 마르크貨의 對달러 환율이 대체적으로 달러당 1.6마르크를 웃도는 선에서 변동하더라도 마르크貨의 유럽통화들에 대한 강세 국면이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프랑스의 총선, 금년 상반기로 예정된 덴마크와 영국의 마스트리히트조약 비준을 위한 투표, 그리고 이탈리아 리라貨의 환율조정기구 복귀 등을 전후하여 마르크貨와 베네룩스 3국의 통화 등이 유럽통화제도의 약세통화들에 대해 평가절상되는 환율조정 문제가 재거론되면서 환율불안이 재연될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르크貨는 이로써 금년 상반기에 이탈리아 리라貨, 아일랜드 폰트貨, 포르투갈 에스쿠도貨 등에 대해 약 5~7% 추가로 평가절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에는 독일경제의 성장둔화와 금리인하, 달

러貨 회복 등에 따라 대부분의 유럽통화제도 회원국 통화들에 대해 중심환율 근처에서 점차 보합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파운드貨의 환율조정기구 복귀에는 난항 예상

영국은 독일의 고금리 정책과 유럽통화제도 운영상의 근본적인 문제점 등이 수정되지 않고서는 파운드貨를 환율조정기구에 복귀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파운드貨의 회복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더구나 70년대 초반 이후 처음으로 영국과 독일간 금리의 역전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마르크貨 등에 대해 환율변동 하한선보다 14~15%나 낮은 선으로 폭락

하고 있는 점은 파운드貨의 환율조정기구 복귀를 더욱 어렵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결국 마르크貨 등에 대한 평가절하가 선행되지 않는 한, 파운드貨의 환율조정기구 복귀가 가까운 장래에 실현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파운드貨는 금년중에 달러貨에 대해 파운드당 1.4~1.55달러, 마르크貨에 대해서는 파운드당 2.4~2.55마르크대에서 머무를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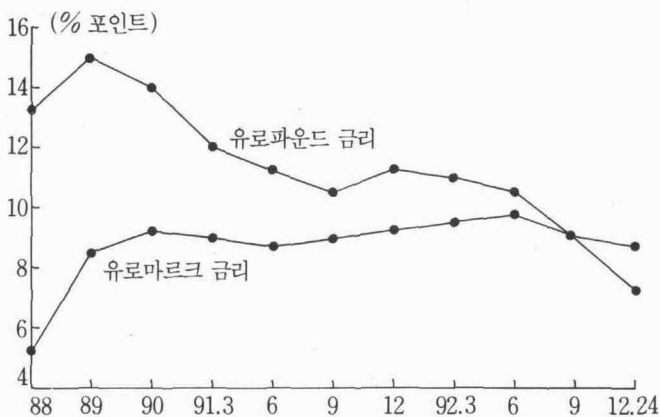
한편 마르크貨의 달러貨에 대한 약세로 인해 프랑스 프랑貨는 달러貨에 대해 금년중 동반 약세가 예상되나 실질금리·성장률·무역수지면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유럽통화제도 회원국 통화들에 대해서는 안정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

다. 이에 따라 프랑貨의 對달러 환율은 금년에 달러당 5.6~5.8 프랑선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對마르크화 환율은 하반기부터 중심환율 부근인 마르크당 3.36~3.38프랑선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통화들의 환율 급변동 가능성에 대비해야

국제외환시장에서 일본 엔貨가 주요통화에 대해 강세를 나타냄으로써 우리나라 원貨는 엔貨에 대해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약세권에 안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나 유럽통화들에 대해서는 환율변동폭이 다소 확대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따라서 원貨의 엔貨 등에 대한 약세가 자본재와 원자재의 수입비용 상승으로 연결되면서 제품가격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가격인상 요인을 흡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결제통화 선정 및 외화표시 자산·부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환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나라경제

〈그림〉 유로마르크 및 유로파운드 금리(3개월물) 변동추이



자료 : AP-DJ

현 景氣局面에 대한 評價와 대응과제



좌승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91년까지 일부 過熱現象을 보이면서 8~9%대에 머물렀던 경제성장률은 92년 상반기 들어 6.7%로 둔화된 데 이어 3/4분기에는 3.1%로 더욱 낮아졌다. 3/4분기중의 이 같은 성장급락은 수출이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투자 감소세가 이어진 가운데 설비투자까지 감소를 보이고 민간소비도 크게 둔화되는 등 內需가 크게 위축된 데 기인하였다. 또한 3/4분기의 급속한 생산둔화는 在庫가 91년 동기중 對 GNP 3.2% 증가에서 92년 3/4분기중 1.5%의 감소로 反轉되는 다소 이례적인 요인도 작용하였다.

이 같은 내수둔화와 정부의 경제안정화시책으로 92년 연초 이래의 안정화추세가 3/4분기중 더욱 가시화되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동기 대비 6.0%로 낮아지고, 경상수지적자폭도 전년동기의 18억5천만달러 적자에서 3억달러 흑자로 반전되었다.

92년 4/4분기중에도 우리 경제는 전체적으로 弱勢基調를 보이는 가운데, 성장률면에서는 3/4분기에 비해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그동안 강세를 보여온 수출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설비투자의 감소세가 이어지겠지만, 건설투자가 다소 회복되고 3/4분기에 크게 줄었던 재고투자가 다시 증가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大選 중 증폭된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선거 자체의 수행에 따른 경제에 대한 부정적 효과로 4/4분기의 성장이 의외의 부진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최근의 경제상황을 놓고 다각도의 해석과 정책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앞날에 대해서도 비판과 낙관이 교차하는 등 年中 내내 논쟁이 지속되어 왔다. 本稿에서는 현재의 우리 경제의 상황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전개방향에 대해 전망해 봄으로써 다소나마 우리 경제의 실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해 보고자 한다.

최근의 경기국면에 대한 평가

우선 최근의 이러한 성장둔화 현상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요인에 연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 경제는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노동집약적 구조에서 기술 및 자본집약적 구조로의 산업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있다. 지난 3低 好況과 최

근의 내수과열 경기국면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단위 노동비용은 상대적으로는 물론 절대적으로도 경쟁국들에 비해 이미 너무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신흥공업국 그룹이나 日本 등 기존의 경쟁국들과는 물론 중국이나 동남아국가들과 같은 開途國들과의 경쟁에 있어서도 크게 열세를 면치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속에서 최근의 경기안정화시책은 궁극적으로는 임금의 상승과 그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을 적정수준에 유지시킴으로써 기업들의 구조조정부담을 완화시키고 나아가서는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처방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긴축적 총수요관리정책은 고임금과 인력난 속에서도 그나마 생산라인의 가동을 지탱해 주던 過熱需要의 축소를 불가피하게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구조조정의 어려움 속에 있는 기업들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할 것이다. 성장의 급락현상도 바로 이러한 장기구조적 측면의 어려움과 단기적으로는 總需要減縮에 따른 경기조절적 측면의 어려움이 함께 가중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현재의 경제상황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일부에서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자체가 소진되었다고 보기도 하지만, 우리 경제는 중장기적으로 구조조정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는 하나 성장잠재력 자체가 크게 낮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 한 나라 경제의 潛在成長率이란 인플레이를 수반하지 않고 그 경제가 공급할 수 있는 노동과 자본의 완전고용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최대가능 성장률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추정방법에 따라 상이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7~8% 수준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경제의 要素供給部門에 큰 애로가 발생하지 않는 한 短期에 있어 크게 가변적일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현재의 우리 경제는 오히려 주어진 성장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임금 및 금리 등 가격변수를 포함한 시장여건이 미비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의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능력을 결정하는 주어진 노동력과 자본재 공급능력하에서 실제생산이 잠재성장능력을 초과함에 따라 이들 요소에 대한 수요가 지나치게 높아 고임금과 고금리현상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실제생산이 이러한 새로운 시장여건에 부응하여 당분간 잠재성장 이하로 적응해 가는 과정에 있다고

일부에서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자체가 소진되었다고 보기도 하지만, 우리 경제는 중장기적으로 구조조정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는 하나 성장잠재력 자체가 크게 낮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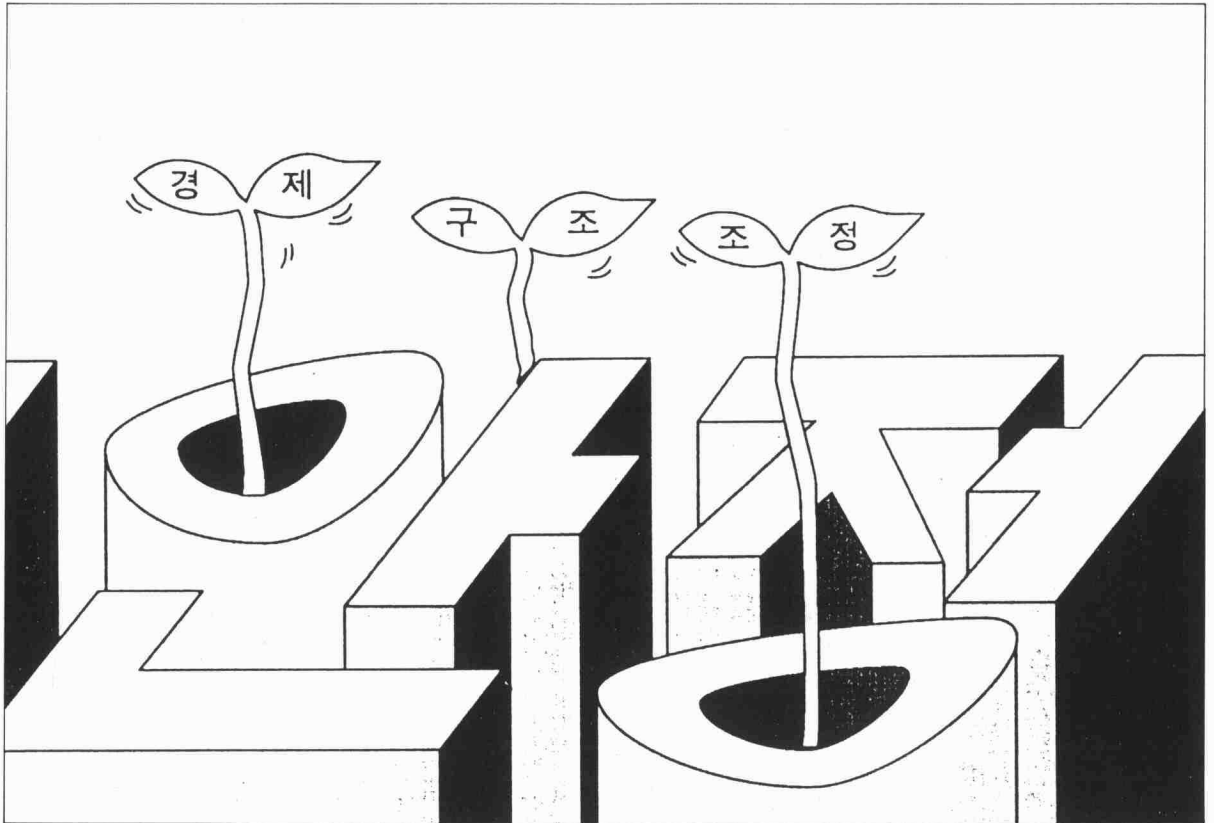
.....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적응과정을 景氣調整過程이라고 한다면, 이 과정을 거쳐 임금과 금리가 잠재성장의 실현에 적합한 수준으로 조정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경제의 생산구조도 새로운 資金·金利構造에 부응하여 조정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실제성장이 잠재성장수준을 회복하게 되는 과정을 구조조정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안정추세, 우리 경제 구조조정에 기여

따라서 현재의 성장둔화는 바로 잠재성장률을 회복하기 위한 구조조정은 물론 경기순환의 불가피한 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7~8%의 잠재성장률이 92년중 예상되는 5% 수준의 성장이나 93년중 예상되는 6%대의 성장률보다 더 바람직한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러한 잠재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어려운 低成長過程을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 바로 현 경제상황의 아이러니가 아닌가 한다. 경기순환과 구조조정이 분리된 현상이라기보다는 경기순환이 바로 경제의 구조조정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의 안정추세가 경제의 모든 부문에 확산되고 확실하게 정착됨으로써 物價·資金·金利가 안정되는 것이 바로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을 도와주는 길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우리 경제는 年中의 감속성장에 힘입어 86년 이후 지속되어 온 資源의 過雇用(over-utilization) 상태에서 벗어나 연중 초과수요압력을 상당 정도 해소하고 경제의 장기잠재성장경로로 접근해 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히 물가상승세가 큰 폭으로 둔화되어 앞으로 고임금추세의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국제수지적자도 꾸준



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경기순환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 경제는 4/4분기중에 경기의 低點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올해 상반기를 지나면서 완만한 회복국면으로 들어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의 정책과제와 대응방향

이와 같이 지금까지의 안정화시책의 추진과 그에 따른 경제의 안정화가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을 위한 필요한 과정이라고 본다면, 앞으로도 당분간은 현재와 같은 안정정책기조를 견지해 나가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의 물가안정 및 국제수지 개선추세가 경제의 안정성장 기반이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失業率이 매우 낮아 인력난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임금상승률도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어서 안정기조가 완전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70년대의 높은 인플레이를 치유하여 물가안정을 정착시키는 데에도 79년에서 82년에 이르는 4년 정도의 안정화노력이 필요하였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안정기조의 유지는 당장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家計·企業 및 경제 전반의 체질을 강화해 나가는 데 필수적임을 인식해야 한다. 즉 인위적인 환율조정이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나라 수출이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가안정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며, 물가안정이 장기적으로 유지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부동산가격 및 임금과 금리가 안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계의 소비 및 저축활동과 기업의 투자활동의 안정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안정기조하에서만 저성장에 대응하는 경영합리화 및 구조조정노력이 지속됨으로써 경제체질이 강화될 수 있다. 더구나 올해초 新政府가 들어서면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새로운 경제개혁조치들이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안정성장 기반의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통화·재정정책의 안정적 운용 통해 안정정책기조 견지해야

한편 안정화정책의 추진을 위한 巨視安定政策의 운용방식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안정화추세가 주로 건

축규제 등 각종 직접규제 및 관리에 의해 주도되어 왔음을 감안할 때, 앞으로 안정성장 기반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通貨·財政政策의 안정적 운용을 통하여 안정정책기조를 견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재정운용의 경우는 이미 93년 예산이 확정되었으나 재정지출의 효율화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통화의 운용과 관련해서는 통화증가율을 92년에 비해 상당폭 낮추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상반기에는 다소 높은 증가율을 적용하되 점진적으로 하향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연중 기대되는 금리자유화에 따른 통화지표상의 변동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소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설비투자 확충 위해 투자여건 개선해야

안정성장기반의 구축노력과 동시에 성장잠재력의 꾸준한 배양을 위해서 투자를 적정수준에 유지하고 그 내용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도 요구된다 하겠다.

이미 지적인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경제는 고임금구조하에서 국제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노동집약적 산업구조에서 자본 및 기술집약적 구조로의 산업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술개발과 자동화를 위한 投資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의 규모를 적정수준에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의 내용 또한 기술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보다 효율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자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투자심리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정부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유지됨으로써 민간으로부터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와 동시에 그동안 제조업의 對外競爭力 약화와 투자여건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해 온 노동공급의 애로와 높은 임금상승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또한 대단히 긴요하다 할 것이다.

투자심리의 안정화와 동시에 설비투자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金利自由化와 직접금융의 확충 등을 통한 금융공급체계의 효율화와 중소기업금융의 활성화, 건설투자규모의 적정화, 효과적인 不動產政策을 통한 자금흐름의 개선 등 투자여건을 개선하

지금까지의 안정화시책의 추진과 그에 따른 경제의 안정화가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을 위한 필요한 과정이라고 본다면, 앞으로도 당분간은 현재와 같은 안정정책기조를 견지해 나가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그동안 추진되어온 각종 설비금융지원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절차간소화, 신용대출의 확대 등 보완책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와 같이 경제의 거품이 거의 제거되어 가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경제내의 미세한 비효율도 바로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經濟規制의 철폐 등 과감한 경제자유화를 통하여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높여주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은 경제의 안정화와 설비투자의 확충이라는 두가지 정책목표는 자칫하면 서로 상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거시경제의 안정화는 기본적으로 설비투자의 효율화와 같은 微視政策의 효과가 제대로 발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그 본래의 의의가 있기 때문에, 경제안정화에 역행하는 투자활성화조치는 경제의 안정을 해칠 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의도된 정책효과마저도 가져다 줄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투자의 확충을 위한 금융공급정책이라 하더라도 경제안정화에 역행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金融再配分政策을 통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본지

공정한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한 特殊賣場대책



김익만

상공부 유통산업과장

최근 유통시장의 개방폭이 점차 확대되면서 유통 부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외국 유통업체들의 국내 진출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정부에서도 국내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고 있다.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보완대책으로는 物流施設의 확충, 유통정보화의 촉진 등과 같이 국내 유통업체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무자료상품의 근절, 특수매장 운영의 정상화와 같은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한 대책도 매우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수매장의 운영 정상화 시급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한 대책 중 특수매장 운영의 정상화는 유통업체의 입장에서는 매우 절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고, 또 관계부처간에도 입장이 대립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다.

먼저 特殊賣場이라 함은 농협슈퍼·연쇄점, 공무원연금매점 등 ‘공공법인이 운영하는 판매장’을 일컫어 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다. 이러한 특수매장에는 농·수·축협슈퍼 및 연쇄점, 공무원연금매점, 사학연금매점, 지하철공사매점, 韓電賣店 등 다수가 있으나 가장 매장수가 많고 활동이 왕성하여 중소상인들의 주요 민원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농협슈퍼·연쇄점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공공법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법인세 경감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것이 불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여 중소상인들의 민원을 야기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주로 문제시되고 있는 농협슈퍼·연쇄점과 공무원매점의 매장수를 보면 92년 9월말 현재 농협슈퍼는 149개, 농협연쇄점은 2,011개, 공무원매점은 99개이다. 이들 특수매장은 89년 商工部가 ‘중소상업관련 민원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90년에는 그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바 있으나 91년 이후에는 농협슈퍼·연쇄점을 중심으로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정 경쟁여건 저해하는 특수매장

이와 같이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특수매장의 근

본적인 문제점은 경제의 각 부문에서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해야 할 정부가 스스로 불공정한 경쟁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특수매장에 대한 租稅支援은 공공법인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농어민 등 특정부문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로 인해 특수매장과 일반 유통업체 간에 불공정한 경쟁이 초래되어 일반 유통업체들은 영업상 큰 타격을 입고 있으며, 농·수·축협은 경우 상대적으로 용이한 도시지역에서의 공산품 판매에 주력하여 당초의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유통부문에서의 불공정한 경쟁여건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고 특수매장의 영업활동을 그 설립취지에 맞게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의 폐지가 불가피하다.

.....

附價稅 면세 등으로 가격경쟁력 우위 가져
먼저 공정한 경쟁여건을 저해하고 있는 점을 살펴보면, 91년 슈퍼마켓·연쇄점 등 일반 종합소매점의 순이익은 매출액의 1.3%에 불과하나 특수매장에 대한 면세효과는 1.41%에 달해 일반 유통업체들이 이윤의 축소를 통해 특수매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효과를 극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免稅 하나만으로도 특수매장이 일반유통업체들로서는 현실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가격경쟁면의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특수매장들은 중앙회 또는 본부를 중심으로 제조업체와 직거래를 하고 있고 대량구매에 의해 구입경비의 절감이 가능하여 부가가치세 면세효과를 제외하더라도 일반상점에 비해 가격경쟁면에서 월등히 유리하다.

실제로 상공부가 92년 11월중 業界를 통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특수매장의 판매가격은 일반상점과 비교할 때 품목에 따라 크게는 32.7%까지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주요 공공법인 매장수 추이

(단위 : 개)

	89년		90년		91년		92년 9월	
				증감		증감		증감
농 수 협	슈퍼	피점	34	37	3	95	58	149
			1,927	1,943	16	1,975	32	2,011
공무원매점			103	101	-2	101	-	99
								-2

〈표 2〉 종합소매업의 순이익 및 부가가치세 면세효과 비교

(단위 : %)

	당기순이익	부가가치율	부가가치세 면세효과
매출액 비중	1.3	14.1	14.1×10=1.41

자료 : 한국은행, 「한국기업경영분석」 1992

〈표 3〉 특수매장과 일반상점간의 판매가격 비교

상품군	일반 상점의 판매가격에 대비한 특수매장 가격지수	
	공무원 매장	농협매장
음료수	75.6~97.2	78.8~96.7
화장지	85.9~93.3	69.6~98.1
조미료	81.1~91.7	83.1~100.0
주 류	67.3~88.9	67.3~92.2
과 자	83.3~94.4	88.9~94.4
기 타	86.3~103.5	78.8~102.2

註 : 특수매장 가격지수 = (특수매장가격 / 일반상점가격) × 100

특수매장 신설로 인근 상점 경영난

이와 같이 특수매장이 일반상점에 비해 월등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에 따라 특수매장이 새로이 신설되는 경우 인근의 기존 상점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현재 전체 소매점의 약 91%를 차지하는 생계형 중소상인(종사자 2인 이하 점포)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공산품 유통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일반유통업체(중소상인)의 피해 사례를 보면, 경상북도 店村市의 경우 86년 40평 규모의 農協 연쇄점이 개설됨에 따라 기존에 영업중이던 10여 개 일반 슈퍼 중 현재 매장면적이 비교적 큰 2개 점포만이 영업중이며, 聞慶地域의 경우에도 86년 농협 연쇄점이 신규 出店함에 따라 전체 9개 읍·면에 일반 슈퍼는 3개만이 영업중이고 91년에만도 2개 슈퍼가 문을 닫은 바 있다.

또 서울시 상계동의 경우 89년 3월 농협슈퍼 상계점이 개점되어 공산품을 다수 취급함에 따라 인근 점포의 매출액이 50%가량 감소하였으며 서울시 전동



동의 경우에도 일반상점의 평균면적이 20평 정도인데 반해, 90년 10월 약 80평 규모의 농협매장이 새로 들어섬에 따라 일반상점의 매출액이 평균 30% 정도 감소한 바 있다.

이상의 사례들은 상공부가 짧은 기간에 관련단체를 통해 조사한 것이므로 한계가 있으나 중요한 것은

전국 어느 곳에서나 특수매장이 대규모의 체인조직과 저렴한 판매가격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부가세 면세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한편 농·수·축협 슈퍼 및 연쇄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농·수·축협 연쇄점이 농어민이 거의 거주하지 않는 도시지역에 위치하여 당초의 설립취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농·수·축협의 설립근거법인 農業協同組合法 등에 의하면, 농·수·축협의 목적사업에는 회원인 농어민이 생산한 농·수·축산물의 ‘판매사업’과 회원이 필요로 하는 생필품(공산품)의 조달을 위한 ‘구매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농협의 경우 ‘판매사업’을 위한 판매장은 ‘슈퍼마켓’으로 ‘구매사업’을 위한 판매장은 ‘연쇄점’으로 구분하여 부르고 있다. 이러한 구분에 의하면 농협슈퍼는 그 판매목적물이 농·수·축산물에 국한되어야 하며 판매대상은 농어민 이외의 사람이므로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것이 타당한 반면, 농협연쇄점은 그 販賣目的物에 공산품이

〈표 4〉 농협슈퍼와 농협연쇄점의 구분

	농협슈퍼	농협연쇄점
목적사업	판매사업	구매사업
판매목적물	회원이 생산한 농·수·축산물	회원의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판매대상	농어민 이외의 자	농어민
소재지	도시지역	읍·면

〈표 5〉 농협연쇄점의 소재지별 분포추이

(단위: 개, %)

	88년	90년	증감	증가율
시	202	257	55	27.2
읍	241	236	-5	-2.1
면	1,444	1,450	6	0.4
계	1,887	1,943	56	3.0

포함되는 것은 불가피하나 어디까지나 회원을 위한 '구매사업'인만큼 회원인 농어민이 다수 거주하는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것이 그 목적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89~90년의 2년간 농협연쇄점의 소재지별 분포 추이를 보면, 동기간중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연쇄점은 55개소 증가(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증가치 35개소를 감안하더라도 도시지역에서 20개소 증가)한 반면, 面地域에 소재하는 연쇄점은 6개소 증가하는 데 그쳐 농협이 농어민이 생산한 농·수·축산물의 판매나 농어민이 필요로 하는 생필품 공급보다는 도시지역에서의 공산품판매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농·수·축산물의 경우, 판매자에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 세제상 농·수·축협이 일반 유통업체에 비해 가격면에서 유리한 요인이 없을 뿐 아니라, 재고처리비용이 높고 가공공정이 복잡하여 상대적으로 취급상 어려움이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91년 4월 상공부에 민원이 제기된 바 있는 論山畜協은 조합원이 전체가구의 5%, 논산농협은 조합원이 전체가구의 19%에 불과하였으며 92년 3월 민원이 제기된 바 있는 店村農協의 경우에도 농협조합원이 전체의 18%에 불과하여 농·수·축협 연쇄점의 주고객은 농어민보다는 일반소비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수·축협에 대한 부가세 면세혜택이 농어민에게 돌아가기보다는 농·수·축협의 수지보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수매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혜택 폐지 불가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통부문에서의 불공정한 경쟁여건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고 특수매장의 영업활동을 그 설립취지에 맞게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의 폐지가 불가피하다.

유통질서의 확립은 유통산업의 현대화를 위한 선결요건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소매업은 제조업·음식업 등 다른 산업과는 달리 제3자가 생산한 제품을 가공과정 없이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서비스업으로서 가격경쟁이 가장 치열하면서도 부가가치가 낮아 그만큼 가격변동의 여지가 작은 산업이라고 할 수 있

특수매장에 대한 租稅支援은 공공법인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농어민 등 특정부문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로 인해 특수매장과 일반 유통업체 간에 불공정한 경쟁이 초래되어 일반 유통업체들은 영업상 큰 타격을 입고 있다.

.....

다. 따라서 전국 약 3천여개의 특수매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個個의 특수매장, 또는 그 수혜자인 농어민 등에 대한 혜택은 얼마되지 않으면서도 정상적인 流通機能을 담당하는 전체 80만 소매업체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한편 89년 이후 상공부에서는 관계부처와의 협조아래 특수매장이 설립목적에 맞게 판매사업을 영위하도록 일반소비자의 출입 통제, 영업장 이전, 주무부처장관에 대한 협조요청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 바 있으나 대부분 실효를 거두지 못하여 근본적으로 민원의 소지를 제거하고 특수매장의 영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세혜택의 폐지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특히 공무원매점·한전매점·지하철공사매점 등 대부분의 특수매장은 도·소매업진흥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그 판매사업이 설립취지에서 벗어날 경우, 시·도지사가 영업장 이전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최근 관련민원이 제기되고 있지 않으나, 농·수·축협은 都·小賣業振興法の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사실상 통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지원 없는 日本의 농·수·축협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농·수·축협에 대해 우리나라와 같은 세제혜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수·축협의 판매사업이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문란시키지 않도록 정부차원에서 적절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일본 農林水産省은 78년 8월 30일자 도도부현지사에 대한 公文에서 '농협협동조합 생활구매점포의 설치 및 운영의 적정화'를 위하여 점포설치에 수반되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합의 생활구매사업에 관하여 중소기업자의 이해를 얻도록 할 것을 지



시하고 있으며, 78년 6월 '농협구매점포기준 운영위원회'는 농협구매점포 운영기준의 하나로 조합원이 아닌 者의 이용 규제, 출점과 관련된 분쟁 회피 등을 들고 있다.

공평과세를 통해 공정한 경쟁 펼쳐야

조세정책의 측면에서도 특수매장의 판매 및 구매 사업에 대한 부가세 면세는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각종 조세제도가 개발과 성장을 위하여 공평과세의 기본원칙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정부문을 희생시켜 다른 부문을 조장하는 형태의 조세지원은 극히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중소기업조업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나 첨단기자재의 도입을 위한 관세감면조치 등은 다른 부문의 희생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며, 집행과정에서도 예상되는 여타부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세심한 보완대책이 선행되어 있으나 부가가치세가 판매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반소비세임에도 불구하고 특수매장에 대한 부가세 면세와 관련해서는 이

러한 보완조치도 결여되어 있는 실정이다.

우리와 같은 부가가치세제를 채택하고 있는 EC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市場秩序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EC 제6차 지령 제4조('Sixth Council Directive' Article 4)에서 '정부는 그 스스로가 납세의무자로 취급되지 않으므로써 중대한 경쟁상의 왜곡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에 한해 납세자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민간의 상업활동과 경쟁하지 않는 정부 자체의 활동에만 면세를 하고 정부업무대행단체(공공법인 : 농·수·축협,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에 대해서는 면세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비록 정부의 활동이라 하더라도 민간의 상업활동과 경쟁관계에 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공평의 견지에서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92년 12월 16일 附加價值稅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경제차관회의에서는 특수매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며, 93년 중 각종 조세감면조치에 대한 개편논의시 동문제에 대한 검토를 포함시키기로 한 바 있다. [한글]